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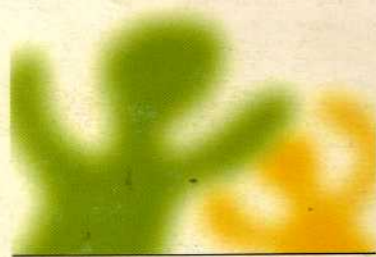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1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1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FAX) 02-741-5364 (TEL)

##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에 대한 조사가 원천이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  
에 보인다. 위민연 논의와  
되고 있다.  
3에 대한 논의가 예금된  
6월말경 이후. 그전까지  
기하는 '첫조치' '금기'였고,  
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출된 민주화 연기는 4-3  
을 본격화시켰고, 그 직  
후준히 계속되고 있다.  
원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대한 진실은 아직 일부에  
다수 양민들이 규명도보  
들에 의해 집단해살되었  
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다. 제주도의희가  
에서도 1만1천6백여명  
83%에 해당하는  
도발대에 의해 해  
의 핵심쟁점인 미군  
는 여전히 때문에  
민과 하게 일부가 규  
자료와 미국측 관련  
구해 왔지만, 정황  
어음이다.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FAX) 02-741-5364 (TEL)

## 내뺐 별장부터 노동자 일방

이러한  
어니면.  
전담하고  
각 사업장  
주요인  
이르러가  
진행하고  
정정의 경  
다리로 하  
면이다. 소  
위기라고  
인간부의  
과 임금  
단체협  
실정

인천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98년 8월분 총목차(1179-119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호외	8/14	1-3	<8·15특사>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백60명 사면 제외
1189	8/18	1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장기수 금재성 씨 운명, 보라매병원서 영결식
		2	공권력투입 방점, 울산 긴장고조 - 사회각계, 평화해결 촉구/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주간인권흐름(8월 10일- 8월 16일)
1190	8/19	1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 9월 김대중 대통령 면담 예정
		2	"현정 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진보네트워킹센터, 시범서비스 실시/ <새로운 책> 『역감시의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1191	8/20	1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계지더라도 끝까지"/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2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긴달징역' 황게 의혹도/버마, 인권활동가 국외추방/연설요약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인터뷰〉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대표 이영자 씨
1192	8/21	1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조지사건, 한민전 영남위원회-용공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2	보랏빛 수건, 다시 거리로-미석방 양심수 가족들, 배신감 표출/‘삼륙수’ 가르쳤다고 파면-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만화사랑방〉 DJ의 양심
1193	8/22	1	"갈 곳 없는 세입자"-수원시 권선4지구, 강제철거/“정치인부터 교통분담을”-법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2	<이달의 인권영화> 『우리들의 사계』 / “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서울대 학생회,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
1194	8/25	1	경찰, 정치사찰 의혹-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AI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2	경제위기, 인권의 위기-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열려/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행 촉구/주간인권흐름(8월 17일-8월 23일)
		3	<특별기고> “양심수에게 사면은 없다” - 김도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195	8/26	1	집착만 못한 재소자-정원 2배 수용, 환자 ‘교통’ 호소/청소년 인권 다룬 고딩 영화제 “우리가 해요”
		2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1196	8/27	1	철거폭력업체 다윈, 또 활약-서대문구 남가좌동 재개발지역/“인권대통령 자질미비”-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법국민서명운동 돌입-재발퇴진·실업대책 촉구
		2·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한국)
1197	8/28	1	최근 대학생 8백여 명 연행-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부산·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
		2·3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3주제: 냉전체제하의 양민학살의 실상(제주 4·3과 여순사건,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1198	8/29	1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시설 수용자 보는 시각 바뀌야-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2·3	98년 8월분 총목차(1179호-1198호)

# 인권하루소식

98년 9월

(제1199호 - 제1220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일(화)

제 11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극우언론의 횡포가 또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 중인 송두을 교수가 노동당 간부"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는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7월 발표된 '부산·울산 조직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고 각계에서 사건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조선』은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를 쓴 우종창(월간조선 차장대우) 씨는 시종 "수사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붙여가며 보안수사대의 주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우 씨는 기사에서 "김창현(울산 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 "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해 울산동구 지역내 문화센터, 주부대학, 아파트 부

녀회, 조기축구회 등과 어린이집을 조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지자들이 장악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월간조선의 기사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126조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전반에 매카시즘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종창 씨는 또 구속중인 김창현 구청장의 지위와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우 씨는 기사에서 "김창현 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울산 동구청장 자격을 유지한다"며 "그는 유치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구청 업무도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려 기사의 의도를 확인했다.

월간조선의 편집진도 이를 거둬 감조하려는 듯 "그는 옥중에서 구청장 직무를 보고 있다. 면적 35.6㎡, 인구 19만, 년 예산 3백85억원, 공무원 5백1명이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피의자에

관할 하에 있다"며 김 구청장의 지위 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발언이다.

한편, 우종창 씨가 보안수사 실무책임자와 가졌다는 인터뷰는 이번 사건의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심증과 추측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보안수사대 실무책임자는 김 구청장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역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총책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운동에 '영남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없다" "홍보물은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 북과 관련된 꼬투리는 남기지 않았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이 책임자는 "사실상 북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면서도 "결정적 증거인 드보크(공작장비를 숨겨놓는 장소)는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구속 후 한달 이상 지난 지금까지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나, 월간조선은 모든 피의사실을 확인된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울산 지역 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31일 오후 조선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피의사실을 불법 기사화한 우종창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월간조선을 불태우는 의식을 가졌으며, 이후 월간조선에 대한 고소·고발과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 발간

98년 1월-6월 <하루소식>을 묶은 합본 10호가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구입 문의 : 741-5363

###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안 발표

열사범추위,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예정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창복 등, 열사범추위)는 1일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과거청산과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발제문 발표와 함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특별법 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특별법 법안은 열사범추위의 토론을 거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오늘 발표될 특별법 법안에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조사·고발권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열사범추위의 이창복 상임대표는 오늘 기초연설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각 당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한국국제문제연구소의 이창수 대표와 천일문제연구소의 김삼웅 회장의 발제로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및 '국가보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지난 8월 28일 현재 시국·공안사건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4백27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사람은 2백68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후 지난 8월 28일까지의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27명이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 (246명), 집시법 적용자가 43.8% (176명)를 차지했다.

특히 한총련 대의원으로 한총련 불탈퇴 등의 이유로 구속 중인 학생이 91명을 차지했으며, 노동자 구속자도 62명에 달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9월 2일 (수)

-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주간/인권/호/름

(98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 8월 24일 (월)

강남경찰서, '쪽집게 과외' 주선해 준다고 속여 학생들로부터 거액받은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 및 고등학교 교사 조사 중/환경·소비자단체,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금지 촉구/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21세기 동아시아 평화헌장' 채택/국제청, 음성달루소득자 1천1백27명 적발/청년진보당, 영등포경찰서에 대해 정치사찰 의혹 주장/IMF, 인권과 교회' 국제포럼, 우리 신학연구소와 국제가톨릭 지식인 문화운동 주창로 열려

◆ 8월 25일 (화)

대한변협, 수임비리변호사 3명 제명/파업중인 만도기계 노동자, 만도기계와 한라그룹 본사에서 상경농성 돌입

◆ 8월 26일 (수)

독립영화제작협회체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현행법 제약 논의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열여/제야·시민단체 대표 자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 대회 가져

◆ 8월 27일 (목)

언론개혁 시민연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자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총, 일용직 노조 설립과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가입 추진키로/국민승리21 실업대책 본부와 전국실업자동맹준비모임,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화장실 야간 개방과 샤워시설 설치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부당노동행위 특별위, 해고 노조원 및 노조간부들에 대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성모병원 현장 방문 조사

◆ 8월 28일 (금)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이창복), 문규현 신부에 대한 정부의 사법처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국회인권포럼 열려/현대 알루미늄, 회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전면파업과 함께 본관 점거농성/민주노총, '세정부 들어 구속·수배 상태에 있는 노동자는 2백16명'이라고 집계 발표

◆ 8월 29일 (토)

국민회의, 국정조사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 마련/재생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골수이형성 증후군' 병 얻은 이승현 씨, 12년만에 산재판정

◆ 8월 30일 (일)

충남지방경찰청,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황성근 씨등 4명 구속 이어 25명 검거 계획 밝혀/법무부, 청송교도소 9월 말·10월초 일반인에게 공개 계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일(수)

제 12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해묵은 과거청산 문제의 때를 올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나서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또 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삼근 등)가 주최한 학술회의는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시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현 정부, 과거청산 어렵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되는 것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문제는 자칫 가해자 처벌과 진상조사는 뒤로 한 채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고 경계했다.

비슷한 입장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하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실규명조차 현 정치세력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고 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의 대상들이 줄줄이 여당으로 가는 상황에서 ‘가장 상스러운 개혁’이라 할 과거청산을 현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자칫 과거정권의 차별화 도구로 이용하며 과거청산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따라서 “장기적인 투쟁 목표 속에 과거청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뒷받침 해줘야”

반면, 토론자로 나온 천정배 의원(국민회의)은 “책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현 정부는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고 해결될 개연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개혁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뒷받침을 호소했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법학과)는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거청산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과 인권피해자 관점에서 분리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소 협소하지만 인권피해자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뒤, 적극적인 의미의 해결은 역사적 과제로 남겨둘 것”을 주장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진실규명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갈 것”을 제안하는 한편, “과거청산운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결론과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과거청산이 전국민적 관

심 속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진행될 때 올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모아졌다.

###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경, 울산연합 회원 두 명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연행됐다. 연행된 이상윤 씨와 우영주 씨는 당시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중이었다. 조사를 맡은 동대문경찰서 공안과는 이들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조화를 문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안기부가 문제의 유인물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자, 결국 철도법 87조 '철도구간 내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장사행위를 하거나 선전, 선동을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즉심에 넘겼다.

같은 날 밤 11시경 동대문경찰서는 이 씨와 우 씨의 연행에 항의하던 울산 연합 회원 38명 또한 무더기로 연행됐다. 연행자들 중엔 잠자고 있던 3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또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지를 비틀어 손을 허리 뒤로 꺾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더욱 비난을 샀다. 이들은 자정을 넘길 즈음, 노랑진서와 남대문서에 분리구금됐고, 강제호송으로 심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편 즉심에 넘겨진 이상윤, 우영주 씨는 1일 오전 9시 각 5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38명의 연행자들은 같은 날 오후 훈방으로 모두 풀려났다.

<자료>

### 8.15 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

문규현 신부의 구속을 불러온 천주교 사제단의 방북활동과 관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제단의 활동은 결코 방북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사목 활동 중심이었으며, 부득이한 판문점 8·15 행사 참여조차도 방북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가 서울-북경, 평양-북경간의 통신을 도청해 이미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고, 문 신부가 수사상 협조를 위하여 제출한 통신자료를 증거 삼아 구속의 빌미로 악용했다"며 "사실의 왜곡과 엄청난 음해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정보기관에 의해 대북 통일정책이 기묘히 훼손되고 방해받고 있으며 국가안전기획부는 온전한 정권 교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임을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안기부장의 해임과 96년 개정 안기부법에 의한 안기부 수사권의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8·15 통일대축전 당시 문규현 신부(정확하게는 사제단 명의)의 연설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1. 겨레의 하나됨과 민족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분단의 현장 판문각을 가득 매우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문규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2. 지난 89년 평양에 입수경 수산나 양을 보살피 인도하라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파견을 받아 이곳에 왔던지 벌써 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천 5백만 동포 형제 자매들이 눈물로 흔들여 주던 손수건을 뒤로 하고 군사분계선을 울면서 울면서도 기도하며 넘어갔던 그 날 이후, 다시는 생전에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세월 끝에 또다시 사랑하는 여러분을 뵈게 되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우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3. 저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사무엘 위원장님의 초청을 받고 지금 평양에 와 있습니다. 금년은 평양에 장충 성당이 건립된 지, 만 10년을 맞게 되어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자 저희들을 초청하여 함세웅 신부님을 비롯한 9명의 사제들이 방북하게 되었습니다.

4. 우리가 대축전 개막식을 갖는 바로 지금 이 시간 평양 장충성당 10주년 기념과 더불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사제단 신부님들은 여러분의 통일대축전에 축하의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도록 저를 파견하셨기에 이 판문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꿈, 통일을 이룹시다!'

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로 여겨 왔던 저의 삶이 참이요, 정의임을 확신케 됩니다. 우리의 이 열정이 시시않은 한 통일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짐해야겠습니다.

6. 동시에 저는 마음 한편의 슬픔과 아쉬움도 큼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여전히 남북 공동 개최의 꿈은 무산되고 예전의 모습에서 성장하지 못한 채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월 일 북측의 공동개최 제의에 대하여 남측이 수용의사를 밝힐 때만 해도 통일 운동으로 육고를 치르며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이들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통일의 국면을 맞거나 행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임은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남과 북,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왜 남북의 화해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우선하지 않는가?' 원망스럽습니다. 99년 20세기 마지막에는 반드시 공동개최와 통일을 실현토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7. 끝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 사제단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남북, 북남양국 정부에 대하여 상호 존중과 인정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자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7·4 공동성명의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철저히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며 사제단은 이를 위해 남북의 모든 종교인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8. 우리 정의구현사제단과 교우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치하고자 합니다.

일치의 하느님, 분단체제에 안주해온 지난날들을 깊이 뉘우치며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억압과 좌절을 살아온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7천만 한겨레의 한땀한 아픔을 인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겨레의 일치와 하나된 조국을 확신케 하소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하느님 겨레의 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며, 인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겨레의 일치와 하나된 조국을 확신케 하소서. 불신의 우상을 부수고 겨레의 일치와 하나된 조국을 확신케 하소서. 맺히고 꼬인 것을 풀어 평화를 이루는 도구되게 하소서. 아멘.

9. 애국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통일을 향한 뜨거운 가슴 활화산처럼 타올라 분단의 아픔을 밝히고 통일의 햇새벽을 가져오도록 우리 사제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 8. 15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자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판문점 8·15 통일대축전 참석 경위

북한 당국은 애초에 우리 사제단 초청을 8·15대축전 참가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평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5일은 성모승천대축일로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제단 방북의 중심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15일 장충성당 미사는 일정 자체에 잡혀있지 않고, 전원 판문점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었다.

우리는 판문점 참가에 대하여 1)방북 목적과 전혀 다르며 특히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도 봉헌하지 않고 판문점 행사에 갈 수 없다는 것 2)남북공동개최가 무산되어 남측의 임진각에서 민화협 등이 통일 행사를 갖는데 우리가 북측의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도리와 예의에 어긋난다는 점등을 들어 거부했다. 4시간 또는 8시간씩 지속되는 연속회담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때는 아침 일찍 미사를 봉헌하고 판문점으로 가도록 하자는 데까지 논의접근이 되었는데 북측이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다음날 15일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통보했다.

그날 옥류관에서 점심식사에서 장재철 위원장은 "신부님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북한천주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양들을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사제들에게 90도로 짚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서, 간단히 끝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과연 사목자다운 태도인지 많은 고뇌와 갈등이 교차되었다.

14일 오후 북측에서 새로운 제의를 해왔는데 "어느 분이든 2명만 판문점에 보내주시면, 같은 시간에 장충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16일)미사도 약속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우리 사제단

은 장시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결론으로 반보씩 양보하여 서로의 목적에 부합되게 합의점이 향후의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 교회가 난처함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목적 판단으로 2명 판문점 파견, 7명 장충성당 미사봉헌 제의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문규현, 전종훈 신부의 판문점 대화 참석

우리는 2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규현 신부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에서 문규현 신부라는 이름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별히 일반주민 대중들에게는 상상을 넘는 대단한 존재였다. 어디서든지 모두가 즉시 알아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악수를 나누려 했다. 실제로 문규현 신부로 인하여 신앙에 귀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이 장충성당에서 확인되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 얼굴과 이름 자체로 기쁨이고 희망인 문규현 신부님이 괴롭더라도 다시 텔레비전 앞에 선다는 것이 전교를 위해서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나 더 좋다고 판단하여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판문점 동포단합대회 연설

참석하더라도, 사제단으로서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연설문을 작성하여 그대로 낭독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은 1)사제단은 장충성당 미사를 위하여 방북하게 되었고, 자신을 포함한 2명의 사제를 대표로 판문점에 파견했으며, 이 시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2)북측의 제의와 남측의 수용으로 공동개최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8.15 행사가 무산된 점에 대한 유감 표명과

99년에는 반드시 공동개최를 이루자는 것.

3)남북정부가 7.4공동성명 정신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

4)남북 당국자들은 즉시 대화에 나설 것.

5)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문 낭독 등이었다. 연설 전문은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자료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북한 당국과의 어려운 대화와 부득이한 처지의 차선으로 판문점에 2명의 신부를 파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14일 저녁 방북 승인처인 통일원 교류협력국장으로부터 15일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사제단 사무국에 전해왔다고 한다.

문규현 신부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사제단 대표로 참석하여 사제단의 토론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북측 판문각에서의 50m 지점 건너편 남측에는 한국측 100여명에 이르는 보도진과 카메라 등이 있었기에 문규현 신부가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문규현 신부의 참석을 정치행위로 지탄하는 보도를 냈으며, 이미 통보까지 받은 통일원에서는 사무관, 과장 등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내용을 보도로 흘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은 통일원 인사들 가운데 햇볕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는 이들이라 여겨진다.

참고로 판문점의 실황은 15일 오후 북한 중앙 텔레비전에서 녹화 중계되었는데 문규현 신부의 연설은 거의 전 내용이 삭제되고, 사소한 인사내용만 방영되었다. 결국 우리는 사제단의 판문점 참석 내용은 북측 당국자들에게서 비판받고, 남측에서도 비난받았다. 그러나 사제적 양심과 신념과 확신에 찬 행동이란 결국 모두에게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복음적 진리를 확인케 되었다.

8월 31일

방북 참여 사제 일동(김승훈, 문정현, 리수현, 안충석, 함세웅, 박승원, 문규현, 박기호, 전종훈 신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3일(목)

제 12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정부가 민주노총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6월 5일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과의 합의에서 △최대한 고용보장 △퇴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생계대책 최우선 해결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절 이후 발생한 구속·수배 노동자의 사법처리 최소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한 사항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노조원들은 사업주와 공권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권력 투입의 위협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17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만도기계는 작년 12월 흑자부도를 낸 뒤 지금까지 1천9백14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만도 대전공장에는 노조원 1백 20여 명과 학생 50여 명이 경찰에 의해 공장 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익산지부에서도 지난 1일부터 경찰이 37개 소대 1천5백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주위를 완전봉쇄했다. 경찰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노조원 가족들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밖에, 다른 공장들에서도 20-30여 명의 경찰들이 정문을 봉쇄한 뒤 불심검문을 실시해 공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현재 최후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사수대를 서울로 파견,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기노조는 고용승계와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8일째

농성 중이다.

용역직으로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농성중인 현대중기노조는 현대본사에서 텐트농성을 하다 구사대에 의해 텐트가 찢기고 소방용수를 맞는 등 탄압을 받고 조계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달 20일엔 현대본사 앞 시위 중 경찰 앞에서 구사대 2백70여 명에게 폭행당한 뒤, 오히려 이를 막던 20여 명의 노조원들만 종로경찰서에 연행되는 처지를 겪기도 했다.

지난 6월29일 퇴출은행으로 발표된 동남은행 직원들은 퇴출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인수작업을 거부하고 명동성당에서 64일째 농성중이다. 인수는 행인 주택은행측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로 연행, 인수작업에 동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벽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나가는 일도 있었다. 동남은행 직원들은 "퇴출된 직원에겐 인권도 없느냐"며 경찰이 강제로 연행해 은행에 인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생명보험노련, 동아엔지니어링, 대구염색공장, 조흥시스템, 인천전기, 아남반도체 등 수많은 사업장들이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을 위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합의 이후에도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지속되자 2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노정합의 이행추구 및 고용안정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고용승계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그리고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합의서한을 휴지조각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 노사문화는 노조탄

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생명보험노련의 김창희 위원장은 "퇴출직원이 다른 보험회사에 취직하려면 벌금 1천만 원을 내야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이런 내용의 담합이나 하는 제벌기업들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험감독원과 경영진 등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만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8백여 명은 세종로 정부청사까지 가두행진 뒤 자진 해산했다.

### "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의 창립대회가 2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참뜻을 살려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범민련 납축 본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자유로운 통일 논의와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사면 복권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폐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 활동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의 상임대표에는 홍근수 목사, 진관 스텝, 오세철 교수가 선출되었다.

##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적극적 '거부의 권리'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불심검문 불복종 운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워크숍이 2일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서울대총학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교문 앞에서 여러 차례 불법검문 거부투쟁을 전개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사무국장 권미란 씨는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공권력이 두려워 학생증을 제시하고 가방을 열어보여줬던 학생들이 불심검문의 이유,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집단적 저항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김광철 씨도 "불법검문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연세대 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불법검문 불복종 운동의 한계점 또한 지적되었다. 불심검문 절차의 적법성에 치중한 나머지, 소속과 성명, 검문사유를 밝히는 경찰 앞에서는 일순 무력함을 보이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복종'의 기본이 되는 '거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데 따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1일부터 16일까지 불법검문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서울대총학생회의 사례가 소개됐다. 당시 범민족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서울대를 원천봉쇄한 경찰은 학교측의 '시설물 보호 요청' 사실과 집회의 불법

성을 이유로 들며 일제검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무작위로 검문을 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설물 보호요청을 함으로써 학내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많은 학생들이 동조했다고 총학생회는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태 씨는 "김대중 정부는 '인권의 정부'라고 자처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인권억압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경찰의 일상적인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상승시켜 거짓된 인권의 잔치를 뒤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운동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이 씨는 밝혔다.

###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교도소 내에서 또 다시 불법적으로 계구가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 아무개 씨는 순시중인 소장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소장 체면훼손' 등의 이유로 보안과로 끌려가 수감이 채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승에 묶이고 수감까지 찬 재소자들이 호송차안에서 서서기는 것은 위협하다며 순시중인 소장에게 건의하다 일을 당했다.

소장은 보안과에서 평바닥에 앉기를 거부하는 박 씨에게 수감 뿐 아니라 방성구(말소리를 차단하는 가면)의 사용도 지시했으나 교도관들이 방성구는 채우지 않았다.

박 씨는 소장이 보안과에서 온갖 욕설과 함께 그의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순시 때 건의한 것은 '공권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며 잡범들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며 자신을 조사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사과로 끌려간 박 씨는 일을 조용히 마무리짓자는 조사과 직원의 권유로 "큰 소리를 쳐서 소장의 체면을 훼손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는 자술서를 쓰고서 방으로 돌아왔다.

소장은 본자와의 통화에서 "교도소 내 말썽꾸러기들이 내가 순시 들 때 건의를 하곤 하는데 학생 중에선 유일하게 박 씨만 말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소장은 불법적인 계구사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소장은 지난 1일 박 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와 동정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때: 9월 3일 (목) 오후 12시 ·곳: 용산구청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제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때: 9월 3일 (목)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전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 '98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IMF구조조정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

·때: 9월 8일 (화)-12일 (토)

·곳: 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 및 주변 회의실 (신림동)

·주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조직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4일(금)

제 12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3일 새벽 6시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도기계 7개 사업장에 1백24개 중대 1만5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포크레인, 굴삭기 등을 동원해 바리케이트와 담벼락을 부셨고, 현장 진입 시 노동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마구 쏘아대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 중에는 임신부와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많은 조합원들이 강제 연행됐는데 그 수가 2천 명에 가깝다고 노동계는 밝혔다. 익산공장에서는 중재에 나선 문정현 신부까지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만도기계는 지난 87년 회사 설립 이래 30% 이상의 고성장장과 흑자경영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부도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모 그룹인 한라그룹의 방만한 기업 경영과 그룹 차원의 막대한 상호자금 보증 및 부당내부거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기계 노사는 올해 2월 23일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회사는 고용안정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학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중단, 건강검진 중단 등 복지혜택의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의 사용 등 통상임금의 30%나 삭감되는 조정안을 내고 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정리해고가 단체교섭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7월말 경 일방적으로 1천90명의 인력감축 방안을 노조에 통고했다. 결국 파업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진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대신 노조 쪽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마침내 3일 경찰을 투입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권 아래서의 모든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 항의규탄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산업연맹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게 신노사문화냐"며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반응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도기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 하나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란 논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양 당사자의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할 노사관계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제 수단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된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윤금이 씨 살인사건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군산시 아메리카 타운 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박순여(66) 씨가 등과 왼쪽 팔, 목, 가슴, 배 등을 단도로 10여 차례 찔린 채 숨져있는 것을 주민 박 아무개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은 뒤 손에 피를 묻힌 채 도주하던 용의자 할버슨 에릭(21·제8지원중대) 병장을 검거했다.

검거된 에릭 병장은 살인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에 손톱으로 할린 자국이 있는 점, 옷이 찢어져 있는 점, 용의자의 집과 반대방향으로 뛰어갔던 점 등을 들어 에릭 병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에릭 병장은 재판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미군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미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은 시신부검과 용의자의 옷의 감정결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에릭 병장을 살인죄로 고소할 방침이나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의 사건 담당경찰관은 "용의자가 미군이어서 확실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중단된 상태"라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45년 9월8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보고된 미군범죄는 총 10만 건이 넘지만 지난 97년 10월까지 한국법정에서 처벌받은 사건은 1-2%에 불과하다. 이중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신고된 여성강간사건은 84건이며 67년 이전 사건까지 합치하면 무려 1백 명이 넘는 한국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강간당했다. 그리고 이들 중 34명이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80년부터 97년10월까지 기준). 그러나 이것이

경찰통계임을 감안할 때 신고를 거리는 기지촌 주민들이나 매춘여성들의 피해규모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명확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선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미군군속과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미국 요청시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한다 △형이 확정되어도 본국 송환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재판거부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있다.

## 김훈 중위, 자살? 타살?

### 미국 법의학자, 타살 가능성 주장

지난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시체로 발견돼 시신을 돌려싸고 논란이 됐던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주 웨체스터 정부 법의학자인 루이스 에스 노박사(한국계 미국인)는 3일 서울 중구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김 중위의 사체부검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김 훈 중위의 죽음은 자살을 위해 본인이 직접 가한 총상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소견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미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 김 중위의 사망 원인이 총기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 박사는 "총상 입구 주변과 두개골의 상태, 총알의 진행방향 각도를 관찰할 때 총기자살이 수반하는 여러 현상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총이 시체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나, 발사된 탄환 잔여

물이 오른쪽 손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 또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머리꼭대기에 나타난 타박상은 머리가 둔탁한 물건으로 심하게 얻어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총기사고를 조사한 바 있는 미국 법의학자에 의해 제기돼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김 중위 사건은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결과,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 도원동 주민들 울분만 쌓여

### 전철연 의장, 강제연행되기도

3일 오후 12시 용산구청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주최로 열린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의 강제연행과 경찰의 집요한 집회 방해로 인해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남 의장은 이날 미리 약속돼 있던 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용산구청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수십명의 사복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남 의장의 강제연행에 거세게 항의했고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는 전경과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경들은 참가자를 해산시키기 위해 당시 앉아있던 참가자들을 밟고 지나가려 해, 한 여성은 웃옷이 벗겨지고 1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경찰은 용산구청 출입 차량들을 집회장소로 유도하고, 집회장 엠프 설치 위해 주차해 있던 봉고차를 교통방해를 이유로 견인하려고 하는 등 집회의 진행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도원동 주민은 "폭력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마저 폭력으로 탄압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남 의장은 도원동 사건 담당검사인 한인수 검사에게로 넘겨졌으나 저녁 늦게 풀려났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5일(토)

제 12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 보호대신 사무실 임대권을 선택했다.

지난 60일간의 삼미특수강노조 점거 농성에 의해 사무실 퇴거 위기에 봉착했던 노사정 위원회는 4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현대중기노조에 의해 또 다시 사무실이 점거되자 경찰력의 개입을 묵인했다.

경찰은 항의농성장에 있던 건설노련 부위원장과 노조원 13명뿐만 아니라 로비에 있던 노조원과 차량 운전자 등 노사정위원회에 있었던 노조원 19명을 모조리 강제연행해 영등포 경찰서에 넘겼다. 농성을 시작하지 불과 6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연행된 현대중기 노조로서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당한 셈이었지만 노사정 위원회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직원은 "건물주인에게 사정해 간신히 쫓겨나는 것을 막았는데 또 다시 들어오니 어쩔 수 없었다. 현대중기 노조측이 12시에 자진 해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의 한 담당자는 "현대중기가 제 발로 걸어나가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직원과는 대조적인 주장을 공식입장으로 표명했다.

현대중기노조와 건설노련 측은 노사정위원회의 묵인 하에 노조원들이 연행되자 즉각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에 들어갔다.

현대중기 노조는 "그동안 서면요청서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직접 면담을 요청하려 간 사람들이 노사

정 위원회에서 연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다. 현대중기는 지난 6월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퇴출 선정 기준의 공개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6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그 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춘천교도소에서 이번엔 일부 재소자의 면회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교도소 소내 양심수 3인(김세진, 장운영, 박춘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춘동 씨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가족은 "교도소 측은 '박춘동은 조사 중이므로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거세게 항의를 하자 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공안수 3인이 불법적으로 서신을 유출하고자 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실확인을 위해 소내의 다른 양심수인 홍승도 씨를 면회한 한림대 오대규 씨에 따르면 현재 이들 3인은 징벌방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규 씨는 "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교도관이 갑자기 면회를 중단시켜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춘천교도소는 지난 7, 8월에도 재소자에 대한 위협한 징벌·계구의 남발·재소자 청원거부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본지 8월 12, 20일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운영 씨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교정청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 <인권하루 소식> 창간 5주년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7일로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5년째를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 파수꾼이라 자처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권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싸워나가는 분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며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 길, 지침없이 작지만 다부진 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에서 문규현 신부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팩스교신을 한 사실을 사제단 신부들에게 숨겼으며, 이는 곧 처음부터 통일대축전 참석을 의도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팩스의 내용은 방북목적이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라고 밝히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문 신부는 "법민권 대표로 오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북측에 대해 "우리는 법민권과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팩스를 보낸 바 있다. 즉, 안기부가 문제시하는 팩스의 내용 어디에서도 잠입·탈출죄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

### 3. 금수산 기념관 방문 및 방명록 서명행위

사제단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관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통일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했다. 안기부와 검찰은 이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규현 신부 자신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사도신경으로 고

백하는 사제로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제 관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찬양·고무 등 죄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좁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안기부와 검찰의 법해석과 적용은 엄청난 무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4. 통일대축전 참석 행위

문규현 신부는 사제로서의 신앙양심에 기초해 통일대축전에 참석했고, 연설을 통해서도 북한의 문제점을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을 볼 때, 문 신부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5. 안기부의 팩스 도청행위

안기부는 사제단이 북경에서 평양으로 보낸 팩스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도청했다. 이는 안기부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인권유린 행위의 악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6. 구속영장 발부행위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상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이다.

### 7. 결론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잠입·탈출죄 등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리어 그는 구속권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쫓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 문정현 신부가 본 경찰 투입 현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지난 3일 만도기계에 투입된 공권력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가는 현장을 군산 오장동 성당의 문정현 신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전북 익산공장의 현장에 있었던 문 신부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간 현장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문 신부는 "부녀자들과 쫓먹이 아이에게까지 최루탄과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문 신부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2동의 옥상에 있던 조합원과 가족들을 끌어내기 위해 "내려와서 신분만 확인되면 곧바로 집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약속을 믿고 자진해서 내려온 노조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가족들을 호송차에 태워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가족들 중 많은 수가 전경들에 때밀려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한 부녀자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문 신부는 "당시 '에기 죽인다'는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 역시 이 광경을 보고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다 한때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당일 오후에 풀려난 문 신부는 다시 공장으로 가 아직 한쪽 옥상에 있는 사람들 중 아이들에게 물이라도 갖다 줄 수 있게 요청했지만 번번이 제지당했다고 한다. 문 신부는 "현 정권이 그 동안 숨겨 놓았던 거대한 발톱을 드러냈다"며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4일,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 연행된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면회를 온 사람들까지도 제지하는 등 가족의 안타까움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8일(화)

제 12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 제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제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훈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제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조사팀이 이들 3명의 불법서신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교정청에서 엄중히 징벌 조치 하라는 지시를 내려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외 3명을 면회해 온 학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납탈, 제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

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교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훈동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들, 한림대 학생들은 7일 오후 춘천교도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소장과 보안과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징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징벌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소 측은 경비교도대를 교도소 문 앞에 배치시켜, 학생들과 어머니들의 사진을 찍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방문 간 학생들과 어머니들은 밤까지도 교도소 문 앞에서 경비교도대와 대치상태 중이며, 8일 오전까지 같은 장소에서 철야농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 허용과 책임자 면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시민권이란 있는가?

7일 국회 앞에서는 토론회 참석을 위해 온 노동자들이 단지 여럿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당했다. 주권자인 노동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

러한 씁쓸함을 더해준다. 갑고, 한국 오티스, 현대 알미늄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회피 노력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으로 몰고 가는 탓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행동마저도 어렵다. 최근 만도기계에의 경찰력 투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방적

으로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일 국회의원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리해고 토론회는 위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혁재 정치학 박사, 김선수 변호사 등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앞서 주발제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동맹파업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요행위로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우리나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 2면으로 이어짐

###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1면에서 계속

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부치고 엄청난 경찰병력을 배치하거나 투입했다"며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손혁재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에 대한 미신이 광배해 있다"며 "그러한 미신이 정리해고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을 갖게 했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의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이라 몰아가면서 기업이 그냥 버티면 노동자들이 양보할 수 밖에 없다. 혹은 경찰력 투입하면 해결된다"는 등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함으로 개입할 게 아니라,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참석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 노동자는 "지금 현장은 정리해고 앞에 무법천지"라며, "지식인들,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행동으로 함께 나서서 이 무법천지를 깰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서울역에서 1백10일 넘게 농성 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는 "1년 전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승계 결정에 이어, 대통령, 감사원, 노사정위원회 등이 포함제철에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털어냈다.

## .....주요 공판 안내

- ▶ 9월 9일 (수)
  - 조원길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303호, 선고
  - 함은균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1부, 303호, 선고
- ▶ 9월 11일 (금)
  - 문은주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합의1부, 303호, 속행
  - 홍성철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4부, 403호, 속행
  - 이근안 외15 (재정신청, 독직·폭행) 오전 10시 30분, 합의2부, 302호, 속행 ← 이상 서울고법
  - 신광수 외1 (국보법) 오후 3시, 합의1부, 418호, 속행 ← 서울지법

##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 발간

98년 1-6월 <하루소식>을 묶은 합본 10호가 나왔습니다. 울 상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741-5363

## 주간/인권/호/름

(98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 8월 31일 (월)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고액과의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교육부, 불법고액과의 사건과 관련해 과외 앞선 교사 뿐 아니라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키로/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제심서도 탈락, 소청위서 심사 재추진키로/대한변협, 사건수임비 리 변호사 14명 징계/법무부, 춘천·안동·공주·목포 등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9월 1일 (화)

한국조폐공사 노조, 사측의 임금삭감 방침에 맞서 내놓은 전면 파업 돌입/5~9인 사업장 실직자, 실업급여 혜택 보게 돼/민주노총, "정리해고와 퇴출 기업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노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가져/현대차 노사합의안, 노조 총회서 부결/한국조폐공사, 노조의 시한부 전면파업에 직장 폐쇄 조치/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보 평균 7% 인상키로/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과거청산' 문제 관련 제2차 학술대회 개최

◆ 9월 2일 (수)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과거사 사과 땀 수용할 방침 밝혀/노동부, "실업자는 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과 액수는 도리어 줄어들기 시작해, 최소한의 지원조차 못 받는 장기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열어/인천 서부경찰서, 기부금 등 4억2000만원 착복한 혐의로 복지시설 명화원 원장 영장 영장 청구/노동부, "울 상반기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 8.4% 줄었다"고 발표/서울 영등포 경찰서 김동만 순경,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김사 돌 고소

◆ 9월 3일 (목)

서울강남경찰서, 과외앞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경찰, 만도기계 7개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 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인권위원회, 김훈 중위 사망사건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춘천 교도소, 김세진·장윤영·박훈동 씨에 대한 면회제한 조치

◆ 9월 4일 (금)

경찰청, 만도기계 파업과 관련 30여명 구속영장 신청/국민회의, 선거권 19살로 인하 추진

◆ 9월 6일 (일)

환경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벌 강화/통계청, "경기침체영향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

인권 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나는 몰래바이트 과외 교사, 나의 교습 활동은 위험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활동으로 잘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그러나 오늘은 나의 과외 교습의 건전성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나의 과외 교습은 고질적인 학습 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내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근본 이유는 공부할 목적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내 학생들은 오로지 좋은 대학, 취업이 잘되는 과에 가려는 생각 밖에 없다. 그것이 좋은 직장과 지위를 가져다 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고, 사회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제29조: 교육의 목적)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공부의 목적이 부족한 내 학생들은 또한 공부 방법도 모른다. 스스로 '참여'하여 경험하는 속에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 말을 조리있게 표현하며,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놔두고 딴 짓을 하려한다. 요점만 추려서 외우려 하고, 쪽집게로 집어서 입에다 넣어 주는 것만 받아먹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으려 하니 학습 효과가 오를 리가 없다. 또한 수업 분위기를 많이 흐린다. 내 학생들은 '경쟁'만 하려 하기 때문에 '협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규칙이 먹혀들질 않는다.

내 학생들은 얼굴을 보아야 할 때 잘 숨는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의사실을 통지받았으면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개만 책상 밑에 박고 있다가 수업시간이 어서 끝나 종이 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은 산수이다. 제로(0)에서 수천 만 원이 절로 생겨나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로(0)에

족집게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을 소환한 사건, 정작 그 속에서 상처받고 빼앗긴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서는 수천만 원이 절대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수천만 원을 몇 번 더하면 도시락을 못싸고 밥을 굶는 아동 1만7천여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하는 문제는 풀이불 엄두도 못낸다.

사실, 내 학생들이 공부할 못하는 데는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못한 책임도 크다. 일제통치와 분단, 오랜 세월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비판보다는 순종을 강조해 왔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제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인이 되라고 채찍질해왔다. 그걸 따라 공부하느라 허덕여왔기 때문에 내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내 학생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더 비뚤어진 것 같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따라 배우는 것이 있을 텐데 시험 때만 되면 찾아와서 들추서놓고 가는 '언론'이라는 친구와 이리저리 말만 바꾸는 '교육당국'을 친구로 사귀고 있으니 정말 격정이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교실에만 갇혀서 문제는행만 들고 있는 내 학생들이 안타깝기만 한다. 이우학교에선 '유엔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다 해서 좋은 책과 비디오에 실습 프로그램도 많고, '개발교육', '평화교육' 등 선택 과목도 많은데 내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빨리 정규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서 나같은 과외 교사가 필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나같은 과외 교사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과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지난 8월 28일 족집게 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을 소환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립대학인 서울대 총장 딸이 고액 과외를 받았다는 얘기와 누구누구는 45일에 2천만 원을 냈다, 한달에 8백만 원을 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정작 이 속에서 상처받고 빼앗긴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아동이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9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빠진 소동 속에서 학생들은 다시 문제지와 참고서로 눈을 뗄한다. 우리의 학교에는 인권에 관한 과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9일(수) 제 12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노조 건설 이유, '해고·대기발령'

노조 결성 저지 위해, 유명노조 설립 의혹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리는 프리토틀레 이 공장에서 노조결성을 이유로 사측이 일부 근로자에게 징계와 대기발령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주 공장의 노조건설을 준비중인 윤태영, 이옥순 씨는 지난 7일 해고됐고 김부자, 전향순, 이순미 씨는 현재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노조결성과는 무관하다며 이들의 해고사유는 학력문제, 경력조각, 제품반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윤태영 씨는 "지난 3-4년간 아무 문제없던 이력서에 잘못 기재된 사소한 몇몇 내용을 이유로 들어 해고라는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처리돼 폐기 처분하는 과자를 갖다 먹은 것이 불법이면서 사내 모든 근로자가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씨 등은 그동안 사내에서 풍물패를 조직하며 노조를 세우려는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같은 동료인 김부자, 이옥순 씨가 서울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연행돼 이틀간 회사에 무단 결근하게 되자, 회사는 이들 2명을 대기발령시키고 질천한 동료인 윤태영 씨마저 그들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1일 공정라인의 조장직을 박탈했다. 이밖에 전향순, 김순미 씨 또한 이들과 같이 활동하고 제품반출을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한편 들도보도 못한 유명 노조의 출현은 회사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

다는 주장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5일 윤태영, 이옥순 씨는 청주시청에 공식적으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윤 씨는 본 공장인 이천공장에 이미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복수노조금지조항 때문에 노조지부의 형식으로 다시 서류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천공장의 노조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결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윤 씨는 밝혔다.

윤 씨는 "이천 공장에 확인해본 결과 이미 존재한다는 노조는 사실상의 유명 노조였다"며 "노조지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보내자 '노조를 왜해할 위험이 있어 안 된다. 왜 지부를 결성하려 하느냐'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기발령이 떨어진 3명은 회사 안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발령상태인 김부자 씨는 "아무하고 함부로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언제나 직원이 따라다니며 나의 행동을 카메라로 수시로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인 피에르 사네(50) 씨가 8일 방한했다.

사네 사무총장은 오는 12일 귀국예정이며 이번 방문기간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 및 인권·노동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민간 외교에 있어 최고의 역량을 자

랑하는 국제 엠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선언 지지서명'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해 이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아웅산 수기 여사,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라파트 PLO의장,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 달라이 라마 등 세계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한 8백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모아진 지지서명은 올 12월 UN총회에서 전시된다.

사네 사무총장은 9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서명을 받은 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사네 사무총장은 김대통령을 예방한 후 조세형 총재(세정지국민회의)와 외무부 차관 및 여야 국회의원들, 민간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10일에는 기자회견과 인권선언 지지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며 오후 2시엔 탑골공원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공식일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출소 양심수 및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만남을 가진 후 서울대에서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사네 사무총장은 방한 직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경제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 기간동안 각계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양심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네 사무총장의 방한에는 로리 몽고벤 아태국장과 클레어 맥베이 한국담당관, 허창수 한국지부장, 오원호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합본 10호 발행

98년 상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0호가 나왔습니다. ·구입 문의 : 741-5363

#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청원권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 ② 재소자 면담요구에 대한 거부와 인권유린

재소자의 면담요구는 행형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 공무원은 자주 소 내를 순시해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순시 때 정한옥(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 씨가 제기한 노상면담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 씨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잦은 면담 요청이 소 내 행정절차를 어렵힌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보고전을 쫓거나 더 이상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재소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 ③ 불법감금, 시승, 시감에 의한 인권유린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에는 계구 사용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해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

으나, 소 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한옥 씨의 경우 감방 안에서 손을 들고 노상면담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특별히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벌방에 감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구 사용과 징벌방 감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면담진행 중 발생한 장운영 씨와 4인에 대한 계구 사용과 감금은 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행형 시행령 제45조에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보안과장이 서류를 작성해 소장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 계구 사용이라 할 수 있다.

### ④ 청원 제출시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교도소장의 직무유기

청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청원 즉시 소장이 법무부에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운영 씨가 낸 청원요청 보고전을 보안과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묵살한 것은 보안과

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소장은 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후에 3차 면담을 통해 보안과장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보고전을 묵살시켰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심대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 ⑤ 춘천교도소 청원과정의 부당성

춘천교도소는 청원을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청원 시 별도의 소 내 절차를 거치도록 해 재소자들이 청원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임-과장-소장 등의 순차적 면담을 진행, 청원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이후 청원의 대상자가 선출된다. 따라서 그 면담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뿐 아니라 중간에 회유작업 등이 병행돼 많은 재소자들이 청원을 포기하고 있다.

### ⑥ 춘천교도소내 건달정역의 문제

소내 교도관과 결탁한 일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도관의 일상업무에 대항, 소내 재소자에게 특권을 행사하는 일은 비상식적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의 형태이다. 이것은 춘천교도소 뿐 아니라 타 교도소에서도 비밀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 "IMF에 도전하는 민중"

##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98서울국제민중회의가 9일부터 12일까지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신자유주의, IMF는 한국 민중들의 고통의 화두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보장체계의 침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제거'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싸우는 타국 민중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적 사고와 행동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곳 :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 및 주변 강의실 (9 - 11일)

· 주요 공원 (12일)

· 문의 : 837-2853/880-5222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0일(목)

제 12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정부가 노동현장에 잇따라 경찰력을 투입하고 있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이어, 9일 아남반도체 사업장(서울시 성동구)에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농성중이던 노조원 39명이 전원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5시 30분 경 전투경찰 5개 중대와 여경 50여 명을 사업장에 투입했으며, 부당하고 철칙과 단협이행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39명을 강제로 풀어냈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각기 동부, 송파, 강동경찰서로 분산 구금됐으며 이중 10여 명은 구속될 전망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31일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과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14명의 조합원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파업 10일째인 9일 경찰력을 투입함으로 노조를 회사 내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금속연맹 서울지부의 권명숙 부장은 "평소 아남반도체가 조합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빌미로 노조원 탄압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히며 "이번 경찰력 투입은 노조를 완전히 말살시켰다는 사측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8, 9일 시한부파업이 진행된 현대정공(울산)에 대해서도 사태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만도 파업투쟁 지속

## 현장 집회, 명동 농성

지난 3일 경찰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만도기계의 각 공장에는 전투경찰과 사복체포조가 상주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사내에서 집회를 갖거나 선전활동, 토론회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연행이 잇따르고 있는데, 9일 대전공장에서는 홍보물을 배포하던 조합원이 회사 간부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지는 일도 발생했다. 각 공장별로 노동자들의 출근률은 평균 50% 정도이며 정상적인 조업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의 투쟁과 더불어, 지난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연행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은 명동성당에서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고용합의서의 이행 및 경찰력 철수, 자율교섭' 등을 촉구하며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수배중인 노조 간부들에게 "사업장에서 교섭을 하자"는 답변을 보내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다.

한편, 경찰력 투입에 따른 충격으로 현장 내의 노조활동이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임두혁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회사측의 협박이 워낙 강해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며 회사를 그만두는 노동자들이 속

출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10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만도기계 및 아남반도체 경찰력 투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 영남위 사건, 전원 기소

## 대책위 "짜맞추기 사건" 비난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 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김일성 부자에 대한 철저한 충성 요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합법당 건설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김정일 보위투쟁 차원에서 적극 참여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영남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였으며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아직도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카시즘과 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불온시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발표를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정리되고 반대, 민중생존권투쟁을 잠재우는 공안·조작사건이며 조직의 결성과 가입에 대해 최소한의 6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한 짜맞추기식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속자 중 이은미 씨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정련 씨도 진찰 결과 "약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9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공식 면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피에르 싸네 총장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한 앰네스티의 우려부터 표명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이 매우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햇볕정책과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현 정권 아래서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런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수 석방 및 준법서약제 도입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더 많은 양심수를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준법서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며, "준법서약제 또한 반대가 많아 시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준법서약제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싸네 총장은 "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는 것 같다"며 "그가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나 당장 실현할 수는 없으며, 추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싸네 총장은 "김 대통령 집권 동안에 사형집행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면담을 마친 뒤 싸네 총장은 "김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 비해 매우 협력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특히 국내 민간인권단체 및 인권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김 대통령의 답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싸네 총장은 밝혔다.

한편, 앰네스티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25매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과의 면담 30분 전까지도 법무부측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싸네 총장은 "국내 주요 인권문제들이 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김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 또한 하부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한 첫날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전 김 대통령을 면담한 싸네 총장 일행은 오후 들어 외무부 및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저녁에는 민간단체 관

계자들과도 자리를 같이 했다.

외무부의 면담시 앰네스티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문제에 대해 "밀실 작업을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민간단체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앰네스티측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나, 일부 국회의원은 "인권문제를 몰고 늘어지는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한국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망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싸네 총장 등 앰네스티 방한단은 오늘 오전 10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 오후 4시 법무부 장관 면담, 저녁 7시 세계인권선언 지지 한국 서명식(프레스센터)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다. 11일엔 민가협 회원 및 김성만 씨 등 출소 양심수와 면담을 갖고,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초청 오찬,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의를 끝으로 한국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한다.

### 행사와 동정

-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 때: 9월 10일(목) 오전 11시
  -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앞
  - 주최: 참여연대
- 세계인권선언지지 한국 서명식
  - 때: 9월 10일(목) 오후 7시 - 8시 30분
  - 곳: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 (20층)
- 정치개혁을 위한 여성대토론회
  - 때: 9월 11일(금) 오후 2시 - 5시
  - 곳: 프레스센터 20층
  - 주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후원회 6차 총회
  - 때: 9월 11일(금) 오후 7시
  -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 4층 중강당
-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 수배해제를 위한 하루주막
  - 때: 9월 12일(토) 오후 2시
  - 곳: 동국대 다량관식당
-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때: 9월 13일(일) 오후 6시 30분
  - 곳: 조계사 대웅전 앞
  - 주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
-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 때: 9월 14일(월) - 19일(토)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학교
  - 1강좌: 인권의 역사와 아동의 권리(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때: 9월 16일(수) 오후 6시
  - 곳: 부산교육대학 시청각실
  - 주최: 부산교대 한새별 교육자치연대
- 토론회-군정력에 대한 채용·급여·승진 3중 해택 무엇이 문제인가?
  - 때: 9월 16일(수) 오후 2시
  - 곳: 흥사단 강당 (743-2511)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1일(금)

제 12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변명은 이제 그만”

###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방한중인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AI)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특수상황과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변명이 통할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인권에 타협이란 없다"며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이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집권 6개월간의 김대중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이 실망을 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이 지금 무척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네 총장은 앰네스티의 기존 입장인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의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국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느냐"며 한국정부측 '변명'을 꼬집었다.

또한 준법서약제 및 장기수 문제와 관련, "양심수에게 신념에 반하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며, 40년 이상 수감된 고령

### 만화사랑방

이동수



법적인 괴롭힘 허용 △구속된 괴롭힘 주도 노동운동가 석방 △결사의 자유 보장 △감옥 내 인권보장 △안기부 구조개혁 △고문 및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형수 감형과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45차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싸네 총장은 집회에서 "민가협의 활동과 투쟁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가협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랜 기간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신념을 지켜온 양심수들은 한국인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 "IMF에 도전하는 민중"

##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 모색되야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지난 9일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노총, 지식인연대, 민변 등 26개 사회단체들이 조직위를 구성·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멕시코의 '사빠띠스파', 유럽의 실업자 운동 '유로마치',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등 외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서도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각국 민중운동의 저항,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9일 첫 토론회에서 홀

거 하이데 교수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실업 문제, 작업장 내 노동통제 문제, 사회보장 감축의 문제, 인종주의, 성 차별 등 특수한 문제들의 뿌리는 결국 자본의 파괴적 합리성과 맞닿게 된다"며 "이 체제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은 의식적인 연대로부터 출발한다"고 역

설했다. 또 연대의 구체적 모습은 '남성과 여성,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건강한 자와 장애인, 젊은이와 늙은 이, 생산적인 사람과 비생산적인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취업자와 실업자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분열의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빠띠스파 민족해방전선의 다니나 다미안 씨는 "지구화의 물결 속에서 백만장자는 더욱 부유해졌으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며, "모든 차별과 학대가 없어진 세계에서 살고픈 희망과 바람으로 정치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 멕시코의 한영노동조합,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로마치', 한국의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사례를 발표했다.

둘째날인 10일엔, 실업, 생태계, 이주노동자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워크숍이 진행됐다. '실업의 망령'

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오전에 열린 실업 워크숍에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례없는 호황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 온 노동 운동가 스티브 켈러 씨는 "식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며, "이는 실업률의 감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즉, 파트타임 노동과 임시직 혹은 계약직 노동의 증가로 미국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 유지가 힘든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유로마치의 크리스토프 아귀동 씨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난 겨울의

프랑스 실업자 투쟁이 있기까지는 사실 수 년이 걸렸다"며 "현재는 실업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운동세력으로 조직했을 뿐 아니라, 흑인,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모든 종류의 사회적 배제에 맞선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시간에, 강수돌 교수(고려대)는 "끊임없이 분열과 경쟁으로 모는 현 체제 속에서 실업 문제는 필연적"이라며,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 노동시간 단축, 생계비 지급과 같은 구체적 대책이 의미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일엔 '세계 민중들의 연대를 위한 투쟁네트워크' 등에 관한 토론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며, 12일엔 종료에서 오후 2시에 '지구적 민중행동의 날'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에 국내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국 농촌민들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국은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의 지배와 IMF체제 아래 대량실업, 부의 불평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다. 특히 태국의 농민들은 경제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1:19에 달하는 노동간의 소득격차와 농지박탈, 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95년 12월 14일, 이들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에서 착취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난한 민중이 개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팍물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을 계기로 태국의 농민운동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가난한 자들의 모임>은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투쟁과 IMF로 대표되는 초국적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96년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럽정상회담'(ASEM)에 맞서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륙간 경제협력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에는 △빈민의 주택권 보장 △농민의 다국적 기업과의 교섭권 보장 △토지의 공정한 분배 △국제협정 체결시 민중의 참여권 보장 △농가부채 상환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백21개 요구안을 채택하고, 2만여 민중의 99일간의 걸친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이끌기도 했다.

이러한 태국 민중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여전히 "부자를 보호하고 빈자를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모임>은 태국의 민중들에게 몇 가지 주요한 성과를 안겨다 주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정책, 토지수용시 농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제공, 작업장내 안전조건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태국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안겨다준 가장 큰 선물은 신자유주의와 부패한 정치권력의 지배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투쟁을 통한 성취의 경험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2일(토)

제 12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파괴에 맞서 연대로"

###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우리,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는 한국인들이 모은 투쟁기금을 전달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98서울국제민중회의는 이처럼 참석자들 모두에게 '연대의 씨앗'을 품어준 채 11일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에서 발표된 각국의 사례들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이 실업, 가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 근원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폐회에 앞서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기업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인 전략으로 인간의 존엄과 복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자주성의 증대, 생존권의 보장, 불평등의 제거, 환경의 보호 및 원주민의 자결권 보장을 위해 진정한 대안을 추구할 기회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회의는 오직 첫 걸음에 불과하며, IMF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국의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와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수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 정리해고에 맞서는 한국 민중들의 투쟁에 무조건적인 연대를 보낸다"며 "1백 명 이상의 민

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 인권 탄압과 정치적 압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저녁, 필리핀 '공무원의 단결과 진전을 위한 연맹' 대표 페르디난드 씨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인 민영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르디난드 씨는 "상수도와 전력,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민영화는 결국 민중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상승만을 의미한다"며 "민영화를 먼저 경험한 여러 나라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푸에르토리코 전화회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저항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 24시간 동안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민영화와 탈규제에 반대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페르디난드 씨는 밝혔다.

이어 강력한 반독재 투쟁으로 수하르토 정권을 퇴진시킴으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민주주의학생연대) 씨는 인도네시아 학생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푸스파 인사니 씨는 "수하르토는 물러났지만, 후계자인 '하비비가 민주주의를 연다'는 말 역시 거짓"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항쟁 당시 인도네시아의 시위대가 중국인들을 약탈, 강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것은 군부가 선동해서 생긴 일일 뿐, 민주세력들과는 무관하다"며 "정치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시켜 관심을 탄 대로 돌리고, 민주세력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군부의 고전적인 술수"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해외 참석자들은 12일 종료에서 열릴 실업자 대행진에 참석해, 한국의 노동자·실업자들에게 대한 연대의 의지를 과시할 예정이다.

### 유가협 후원회 재건

회장에 이혜동 목사

유가협 후원회가 4년만에 재건됐다. 94년 10월 제5차 총회를 끝으로 활동이 중단됐던 유가협 후원회는 11일 저녁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차 총회를 갖고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후원회장으로 선출된 이혜동 목사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가 먼저간 넋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산 자의 부끄러움을 갚는 일"이라고 밝혔다.

###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9월 14일 - 19일)

□ 기념주간 선포식

·때: 9월 14일 오후 2시 ·곳: 조계사 대웅전 앞

□ 국민 대토론회

·때: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곳: 조계사 대웅전 앞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백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노조 활동가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여전히 범죄혐의자들과 수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여성 및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불충분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는 바다.

한국정부는 97년 말에 밀어닥친 한국의 경제위기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관심과 자원을 인권보호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경제위기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인권침해를 양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급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정치범의 석방 유엔인권위원회와 여타 유엔기구의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과 더불어 국제조약이 부여한 한국정부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동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15일의 사면으로

94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석방된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석방된 수인의 자리가 다른 새로운 수인들로 빠르게 채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사면대상에서 한국의 법률(국가보안법 포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 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한 참석,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 임의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자 및 노조활동가들의 권리 남한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부 기본 노동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관심 사항은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파업행위나 시위를 조직한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과 학대 그리고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사실 한국에는 실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써,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둘러싸고 그 투명성이 미흡한 데 우려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준비위원회가 국제앰네스티의 제안을 포함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준비위원회와 관련해 열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권단체, 변호사 및 학자 등 한국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정부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수인들, 그리고 과거 정부 아래 불공정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정치적 수인들을 석방하라.

· 노조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행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월에서 7월 사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노조활동가들을 석방하고, ILO조약 제87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라.  
 · 안기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 고문,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라.  
 ·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 여성, 이주노동자나 망명희망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소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라.  
 · 법집행 공무원들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1998. 9. 국제앰네스티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

- 때: 9월 14일(월) 오후 2-6시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종로 4가 종로공원 주차장 옆)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 제1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보고회
- 제2부: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숍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5일(화)  
 제 12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오편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종로성당에서 ‘양지마을·송현원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대회’를 갖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단 구성’이 제안된 까닭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시비가 일회적인 폭로 등에 의해서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구속된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가 87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다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어 양지마을에서 노예왕국을 건설한 것도 사건 이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실적으로 관계당국의 내실있는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 일반의 관심도 희박한 상태에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만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을 △사회복지 및 법학 분야의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단체 활동가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및 보고서 발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으로 민간감시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근본대책” 촉구 한편,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에 이어 열린 ‘양지마을·송현원 사건 사후대책에 관한 워크숍’에서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우리사회에서 부랑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 한 구조적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기 인천은혜병원 건강관리소장은 “시설에 사회복지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을 시설 내로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박태영 교수(사회복지학)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랑인시설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며, “부랑인들을 분류해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 시설 등 전문기관으로 보냄으로써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부랑인들을 일시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IMF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랑인들을 계속 시설 내에 장기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해결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설 비리가 토착비리로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며 정치인에 대한 압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워크숍 도중 객석에서는 “시설 내에서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가 무척 심한데 그러한 사안 자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수교육학과 제학중인 한 대학생은 “양지마을의 문제는 예비다농이원에서도 모두 발생했던 문제”라며 “때론 이러한 논의를 해본들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회의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는 “때론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현실이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9월 15일(화)
  - 김진성(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 유용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 9월 16일(수)
  - 이정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 ▶ 9월 17일(목)
  - 전제순/박충렬(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4부, 속행
  - 홍덕희/전경렬(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안신정(교통방해, 한총련)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속행

#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제3차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이 14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렸다.

법국민추진위원회(법추위)가 주최한 이날 선포식에서 이창복 공동상임대표는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열사들의 정신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열사정신을 되새겨 민중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포식에는 1백여 명의 관련 인사와 학생들이 참가했다.

법추위는 선포식을 마친 후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자 처벌문제와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진상규명 특별법' 초안을 제출한 민변측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피해자 등 과거 70, 80년대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별법 초안에서 제안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델라 정권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강제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의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조사는 확실하게 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은 그 시효를 연장시켜서라도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는 진상규명위원회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용서는 처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을 제정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 부위원장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은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명명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검찰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원회보다는 자체적인 힘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에 의한 진상규명을 제안했다.

한편, 법추위는 15일, 16일 조성만 거리전과 전태일 거리전을 갖기로 했으며, 19일 시청앞 광장(또는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법국민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종교계에서도 이번 추모주간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17일 저녁 6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개최하며, 조계종은 18일 오후 3시 '범불교 합동 천도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 ◆ 9월 7일 (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민단체 인사 1백인,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 공동선언/방송노조연합, 방송개혁 11대 과제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89년 용공교사로 몰려 해직된 최중순 교사 복직/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백74국 중 30위 차지

### ◆ 9월 8일 (화)

충남 아산경찰서, 횡령·강제노역 혐의로 뿌렌나에육원 이사장 부부 수사/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잇따라 검거/만도기계 노조,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혐의로 경영진 고발/서울국제민중회의 서울대에서 개막/부산지방경찰청,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 '영남위원회'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버마 군사정권, 국회의원 등 야당 관계자 2백20명 체포/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 명 시위, 하비비 대통령 사임 및 수하르트 재판 회부 등 요구

### ◆ 9월 9일 (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 밝히는 서명해/노동부, 7월말 현재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모두 13만여 명, 체불총액은 5천5백6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유엔개발계획, 전세계적으로 20%의 고소득 국가국민들이 전세계 소비의 86%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불과 1.3%를 차지하는 등 빈국과 부국 격차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

### ◆ 9월 10일 (목)

박상천 장관, "12월 10일 인권법 공포, 국보법 모호한 조항 정리돼야" 발언/여당,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기회/우이동 수해민, 무허가 이유로 집 복구공사 못해/노사정 위 여론조사, 전국 성인남녀 1천명 가운데 89.5%가 "노동자들이 교통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이 교통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5%에 달해/경남 경찰청,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여성특별위원회, 여성 차별과 성희롱 등의 분쟁에 대한 준사법권(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 추진키로/파업농성 벌인 아남 반도체 노동자 5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피에르 싸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개정, 양심수 석방 및 준법서약제 폐지"등 촉구/영국 BBC 라디오 뉴스 '투데이', 시각장애인 기사를 진행자로 발탁하고, 점자 정보관 등을 설치한 특수 방송실 마련

### ◆ 9월 11일 (금)

송과구,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갖춘 방이복지관 운영

### ◆ 9월 12일 (토)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참석 인사 및 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 실업자대행진 계획/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 보험금 노린 아버지의 자작극으로 드러나

### ◆ 9월 13일 (일)

법무부, 교도소 내 모든 재소자에게 신문구독 허용키로

#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①

## 미국·프랑스 노동자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발표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 완전고용 신화 뒤에서

#### 신음하는 노동자들

스티브 켈퍼(미국 노동운동가)

낮은 실업률(4.5%)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식권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더 자주 눈에 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간 노동 유연화 정책은 대다수 노동자들로 하여금 퇴직금·휴가·고용안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도록 만들었고, 수천만의 해고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실리콘 벨리에는 백발이 없다.

실리콘 벨리는 직업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40세가 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만 명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원마저도, 젊은이들로 대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해고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을 선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최근의 지배적인 추세다. 임시노동자의 경우, 여러 수당과 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방어를 위한 투쟁

지난 3-4년간 부쩍 늘어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열악한 노동조건의 부산물이었다.

작년 파트타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유피에스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교차 3시간 미만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

다. 이 투쟁은 40년만에 최초로 파업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55%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노동자계급이 계약직 노동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노스웨스트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의 항공사 노동자들도 풀타임 노동으로의 전환과 적당한 월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미국의 기업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유형은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내 공장의 인력 감축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전된 곳에서는 초기부터 노조결성을 막는데 최선을 다한다. 회사의 목표는 기존의 정규직 파업을 통해 이익을 더 창출하고,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결과는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로 드러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장이 이전해 간 멕시코의 노동조건이 이전보다 50% 이상 나빠졌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크리스토프 아귀통(실업반대 유로마치)

프랑스의 실업자 현황

프랑스의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천2백만 명(전체 노동인구의 12%)이다. 이 실업인구 가운데 1천5백만 명은 특별연대수당과 최저수입보조금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다른 절반의 실업자들은 전국실업보험청의 실업보장 기금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업수당은 한 달에 2천4백프랑으로 주거공간과 먹을 것을 찾는 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공식 통계에는 어떠한 형태의 실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들과 전례없이 증가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략 2천7백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시간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까닭에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벌면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자들이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기까지는 수년동안의 지속적인 활동과 투쟁이 있었다. 최초로 실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조직은 노동총동맹(C.G.T)으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94년이 되자 실업에 대항하는 연대투쟁 조직인 "실업에 맞서 행동하자!(AC!)가 출범했다. 이 운동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가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노동조합과 실업단체들, 사회적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는 조직체들 그리고 노동총동맹과 인권동맹 및 수많은 지식인들을 연합하는데 있었다.

3개월 동안의 결정적인 투쟁

97년 중반 경, 실업자들에게 사회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온 실업사무소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업자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노동총동맹 소속 실업자들은 실업사무소 건물을 차례차례 점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점거된 기관의 숫자는 40여 개에 이르렀다.

한편 다른 실업자 운동단체들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긴급한 사회적 행동" 주간을 선포·조직했다. 이는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에 대항하는 동시에, 최소 실업수당의 증액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학생들과 임금생활자들로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실업자운동의 교훈들

우선, 실업자운동이 수동적이고 자기 폐쇄적이라 얘기되는 실업자들 자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둘째, 실업자운동은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실업의 증가와 직업의 불안정성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며, 반드시 무언가 긴급한 새로운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공통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6일(수)  
제 12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울산은 울산이 아니다. 노동현장은 통제되고 노조간부는 구속되고 가족들은 쫓기고...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노사간 합의를 무색케 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까지 수배해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파업이 끝난 지금 체포조까지 만들어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회장 이영자(35), 부회장 하현숙(33) 씨를 붙잡기 위해 시택과 친정 등으로 쫓아다니고 있다. 가족들은 "정부가 장관을 보내 중재까지 해 놓고 어떻게 가족들까지 수배할 수 있느냐"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수배된 두 사람은 3, 4살, 또는 5, 6살밖에 안된 아이들을 데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이 수배중인 이유는 경남도경이 지난 8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시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감압적으로 진압해 부회장 하현숙 씨는 왼쪽 발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회사측에 의해 고소·고발된 노동자 검거에 나서 협상실무요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있다.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은 지난 8월 24일 노사합의로 정상소업이 진행되자마자 '고소·고발 취하' 약속을 뒤집고 8월 30일 노조 산업안전부 박병석 부장을 연행한 데 이어 9월 3일 황치수 수석 부위원장, 5일 주윤석 사무국장, 7일

박유기 기획실장과 김동찬 대외협력실장등을 전격 연행했다.

회사측은 또 노동조합 조직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 본격적으로 노조 파괴에 나선 모습이다. 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조정리해고자 위로금 문제 △무급 휴직자 처우 문제 △가압류 취하, 징계 철회, 고소·고발 철회 등 주요 합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경비들을 동원해 노조간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사적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와 관련, 노조측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그 여세를 몰아 지금 진행중인 전환체치를 사측의 의도대로 마무리하고 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된 박유기 기획실장의 아내 이선

희 씨는 "수배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고 회사와 정부는 합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현 정권이 노조간부 사냥과 가족 수배에 나선 것은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을 끊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국을 부르는 행위"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새로운 책

## 『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펴냄/350쪽/1만원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주노동자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자료집이 출간됐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근 뉴스와 보고서 등을 번역해 『세계 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 나라의 상황을 통해 아시아경제위기의 본질과 IMF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호랑이 길들이기)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상 △아시아 국가별 이주노동자 현황 및 민간기구의 활동 △G7 국가의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올 여름 내내 팍팍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 구입문의: 744-9063(외노협)

##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 사빠피스파

디아나 다미안(사빠피스파 지원단체 소속)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원주민 여성

사빠피스파의 근원지, 치아파스주는 멕시코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주로, 특히 유전의 매장량이 대단히 풍부하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 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되었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원주민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원주민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원주민공동체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과 통제에 사빠피스파 해방군을 형성시킨 중요한 조건이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사빠피스파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원주민들의 토지 경작을 보장해주던 헌법 제27조를 폐지도록 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94년 1월 1일 사빠피스파 민족해방군은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를 요구하면서 멕시코 남동부의 치아파스 주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많은 원주민들이 영양실조에 빠져있고, 치료가능한 병을 갖고서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멕시코의 현실을 전세계에 폭로했다. 또 사빠피스파는 여성·농민 등 제 사회단체에 가난, 착취, 좌절이라는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사빠피스파와의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많은 협상 이후, 원주민의 권리와 문화에 관한 산 안드레아스 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지속함으로써 두 얼굴을 보였다. 급기야 세디요 대통령은 협정의 체결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유됐고, 많은 이들이 암살 혹은 실종됐다.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학살 또한 계속되고 있다. '악떼알'에서는 50여 명을 학살했고, 임신했던 여성의 배를 가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보스께'에서도 9명이 학살됐다. 정부는 이를 원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살의 배후에는 정부의 비밀 경찰이 있음이 자명하다. 이는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전쟁에 다름아니다.

사빠피스파와 동조자들은 오늘날도 시민불복종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는 세금, 보건, 교육 어떤 것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한편 사빠피스파의 투쟁은 멕시코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저항할 것이며, 스스로를 교육할 것이고 착취를 비난하고 불복종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지난 7월 16일 이후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마을(부랑인시설) 및 송현원(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한 문병기 씨등 12명은 14일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양지마을과 송현원만을 문제 삼는 것은 문어발 한 두 개 자르는 격

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성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노제중(전 양지마을 이사장, 구속중) 씨가 사회복지사업가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지마을에 비해 송현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송현원 원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퇴소할 사람은 퇴소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지마을과 송현원 퇴소자들에게는 생활대책과 강제유급에 따른 보상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퇴소자들은 "생활대책이 전무해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다시 노숙자와 부랑인이 되어 떠돌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생활대책 마련과 시설에서 당한 인권유린과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의회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보건사업 수행 △정신요양시설의 개방화 △수용 인원의 상한선 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남정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형법상의 특수감금죄로 처벌'(45조)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 정신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문> 현대자 노조위원장 김광식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 36일간의 뜨거운 열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내부적 단결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지 못한 채 이 투쟁의 법적 책임을 위하여 스스로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좌절과 회한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서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수배와 구속, 징계와 해고 등의 고통과 희생은 끝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노사정간의 합의사항이자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노사정간 모두의 공멸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제 살을 도려내는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은 내부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오늘의 이 경제적 어려움과 공권력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아보고자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사정간의 합의사항을 농성대오의 해산이후 회사는 하나씩 파기하고 있어 더 이상의 교섭을 통하여 진전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충의를 통한 이 투쟁의 마무리는 지도부의 욕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투쟁대오가 해산한 지금, 합의정신보다는 엄연히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통한 투쟁의 마무리조차 위원장의 욕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 합의정신을 파기한 회사측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틀에 대한 노사정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구체적 세부적 사항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농성대오를 해산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뼈아픈 회한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농성대오를 쫓는 것은 위원장인 저의 순진함과 실수였던 것입니다.

지금 회사측은 후속사항인 고용안정 기금과 고소, 고발, 징계, 가입유문제에 대하여 정상조업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 할 사항인 전환배치 문제를 무기로 하여 전환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상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사항을 파기한 채 이번 투쟁을 주도해온 무급휴직자

투쟁대오가 해산한 지금, 합의정신보다는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농성대오를 쫓는 저의 순진함과 실수였습니다

동지들과 현장활동가 동지들에게 무차별적인 체포, 구속,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합의정신의 파기이며 노동조합내부의 어려움을 틈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장악하여 밀로부터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켜나가려는 비열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적 해결의 결과가 대량구속과 수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챙기고 보수 기득권층의 비난 여론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약속과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노동행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폭력업벌의 시퍼런 사슬은 파업을 지키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진

행된 노동자들에게만 겨누지고 있으며 정몽규 회장의 폭력에 대한 고소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법이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정상조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과 정부 중재단이 약속한 사법적 책임의 최소화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수배자는 늘어나고 구속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번 파업투쟁에 대한 모든 사법적인 책임은 위원장인 본인에게 지워져야 하는 것이 노사정간의 합의정신이자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라 하겠습니까.

36일간의 기나긴 고용안정투쟁은 회사나 노동조합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노사정간의 합의정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재연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만을 남겨둔 채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 저의 심정은 심장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동지들이 감옥에 있으며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배자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조합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회한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감으로서 더 이상의 수배와 투옥의 고통은 끝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은 더 이상 노동조합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매듭짓지 못한 것은 이제 회사와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번 투쟁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이며 더 이상의 이러한 아픔이 재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1998. 9. 12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7일(목)

제 12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대학생들의 '집회·시위 참가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주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대학생들의 대회 참가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이날 대회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한 가운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심검문을 벌여,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 2백70여 명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단지 '한총련이 결합하면 농민대회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집회참가를 차단했으며, 혐의사실도 없는 대학생들을 강제연행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국농민회 배형택(민원투쟁담당) 씨는 "농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배제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임의로 대학생들을 검문·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농민마저도 강제 연행해 경찰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판결을 내린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다. 배 씨는 "경찰이 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농민들을 강제로 하차하게 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으며, 전경들이 두 줄로 늘어선 사이로 행사장에 입장한 농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행된 대학생들은 전원 훈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위원인 테오 반 보벤(네덜란드) 씨와 반차별·인종주의 국제운동본부 회장 니말카 페르난도(스리랑카) 씨,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피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군조직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긴장에 의한 본능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

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 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쟁과 광주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태와 부당한 사후대책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에 의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나 이들은 가부장적인 억압하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직접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왕의 신성을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요리코 마도카 참의원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는 천왕의 실수에 대한 공식인정으로 볼 수 있어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제시했으며 일본정부의 배상과 사죄거부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정부차원의 사죄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 때: 오늘 오후 1시 30분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증회의 ③ 끝

##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민영화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정부 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거나 정부 활동 및 기초 사회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러처(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성을 강화하고 ②정부 자금 및 자원을 증대시키며 ③기업의 소유를 확대하고 ④자본 시장을 창조하며 ⑤정부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목적들은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실제 민영화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쉽게 거짓임이 드러난다.

#### 필리핀에서의 민영화

필리핀은 민영화를 추구한 최초의 나라들 중 하나다. IMF와 세계은행은 83-85년의 경제위기 기간, 새로운 채무의 대가로 필리핀에 구조조정 프로그램 강제했다. 87-90년 사이에 2백 30개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이들의 매각을 통해 정부는 2백60억 필리핀 페소를 거두어들였지만, 민영화로 인해 초래된 6백60억 필리핀 페소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백20억을 잃었다.

라모스 행정부는 민영화를 추구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사회서비스들이 민영화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 에스트라다 행정부는 1백 개 이상의 공공기구나 자산의 민영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9년도에 9백억 필리핀 페소에 달할 수도 있는 국가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 수입을 창출하려는 주요전략이라고 선전했지만, 정부의 파산 상태는 요즘 들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민영화의 승자와 패자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 기업들이다. 이전 라모스 정권은 수익이 나는 국영기업들마저도 손해를 보면서 외국 기업에 팔아버렸다. 또 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자연자원과 국유재산의 이용, 대출보증, 이익의 100% 소유와 제한없는 본국송금, 공식적인 개발원조의 사용, 면세 등의 혜택을 보장했다. 외국기업들은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또다른 수혜자는 국내의 거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정치관료들과 함께 외국 자본가들과 사업상의 협력자로 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팽창시킨다.

민영화는 정부의 부패심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거래에서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친인척들은 수수료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

#### 민중 부담 오히려 증가

민영화의 승격에 민중들은 철저한 패배자이다. 필리핀의 경우, 6백60억 페소에 달하는 민영화된 기업들의 대출금이 국가의 금고에서 나온 자금으로 지불됐다. 이것은 민중들의 돈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병원을 짓고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도록 쓰여야 하는 돈이다.

또 기반시설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랬듯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중들의 부담만 증가하고 공공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영화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상실을 가져온다. 영국에서는 7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르헨티나의 정부노동조합은 약 20만 명이 민영화의 결과로 해고당했다고 추산했다.

### 행사와 동정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  
·때: 9월 17일(목) 오후 4시 ·곳: 기독교회관
-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제  
·때: 9월 18일(금) 오후 3시-6시 ·곳: 조계사 대웅전  
·주최: 범불교 합동 천도제 준비위원회 (734-6401)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희망으로!  
·때: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1시부터 ·곳: 연세대학교 상경관
- 제2차 실직노숙자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9월 18일 - 10월 30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2층 강당(723-5056)
-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때: 9월 19일(토) 오후 3시 ·곳: 서대문 독립공원
- 행동동 철거민 대책위 투쟁자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때: 9월 19일(토) ·곳: 행동동 철거민대책위(293-1848)
- 8·15 통일대축전 정리모임  
·때: 9월 19일(토) 오후 6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지하 한식당
- 독일노동문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때: 9월 21일(월) 오후 7시 ·곳: 가톨릭 노동사목회관
- 제1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때: 9월 22일(화) 오후 2시 ·곳: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8일(금)

제 1212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그어 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법국민적 협의와 홍보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등 전국의 29개 민간단체들은 17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결성하고 '밀실 추진 중단 및 법무부 안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추위는 결성식에 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민사회와 일체의 협의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든 법무부 안을 토대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권위주의적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하고자 '민간단체 공추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공추위의 입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민주적 토의과정과 공개대형성노력'을 중시해야 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밀실행정에 의해 진행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즉, 인권법 제정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재의 인권현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데,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그 내용을 떠나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권위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이다. 동국대 한상범(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교수는 "법무부가 시한에 쫓기다 보니 급행열차를 탔다"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비민주적인 입법추진과정 뿐 아니라,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의 내용조차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의 안은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고 '시정권고' 수준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담초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시정하고 다른 국가기구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광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추위의 결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추위는 △민간단체 법안 마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인터넷을 통한 공추위 활동내용 공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부문 및 지역 조직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련 인터뷰> 2면

##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뷰> 광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 인권법은 어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비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 역시 다른 국가기구를 감독, 견인,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상위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법은 헌법에 준하는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부터 법안을 공개하고 민주적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법률이나 기구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구와 법률이 제자리와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이 인권법, 국가인권기구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입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민간단체의 현장성, 창조성, 현실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활용하면서 인권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범사회적 교육과 홍보, 인권현실 및 과제에 대한 인식이 법안제정 과정과 나란히 가야 한다. 조직된 국민이라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의 제·개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초과정부터 범국민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 정부가 설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 소비자보호원,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있는

데, 결국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무부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가 설정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역시 취약하다. 겨우 '시정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권한이 설정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인권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인권현실이나 과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정부가 외국의 입법례만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만들다보니 이런 모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 법무부가 공명심 때문에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고할 때까지 엠바고(보도 통제)를 걸었다. 방송의 홍보프로그램도 없고, 따라서 학자들 가운데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이다. 감사 몇 명이 법안을 만들면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 뜻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 '공추위' 결성의 의미와 활동 전망은  
 = 29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공추위는 관련단체를 제외하곤 사실상 거의 모

든 전국적 민간단체를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70-80년대 양심수 문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와 90년대 여성·장애인·빈민·노동 등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둔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공추위의 활동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에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는 50년만에 인권탄압시대에서 인권보장의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이는 헌정사적 인권사적 분수령의 의미를 갖는다. 자력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일궈온 끝에 드디어 인권존중의 결의를 내놓는 것은 선·후진국 어디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더불어 공추위는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를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권 프리미엄이 붙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파리원칙(93년 유엔 인권위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의 한계를 보완, 발전, 개발, 창조하는 역할을 한국의 민간단체가 담당히 떠맡는 것이다.

- 법무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 법무부의 안은 부서 내부의 안일뿐이다. 법무부 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간단체와 국민의 토론·검증에 부쳐야 한다. 범사회적인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과정과 동시에 인권캠페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

###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박상천 법무부장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등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은 법무성 안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 일본보다도 진보적인 것이며 인권위원회 설치로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19일(토)

제 12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선고 받은 재소자에게 치료약 반입이 불허되자 동료 재소자들이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삼근)는 16일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가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중인 재소자 12명이 '한약 반입 허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집단적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구치소측은 "박 씨에 대해 양약 반입은 허가했는데도 박 씨가 양약 복용을 거부해 치료가 안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박 씨에게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양약 반입은 허용하면서도 한약의 반입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측 관계자마다 그 설명이 다르다. 한 관계자는 "한약은 보관이 용이하지 못하고 약품의 성분검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한약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한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도소의 의무관과 소장이 판단·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

**제9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때 : 9월 19일(토) 오후 3시  
 곳 : 서대문 독립공원(3호선 독립문역)

안과에서는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고 있으며, 의무과의 결정이라기보다 보

<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국제민중회의에 참석차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푸스파 인사니(민주주의 학생연대 소속) 씨로부터 인도네시아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 수하르토가 물러나고, 하비비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가?  
 =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하비비의 집권은 군부와 집권엘리트들이 원하던 바였다. 루피아 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하비비는 여전히 군대를 동원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잠시 합법화되었던 활동들이 다시 공산주의운동이라는 흑색선전으로 인해 탄압받고 있다.

- 하비비 정부에서 수하르토를 처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 하비비가 수하르토 일가를 재판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민중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중들이 정말 희망하는 바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민중들은 수하르토가 장기독재를 통해 축적한 전 재산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MF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IMF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MF는 단지 외국 자본에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울 뿐이다. 우리는 IMF와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필요없다고 본다. 선진국이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외채의 50%를 탕감해 줘야 한다. 이는 선진국이 이제까지 우리를 착취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몫이다.

- 인도네시아 항쟁 당시 화교에 대한 공격은?  
 = 언제나 수하르토 정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해 정부에 대항할 때마다, 인종문제로 시각을 돌리려 했다. 그 주요 표적이 바로 중국인, 기독교인과 같은 소수자다. 지난 5월 대규모 집회가 있던 날, 군부와 그의 조종 받은 범죄자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키도록 했다. 기아에 허덕이던 민중들은 음식과 물건을 훔쳤을 뿐,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는 군부와 그 하수인에 의한 것이었다. 그 증거가 이미 인권운동가와 성직자들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인권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토의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 보고안은 그야말로 시안일 뿐, 법무부의 확정안은 아니"라며 "다음주 중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보고 때 민간단체의 의견도 함께 보고하고, 그후 민간단체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법무부안을 확정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추위가 "과거의 정부 관행으로 볼 때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언론공개를 통해 법무부 안을 확정안으로 발표해 버리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언론공개는 하지 않겠다. 민간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은 수렴하고 이후 확정안을 갖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대통령 보고와 이후 민간단체와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국회에 법안을 상정

## 계훈제 선생 치료비 모금

평생을 을골개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오셨던 계훈제 선생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투병중입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계훈제 선생님의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 서울은행 14504-3993302  
(예금주: 윤여연)

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경 인권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 재야운동가 인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선추진연합 전 사

##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왔다(편집자주).

-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어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안 마련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공추위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 장관은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미 참고했으므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법 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지는 의견을 전달하자, 장관은 "민간단체와 함께 만든 안은 '국민의 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민간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인권법의 주요 골격,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 구성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장관이 이를 수락했다.

-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가인권기구가 특수법인의 형태로 권고기능밖에 없는 약체기구라는데

= 그렇다. 법무부 시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시안 공개를 요구하자, 장관은 "보고에 앞서 시안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는 "인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고 답했다. 우리는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식의 국가인권기구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준헌법적 기구여야 하며 '인권 감사원'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었으며, 현재 재야활동을 중단하고 생업을 준비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안기부의 수사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부가 통상적인 재야 활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 등을 이적행위로 규정해 공안세력의 입지 회복을 노리는 것이라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2일(화)

제 12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서울시가 또다시 시내 노숙자들을 시설에 강제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물의를 일으킬 태세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종교·민간단체 등과 함께 한달간 노숙자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여, 실직노숙자는 노숙자합숙소(희망의 집)로, 부랑인은 부랑인수용시설인 '은평의 마을'로, 노숙·병약자는 '꽃동네' 등 요양시설에 입소 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과 서소문공원 등에 상담팀을 투입해 노숙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을 강제로 단속·수용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노숙자들의 반발과 인권침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노숙자들을 강제수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정신질환자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노숙자들을 강제 연행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랑인시설에 넣는다는 내용의 '노숙자 특별대책'을 추진했다가 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 직전에 유보한 바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노숙자 강제수용 방침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동절기를 맞아 노숙자에 대한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면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노숙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절기 노숙자사고 예방대책이 강제수용 등 인권유린 방식으로 진행되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실업자대회의 참석자들은 "노숙자의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자율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의 관계자는 "근본적인 실업대책도 없이 노숙자들을 일방적으로 수용시설에 넣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며 "여타 부랑인시설과 마

##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속보>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상권)에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 반입 허가'를 요구하며 시작된 양심수들의 집단 단식농성이 21일로 5일째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구치소 안에서는 단식중 쓰러지는 재소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동조단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밖에서는 구속자 석방과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단식중인 이희 씨는 지난 19일 오후 쓰러져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링거주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한 뒤 다시 단식을 강행하고 있다. 김희경 씨는 혈압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링거주사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 재소자 5명이 동조단식에 들어가 단식중인 사람은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21일 해외인권단체, 개인을 비롯한 3백여 곳에 긴급구원활동을 요청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의 항의 활동도 시작돼 미국의 노동인권단체인 '미국 과태탈라 노동교육센터'가 지난 5일 박근우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환자들에게 대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구속자들의 석방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며 한약 반입과 외부진료를 막고 있는데 23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민대책위가 24일 오후 1시 구치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진 뒤 가족들과 공동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9월 19일자 참조).

@부산주례구치소@ 051-324-5501-2  
의무과장, 보안과장, 구치소장  
부산 사상구 북부산 우체국 사서함 58호(우편번호 616-600)

#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 · 프라이버시 · 알 권리 · 성희롱 등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9월 15일부터 한달간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사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를 백서를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 접수처: (1)전자우편- 진보네트웍,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Spic

(2)메일링리스트-freespeech@mail.cpnet.or.kr

(3)계시관 - 진보네트웍 GO FREESPEECH 3(상업통신망 현황 자료실)

▶ 신고내용: (1) 표현의 자유 침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중지, 접속경로 차단 등/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 사례/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특히 인신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 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3) 자유로운 온라인공동체 구성권 침해 - 온라인 시위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경우 등

(4) 알 권리 침해 - 정당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 당한 경우

(5) 온라인 성희롱 등

## ♣ 바로잡습니다

9월 9일자 1면 '노조 건설 이유...' 기사에서 전향순, 이순미 씨가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전향순, 이순미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 인권시평 필진 개편

98년 하반기 인권시평 필진이 개편되었습니다.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이태곤(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정유진(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씨가 인권시평의 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8년 상반기 인권시평을 맡아주신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천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 9월 14일 (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부천나예육원 이사장이 이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입양시킨 사실 밝혀내/절도중이던 신규철 씨, 충남 당진군 순성면 순성파출소 순경이 쓴 총에 맞아 사망/전주교,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2학년 임 아무개 군에게 무기징화 처분/안기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국민회의, 공기업 민영화법 추진키로/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3천5백여 개 소형 소각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할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 (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 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직원 박화영 씨 등 2명 불구속 입건/전국농민회,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대회 갖고 식량자금,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촉구

◆ 9월 16일 (수)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주제로 열려/프랑스 정부, 피의자가 연행 즉시 변호사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 (목)

29개 민간단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서울시, 노숙자들을 합숙소나 수용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키기로/부산주례구치소 수감중인 양심수 12명, 박경순 씨에 대한 의약품 반입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단식농성 돌입/전 민주주의민족통일대선총남연합 사무처장 윤종세 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보건복지부, 주점이나 접객업 종사 금지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9월 18일 (금)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 일가가 7억 재산 축적한 것으로 밝혀져/전국 30여 개 대학 실업대책기구, 서울대에서 '청년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발족식 개최/구결로 연명하던 노숙자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절도 후 자수

◆ 9월 20일 (일)

노동부, 내년 고용보험 4천억 원 저자 전망/전주교 인권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작업 추진키로

#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이태곤(월간 「함께걸음」 편집부장)

## 인권 시평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생겨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는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의 당사자 강정우 군은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은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가족들 자체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논평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손가락 절단' 사건의 본질

즉 저소득층으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은 경제 위기와는 상관없이 늘 힘든 삶을 살아 왔고,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살 수 밖에 없는 빈곤층의 처참한 현실에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언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마산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필자에게 마산 사건의 충격은 인명경시가 아니라 아버지 강종렬 씨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 눈물겨운 사건의 배경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종렬 씨는 가난으로 인해 아내가 가출하고 난 뒤 자신은 폐결핵에 걸린 몸으로 공사판을 떠돌다 경제 위기로 인해 일할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강종렬 씨의 범죄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강종렬 씨가 처참한 현실에 계속

방치돼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추론해 보면 우리 사회 빈곤층의 암울한 현실에 새삼 몸서리가 쳐진다.

심중팔구 아들은 고아원에 보내지고 아버지 강종렬 씨는 노숙자로 전락해 거리에서 삶을 마치거나 아니면 양지마을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권유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국 5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빈곤층의 암담한 현실은 전혀 변

바로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에게 밥 한 끼를 먹여주는 미봉책을 실시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위기 때 인권에 기반을 둔 소외계층 정책이 마련되면 위기를 벗어나면 소외계층은 바로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답게 사는 길

지금 모두들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필자의 관심사인 소외계층 중에서도 더 소외된 이 땅의 장애인들은 최악의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 비장애인이 살기 힘들면 장애인이 더 힘들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버려지는 장애인들도 늘고 있고 보호시설마다 장애인들의 수용의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구걸하는 장애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거리를 걷다 보면 구걸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정말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데 장애인들을 생계 위기에서 구해줄 정부의 복지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변한 기구나 단체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소외계층은 고통 속에서 더 진한 상실감을 맛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결론은 자명하다.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을 계기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땅에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맞잡고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말이지 가난 때문에 장애인이 생기는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마산 사건의 충격은 인명경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 눈물겨운 사건의 배경이다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과실은 소외계층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즉 역대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IMF 사태를 맞게 되자 언론에 익히 보도된 대로 살 길이 막막해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거리를 헤메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비극은 지금처럼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설령 IMF 사태를 벗어난다 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IMF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은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 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 결합기 참관일정 · 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법무부가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교도소를 언론과 민간단체에 공개하기로 결정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34개 민간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청송교도소와 천안 개방교도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참관단체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간지와 방송사의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임, 전주교교정사목위원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담양산교회, 기독교세진회 등 34개 단체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교도소 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나지 않자 '실질적인 개혁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일정 중 청송 제1교도소와 제2교도소, 청송 제1감호소, 제2감호소 등 4곳을 개방하는데 각 30분씩을, 그리고 천안개방교도소에 1시간을 배정함으로써 1박2일 기간중 5개 교도소 및 감호소를 방문하는데 겨우 3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각종 오찬과 만찬, 교정당국 설명회 등에는 7시간여를 할애해 이번 행사의 동기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수용시설과 기술교육관 등 각 교도소의 특색있는 부분만을 참관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부적

인 참관코스는 참관자에게 조차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일정표가 알려지자 참관인으로 초청받았던 몇몇 단체들은 참관을 거절해 이번 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참관자 선정에 대해 "첫 행사라서 선정기준은 따로 없었으며 알고 있는 단체들 가운데 선정하다 보니 제외된 단체가 있었고, 언론도 법무부 출입기자로만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측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법무부에 출입하지 않는 모 시사잡지가 참관자로 선정되는 등 언론사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제소자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민간단체들이 제외되고 종교단체 위주로 참관단이 초청되는 등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숙자 동오점은 안돼"

### 서울역, 심야 화장실 개방 거부

서울역측이 서울역 주변 노숙자를 위한 화장실 개방 요구를 결국 거부했다.

현재 역 주변에는 약 1-2천여 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지만 역 안에 있는 화장실은 마지막 열차가 떠나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다. 결국 노숙자들은 한밤에 약 2km 정도 떨어진 서소문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8년 9월 23일(수)

제 12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이에 따라 국민승리 21 실업대책본부(본부장 권영길)는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화장실 24시간 개방 및 샤워 시설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3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냈으며, 지난 9월 16일 서울역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역 부역장은 "화장실을 개방할 경우 서울역 2층의 상가가 위협받고, 철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서울역 노숙 경험이 있는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조직부장 조일영 씨는 "서울역 1층 화장실의 경우 밖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문을 폐쇄하더라도 밖으로 문을 낸다면 내부 상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대책본부측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1층 화장실에 조그만 문을 뚫는 비용은 1백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19일까지 화장실이 개방되기를 재요청했지만, 서울역측은 19일 '철도 이용객이 없는 1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을 여객편의시설을 위한 대청소를 위한 시간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최종적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러나 실업대책본부는 "화장실이 있는 1층 판매표소는 6월 이전에는 개방을 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청소는 낮에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서울역측이 노숙자들의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않고 무성의하고 비인간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으로 실업대책본부는 서울역은 물론 공공기관의 화장실 개방과 노숙자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항의 전화 : 서울역 여객 2과 921-2528, 392-3143

##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서울시가 노숙자들을 시설에 분류·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1일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 가운데 일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자리나 먹을 것보다도 일자리"라며 수용방침에 대한 반발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합숙소 수용과 관련, 노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 등 합숙소내의 억압적 분위기와 처우 문제다. 더불어 합숙소에 입소한 뒤에도 일부가 다시 부랑인시설로 수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역광장의 노숙자 조 씨는 우선,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반감제적으로 진행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합숙소 입소를 신청하지 않고 노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부랑인시설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숙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21일부터 경찰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을 단속해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숙소 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도 부랑인 수용시설에 데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부랑인시설에 수용될지 모른다는 압력 때문에 노숙자들이 억지로 노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숙소에 일단 입소하더라도 일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랑인시설로 보낸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추운 겨울에 일당 1만5천 원 밖에 안되는 공공근로사업에 억지로 나가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은 2만7천 원 안팎이나 내년 1월부터 노임이 1만5천 원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용이 능사 아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동절기 노숙자 대책은 '수용과 관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노숙자 입장에서선 '일

자리 보장과 자활'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 차 씨는 "추운 겨울에 일당 1만5천 원을 받고 길거리에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노숙자들의 숙소를 마련한다면서 한편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을 줄이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더라도 최소한 여인숙에서 잠자고 밥 사먹을 정도의 노임을 주어야 자활이 가능하다"며 "노숙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침식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노숙자는 "겨울을 맞아 노숙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나온 것이 결국 노숙자 수용방침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실업대책사업 실속 없다"

한편, 실업극복운동의 하나로 진행되는 일부 종교·민간단체들의 실업 및 노숙대책사업과 관련해, 노숙자들은 "실속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민간단체가 서울역에서 진행중인 신원카드 발급 및 상담활동에 대해, 노숙자 김 씨는 "취업알선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카드도 만들고 여러 차례 상담도 해줬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며 "그 단체는 단지 상담일지에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노숙자들도 "실제로 상담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1백 명 중 한 명도 안된다"며 "대부분 저학력 일용직이었던 노숙자들이 일할 자리는 없고, 단체에서 소개해 준 공장에 찾아가봐도 허탕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22일 서울역 광장에 게시된 취업정보판에는 모집이 이미 끝난 회사의 구인정보가 소개되어 있거나 심지어 모집계획이 없는 회사의 구인정보가 실려 있기도 했다.

일부 노숙자들은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장사를 하려는 건지 노숙자를 위한 건지 모를 정도로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전혀 없다"며 "정보보조금이나 타내려고 실적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 가운데엔 "차라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업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 "못 배워서..." 푸념

이처럼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노숙자들 스스로 뚜렷한 대책을 요구하며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한 노숙자는 "못 배워서 아는 게 없고 힘도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계훈제 선생 돕기 모임

### 24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오다 최근 투병 중인 계훈제 선생을 위해 자그마한 행사가 마련된다.

계훈제 선생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각계 인사들은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철학카페 느티나무'(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2층)에서 '계훈제 선생의 쾌유를 바라는 만남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계 선생의 병원비도 모금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선 저녁시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계훈제 선생을 간병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921-4090 김은주)

모금계좌: 서울은행 14504-3993302 (예금주 윤여연)

## .....김주의 공판

▶ 9월 25일 (금)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형사5단독, 속행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4일(목)  
제 12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 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진)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불허함으로써 국내외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던 부산구치소(소장 김상곤) 측은 23일 △박경순 씨에 대해 한방치료 허가 △디스크환자에 대한 주 2회 물리치료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로써 박경순 씨는 23일 오전 구치소 외부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의원은 "박 씨가 2주 정도는 주 3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하며, 2주 이후부터는 주 2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밝혔다.

한편, 구속 전부터 디스크를 앓아왔던 이은미 씨는 단식투쟁의 후유증 때문에 다리의 마비증세가 오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해서도 외부

진료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

명동성당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해고·수배·실직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구심이자 안식처로 삼아왔던 명동성당에서 밀려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명동성당의 장덕필 주임신부와 평신도회측은 22일 성당 내에서 천막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25일 낮 12시까지 천막을 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농성자 가운데 수배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명동성당 외에 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기 힘든 사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성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농성자들은 "철수 시기를 늦춰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장덕필 주임신부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농성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통보가 인도적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장 신부는 "농성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주장도 할만큼 하지 않았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수배자 문제에 대해 장 신부는 "(밖으로) 나가서 사법처리를 받으면 될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 중인 노동자는 만도기계와 조흥시스템, 금성기공 노조원과 '새날을 여는 실업자연맹' 회원, 건설일용노조 조합원, 동화

은행을 비롯한 은행노동자 등이다.

특히 만도기계와 금성기공 노조원들 가운데엔 19명의 수배자가 포함되어 있다. 만도기계 수배노동자는 "경찰력 투입으로 초도화된 노동조합활동이 복구되면 당국에 자진출두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만 농성을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월 1일 조흥은행에서 퇴출돼 직장을 잃은 조흥시스템 노동자들도 "사무실마저 폐쇄되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며 성당에서 나가게 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건설일용노조위원장 이공석 씨는 "농성자들에게 우호적인 신도들도 많지만, 우리를 '빨갱이'로 바라보는 일부 신도들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며 "종교인인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생존권·시민권 동시 후퇴

### 경제위기에 구속노동자 급증

경제위기가 심화된 올해 들어 구속·수배된 노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9월9일 현재 구속·수배 중인 노동자는 총 2백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백7명이고 불구속 기소 34명, 보석 8명, 수배자는 1백25명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8월25일 현재 구속자 53명, 불구속 기소 29명, 보석 7명, 수배자가 1백27명이라고 밝혔으며, 2주 동안의 구속자가 지난 8개월 간의 구속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들어 노동자 구속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시민·정치적 권리까지 후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제3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회 인권영화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주최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동국대 총학생회가 주관하게 된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서준식)는 물말에 오른 1백여 편의 인권영화 가운데 최종 30여 편을 선정한 상영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19편이 상영작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특히 IMF구제금융 하의 구조조정, 대량실업 및 홈리스 문제 등 제3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 특별기획전'이 준비된다.

상영이 확정된 영화 가운데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의 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레지스탕스 Rezistans>(제작: 미국)와 다국적기업 맥도날드의 횡포를 법정에 세운 시민들의 법정투쟁기 <맥도날드의 불멸에 McLibel>(제작: 영국), 현재 미국에서 개봉중인 멕시코 사빠띠스타의 투쟁을 다룬 <치아파스 A Place Called Chiapas>(제작: 캐나다),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미국교도소의 숨겨진 악행을 폭로한 <농장 The Farm>(제작: 미국)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빠띠스타 영화 등 30여편 상영

또한 영화사에 기록된 고전 역시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칠레민중연합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한 필름보고서 <칠레전투 Battle of Chile>(제작: 칠레)가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은 76년 칸느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가 '새로운 영화' (제3영화)의 시작에 경의를 보냈다는 후일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성된 후 25년 동안 자

국에서는 상영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다. <칠레전투>의 감독 파트리시오 구스만은 이에 대한 기록을 <칠레: 그 치유되지 않는 기억 Chile: Obsolete Memory>이라는 작품으로 내놓았는데, 이 작품 역시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그밖에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쇼아>에 버금가는 찬사를 받았던 작품으로 2차대전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슬픔과 연민 Sorrow and Pity>(제작: 프랑스)도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제3회 인권영화제는 부대행사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심

포지엄'을 준비중이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퀴즈대회, 인권이미지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인권영화제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순회 개최된다.

한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진흥부와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사전심의를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2회 인권영화제 당시 상영장소를 봉쇄하고 집행위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독립영화협회 등은 영진법과 음비법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 행사와 동정

■ 오창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양심수대책위원장이 22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문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777-0643)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중토론회

·때: 9월 24일(목)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 향린교회 강당

·주최: 민중의 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363-7802)

□ 13차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시민포럼(중국 및 인도네시아 사례 보고)

·때: 9월 24일(목)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3층 중강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월 월례발표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때: 9월 25일(금) 오후 5시 ·곳: 방송대 별관 2층 교수세미나실

□ '퇴출노동자와 실업자를 위한 98 희망음악제'

·때: 9월 25일(금) 오후 7시 ·곳: 종묘공원

·주최: 민주노총, 국민승리21

□ 제1기 장애우법률학교

·기간: 9월 24일(목)-11월 3일(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개소식

·때: 9월 28일(월) 오후 2시 ·곳: 성프란체스코회관 4층 소강당

·주최: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3147-1505)

□ 심포지엄 - '국민정부'의 인권문제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때: 9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 5시

·곳: 대한성공회 대성당 국제회의실(730-6611)

·주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연구소(610-4137)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제연대 담당 간사 모집

·접수기간: 9월 22일 - 10월 7일(영작 및 회화 가능한 사람)

·문의: 522-728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5일(금)  
제 12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세계인권선언 지지를 선언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진관·오세철)는 24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백만인서명운동 선언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의 민주개혁에 기대를 걸어왔던 것 대신, 앞으로는 '아래로부터'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권공대위는 백만인서명운동의 의미가 "총체적 민주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권공대위는 앞으로 한총련 등 '학생운동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학생운동의 재기없이는 민주진보운동의 미래가 어둡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명운동 선포에 앞서 진행된 민중토론회에서도 한총련 탄압 중단과 이적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종백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김영삼 정권이 대선자금 문제나 한보 문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학생운동이었다"며 "문정부에서 시작된 한총련 탄압이 김대중 정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정권은 실업과 구조조정 문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자

기층민중과 학생을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한총련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야 역시 속수무책이었다"며 진보진영의 무관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전상봉 서형협 의장은 "한총련이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법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를 거듭 촉구했으며, 그밖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보법 철폐 및 준법서약서 철폐 △민중생존권운동 및 진보정치활동의 보

장 등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소식지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창간해 이후 국보법 철폐 및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운동 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문의: 363-7802).

### 민노총도 5백만 서명운동

일자리보장·재벌재산환수 촉구

민노총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부터 '일자리 보장과 부실재벌총수·비리정치인 처벌 및 재산환수를 위한 5백만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의 발대식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11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백 개 시군구에서 5백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전개될 예정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언제까지 '손가락이 잘려야' 잘-사는 나라가 되나요?!!

## 청년실업자 운동 항배 주목

30개 대학 '특별위원회' 구성 후 활동 들어가

"노동의 기쁨(?)을 알기도 전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의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졸업한 선배들에겐 대학원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기업의 신규채용마저 줄면서 대학생들 역시 실업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내년초면 졸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졸업을 앞둔 4학년들 사이에선 '너 취직했나?'는 말이 인사말로 오고가는 형편이다. 정부가 '인턴사원제'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예비실업자들의 눈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뿐이다.

### 한편에선 냉소와 패배주의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생들의 반응은 조용하다. 학년에 따라, 대학별 차이에 따라 체감도가 다른 것도 주된 이유겠지만, 90년대 들어 확산된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냉소와 패배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취업을 준비중인 이 아무개(서강대 91학번) 씨는 "학생들 사이에선 '자전거 탄다고 실업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말하는 애들이 많다"고 말한다. 24일 서강대에서 진행된 '청년실업문제 해결 촉구 자전거대행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씨에 따르면, 심지어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상책"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나갈 사람이 어서 나가줘야 신규취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는 올 연말의 취업 현황이 대학생들의 대응방식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적 좋고 능력 있는 학생들조차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위기가 확산될 수 있겠지만, 몇 명이라도 취업이 되면 모두 개인의 능력문제로 치환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청년실업자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실업문제에 대한 대학사회의 공동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여름 16개 대학이 모여 준비하기 시작한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현 서강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8일 서울대에서 정식으로 발족했고, 지금은 수도권, 경남, 충청북 지역의 30개 대학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최승현 위원장은 "앞으로 참여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26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서 참석해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취업연령 상한제 철폐 △재벌재산 환수를 통한 실업기금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각 대학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면한 실업문제 속에서 대학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주목해볼 일이다.

### 서울역 확장실 야간 개방

노숙자 요청 수용

서울역이 노숙자들을 위해 야간에도 확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역 확장실 개방을 요청해 온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는 "서울

역측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승리21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숙자대책이 여전히 노숙자들을 사회적 혐오대상자로 여기며 추방과 박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노숙자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승리21은 지난 8월초부터 서울역 확장실 야간 개방과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 장기수 조상록씨 단식후유증

준법서약 항의, 열사 추모 단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째 수감중인 조상록(일본 유학 간첩사건, 안동교도소) 씨가 계속된 단식투쟁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제247회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참석한 조준순(조상록 씨의 누님) 씨는 "동생은 준법서약제 도입에 항의하며 지난 여름 30여 일 간 단식을 벌였으며, 최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기간을 맞아 다시 일주일 간 단식을 벌인 끝에 탈모증세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의전화, 상근자 모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국제연대사업을 담당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 10월 2일(금)까지  
·문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 (269-2962 박정임 사무국장)

### 제3회 인권영화제 일손이 필요합니다

- ▶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 ▶ 분야: 홍보/후원회원 모집/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 ▶ 각 분야 약간명
- ▶ 문의: 인권영화제 사무국(741-2407 김정아, 성동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6일(토)

제 12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인권위원회의 형태는 '독립적 특수법인'이다. 법무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인권위원회가 모두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기구보다 법인이 방대한 조지와 예산을 집감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법인 형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수법인 형태 인권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위험

그러나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은 정부 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결국 인권위가 법무부의 산하 기관화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의 시안은 인권위원(9명)의 선출권을 갖는 이사회에 차관 4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회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인권위원회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시안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외

국과 국내의 인권풍토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 위원회'의 과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탄압의 과거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관할과 권한에 있어서도 약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7개 사항으로 국한했으며, 그 권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측은 "특수법인의 위상으로는 정보·수사·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정책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해봤자 각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인권법 제정, 민주적·공개적 과정 거쳐야

이날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안이 공개된 뒤 민간단체 공추위는 오후 1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안은 말 그대로 시안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인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국

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과노현 집행위원장은 "인권법의 제정은 헌법개정과 같은 민주적·공개적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양심수 석방이나 의문사 규명 약속 등 인권의 새 시대를 제감할 수 있는 국민적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 이후, 12월 10일 인권법을 공포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완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독료/ 하루소식의 힘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로

##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그렇게 살 순 없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온 정선(26·96년 서충권 조동위원장, 덕성여대 수학과 92학번), 김태환(27·97년 서충권 집행위원장, 홍익대 경영학과 90학번) 씨는 지금 준법서약서 철폐운동의 한 가운데 있다. 이들은 지난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재구속 위협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2, 5·18사건 관련자와 각종 비리사범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되는데, 양심수와 공안사범들에게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모순을 참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써낸 준법서약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 비전향장기수·양심수 원전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기한 농성은 가시밭길이다. 25일 오전에만도 명동성당 측의 항의로 천막이 철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행히 함께 있는 만도기계, 조흥 시스템 노동자들의 항의로 다시 농성을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여기에도 법무부는 "서약서를 쓴 것이 위장인 것으로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검찰청도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위협했다. 25일 내려던 농성단의 한겨레 신문광고도 한총련 광고라는 이유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가시밭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오후에는 부모님이 다녀가셨다. 출소 뒤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선 씨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왔어도 주변동료들은 따뜻하게 대해줬

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딘가 허탈했다. 그 허탈함은 따뜻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풀리는 게 아니었다"며, 준법서약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직접 그것을 풀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농성을 시작하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농성을 들어오기 전, 긴장도 많이 했다는 정선 씨는 "그러나 나의 과오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농성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옥중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출소 뒤 40여일 동안의 고민을 뒤로하고 힘차게 얘기했다.

차가운 농성장 마루바다 위로 이불과 배개를 옮기고, 밥 지을 코펠과 반찬, 간장을 챙기던 김태환 씨는 "국가권력이 양심을 가진 사람의 내면을 잠시 바꿀 수는 있어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며 농성장을 찾아온 어머니 이명자(58)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 씨는 아침저녁 쌀쌀한 추위로 옥살이 때 상한 아들의 몸이 더욱 더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눈은 성당 철담판을 바라본 채, 안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24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신당동 광희시장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던 2급

장애인(소아마비) 전창욱(43·노점상) 씨가 중구청의 단속과 폭력에 항의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전창욱 씨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점을 시작해 의류 도매좌판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 씨는 중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7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한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날 또다시 단속을 받게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부인은 그 동안 9차례에 걸친 단속으로 인해 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겨 남편이 몹시 고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씨의 몸에 불이 붙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전 씨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며 노점상을 용의자로 지목한 후 탐문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 씨의 부인과 노점상인들은 사건 당시 전 씨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경과 중구청 사람들이었다며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정부의 대책 없는 폭력단속이 이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은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전 씨는 은몸에 3도 70%의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이나 계속 상태가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실업문제 완전 해결과  
폭력 경찰 투입 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9·26 민중대회

·때: 오늘(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광장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29일(화)

제 12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인권침해 시비가 그치지 않던 청송교정시설 4곳(제1·2교도소, 제1·2감호소)이 지난 24일 약 3시간 동안 대한변협 등 10개 민간단체 관계자와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공개됐다.

법무부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행사였던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재소자와의 접근을 가로막고 준비된 몇몇 시설만을 공개하려는 교도소 측과 인권단체 참관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교도소측은 조세형 씨를 통해 확산된 세간의 의혹부터 해소하려는 듯 참관단체측이 요구하기도 전에 조 씨가 수감되어 있던 7동 1, 2, 3방을 공개했다. 교도소측이 공개한 감방은 기존의 청송 출소자들이 주장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햇볕과 공기를 자유로이 쉴 수 있을 만큼 널찍한 감방 창문을 보여주며 한 교도관은 "창문을 막는다는 것은 교도소 생김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관단 가운데 청송 출신이었던 한 목사는 "그 방은 조세형 씨가 수감되었던 방이 아니다"며 "왜 그렇게 숨기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도관 다가서자 '갱생!'

이번 행사에서 교도소측은 참관자마다 3-4명의 교도관들을 배치해 재소자와의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참관단의 반발을 샀다. 특히 문제수형자(강력범 또는 3범 이상의 수형자 등)들을 수용해 규율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제2

교도소 방문시엔 인권단체측의 요구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독방이 공개되면서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2교도소 독방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앞서 제1교도소의 재소자들과 달리 교도관들을 보자마자 '갱생'이라는 구호와 함께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해 참관자들을 당혹케 했다.

논란이 되었던 징벌방에 관해서는 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참관단 가운데 일부가 교도관들의 제지를 뚫고 한 재소자에게 징벌방의 위치를 묻자 그는 영결실에 "이 사동 맨 끝이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교도관은 재소자가 지목한 '끝방'의 용도에 대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또한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에게는 평상어를 쓰고 폭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종 "재네들, 애들이..." 문운해 참관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청송 교정시설의 경우엔 제법, 3범인 재소자가 많은 관계로 일반 교도소보다 재소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다.

"샘플만 봤을 것"

한편 참관단이 청송교도소를 떠나던 25일, 제2감호소에서 출소한 장 아무개 씨는 "청송의 내막을 잘 모르니까 교도소측에서 제공한 공간만 보았을 것"이라며 "물건으로 보면 좋은 샘플만 보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를 하느라 재소자들이 무척이나 힘들었다"며 "보통 가석방 사실이 2-3일전에 통보되지만, 이번에

는 24일 폐방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날 제2감호소에서 출소한 김 아무개 씨는 "교도관들이 새 정부 들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재소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출소할 때 평상시와 달리 향문 검사까지 받았다"며 "뒤가 풀리지 않으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 사제복 입은 신부 폭행

### 문 신부 석방촉구 행사에서

사제복을 입고 집회장에서 나오던 신부가 경찰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에 따르면, 25일 저녁 8시30분경 전주 서학동성당에서 '문규현 신부 석방촉구'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안봉환 신부(익산시 창인동성당 보좌신부)가 사복경찰들에 의해 전주 교육대 화장실로 끌려가 발로 짓밟히는 등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당에서는 신자 4백여 명과 사제단 신부 19명이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길이었으나, 경찰이 성당 입구를 에워싸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먼저 성당에서 나온 안 신부가 노래패 대원 한 명과 함께 사복경찰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제단측은 즉각 경찰 관계자에게 항의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그쪽에서 먼저 때려서 우리가 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은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오는 10월2일 전주 중앙성당에서 평화행진을 갖기로 했다.

##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더욱 심화된 대학생 탄압은 최근까지도 마구잡이 연행과 대량구속이라는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3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수는 총 1천6백여 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구속된 대학생만도 2백64명(8월 28일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9월 들어서는 14일 경성대 이과대 학생회장 최효석 씨가 학생회실에서 연행되고, 17일 대구 효성가톨릭대 부총학생회장 김두영 씨가 학교 내 본관1층에서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등 좀처럼 그 양상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병력의 과잉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1일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유성철(강원대 사회대 학생회장) 씨는 학생회실로 뛰어든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27일 새벽 3시경 단국대 천안교정에 진입한 경찰병력 2백여 명은 학생회실을 은둔 뒤집어 놓고 학생들이 리포트용으로 보관하던 컴퓨터 디스켓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족에 가해지는 협박과 회유 때문에 고통받는 수배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이 수배자의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당신 자식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거나 "자식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부모를 불안하게 해 자수를 강요하는 등 대학생 연행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배자는 "설령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6기 한총련은 애초부터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공안기관의 6기 한총련 탄압은 법 논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9월 30일(수)
  -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 10월 1일(목)
  - 유용현(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전제순(국보법) 오후 3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4부, 속행

## 주간/인권/호/름

(98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 9월 21일(월)

이기호 노동부장관,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반대파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보건복지부,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 1백42명에게 정부지원금 3천1백50만 원과 국민성금 750만원 등 총 3천9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 9월 22일(화)

보건복지부, 올 상반기 현재 버려진 아이 등 '요보호아동' 수가 전국적으로 6천3백53명에 이른다고 밝혀/서울시, 지방에서 올라온 노숙자에 대해 잠자리와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귀가시키기로/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 지난해 서울 중·고생 2천5백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체의 11%가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고 16%가 친구를 따돌린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9월 23일(수)

부산주례구치소, 간경화 앓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기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발표, 구직활동 포기 8월중 실업률 7.4%로 9개월만에 처음 감소

◆ 9월 24일(목)

중구 신당동 광희시장에서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전창욱 씨, 몸에 신나 끼얹고 저항하다 몸에 불이 붙어 중태/민권공대위,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교육부, 내년도 교육예산 5% 삭감기로/국제노동기구, 올해말까지 전세계 30억 노동자 가운데 10억 명이 실업이나 불안전고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법무부, 인권단체 및 언론에 청송교도소 공개/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시행 당분간 연기하기로

◆ 9월 25일(금)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여성특별위원회, 6월 29일부터 25일 간 실직자 6백96명을 상대로 조사한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실태' 보고서에서 남성 실직자 5명 중 1명 꼴로 이혼·별거중이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교육부, 부모 실직 등으로 학비지원을 받게 된 중·고교생이 지난 9월1일 현재 전체학생의 6.2%인 26만 6천2백66명이라고 밝혀/미국 달러로 계산한 국내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보수가 7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8·15 시면때 준법서약서 제출하고 가석방된 정선, 김태환 씨, 준법서약제 철폐 요구하며 명동성당 농성 돌입

◆ 9월 26일(토)

민주노총·범국민운동본부, 서울역광장에서 민중대회 열고 '일자리 보장과 부실재발총수·비리정치인 처벌 및 재산환수를 위한 5백만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 9월 27일(일)

지난해말 현재 노조 수 5천7백33개로 96년의 6천4백24개에 비해 6백91개(10.8%) 감소, 노조원 수는 1백48만 4천1백94명으로 11만 4천3백64명 감소해 33년만에 노조 조직률 최저 기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9월 30일(수)

제 12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되고 나서 언론에 비친 청송은 인권침해가 거의 없어진 안전한 곳이었다. 하지만 직접 청송을 참관했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청송교정시설 개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청송교정시설 공개에 앞서 청송 출신의 김영수(44·97년 청송 제2보호감호소 출신)씨는 "절대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법무부 측에 어떤어떤 곳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체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좋다"며 참관을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송 시설을 직접 참관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청송교정시설이 언론에 잘못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참관을 결정하게 된다.

#### 광파르로 시작된 공개행사

하지만 청송교정시설 인근에서 점심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교도소장들이 참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과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 교도관 4명과 2명의 남자 교도관들이 음식을 나르며 접대하는 모습. 그리고 청송교정시설에 도착하자마자 경비교도대 악대가 광파르를 울리고 기자단 대표와 인권단체 대표에서 꽃다발을 증정했을 때,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또한 일정에도 없는 태권도 시범이 벌어지면서 교도대원들이 '초전박살'을 외칠 때엔, 과연 경비교도대가 초전박살을 내야할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의심케 하기도 했다.

한편, 교도관들은 참관단과 재소자들 간의 대화 한마디마다 제재를 가하면

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데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폭언과 폭행은 있을 수 없다. 새 정부 들어서서 그러한 일들은 전혀 없다. 조세형과 신창원이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봐라! 시설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도관들을 도둑놈의 말만 믿고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교도관들의 향연이었다.

#### 티켓다방 아가씨와의 향연

청송교정시설은 80년 쿠데타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제법 이상의 상습자와 수감 횟수가 3번이 넘는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다. 청송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다시 보호감호

처분에 의해 청송제1감호소로 옮겨지고, 그들이 급수가 올라가면 다시 제2감호소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나 형벌에 의해 수용되는 교도소 생활과 감호처분에 의해 수용되는 감호소 생활이 확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와 교도소생활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참관한 기자단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인권단체 참관자들을 민망하게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의 뒤풀이 자리에는 어디에서 불러왔는지 모르는 아가씨(뒤에 티켓다방 아가씨로 드러남)들과 몇몇 기자들 간의 향연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 일간지 기자는 "이 정도는 중간 정도의 접대"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접대는 접대고 기사는 기사"라며 접대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 속에서 '열린 교정을 실현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개방한다'는 법무부 교정국의 청송교정시설 개방 취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YS가 돌아왔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가 국가전복의 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진행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지의가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29일 시중은행 노조들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생존의 벼랑에 몰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노동자들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아 제압하려는 당국의 작태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 <인권하루소식> 98년 9월분 총목차(1199-122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199	9/1	1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포
		2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안 발표 - 열사범추위,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예정/민가협 집계, 양심수 4백2명 가운데 국보법 구속자가 2/3 차지/주간인권흐름(8월 24일 - 8월 30일)
1200	9/2	1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경찰, 향의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2	<자료> 8·15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
		3	<자료>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1201	9/3	1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 노동자들 험겨운 싸움 계속/양심이 탄압받지 않는 사회 -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2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반년 평가/재소자는 건의도 못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1202	9/4	1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만화사랑방>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2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김훈 중위, 자살? 타살? - 미국 법의학자, 타살 가능성 주장/도원동 주민 울분만 쌓여 - 전철연 의장 한때 연행
1203	9/5	1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춘천교도소 면회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2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젓먹이 아이까지 무차별 진압, 만도기계 경찰 투입 현장
1204	9/8	1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 재소자 3명 한달간 징벌방 수감 조치/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노동쟁의란?
		2	<정리해고 기사> 1면에서 이어짐/주간인권흐름(8월 31일 - 9월 6일)
		3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교과외와 파문을 바라보며(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1205	9/9	1	노조건설 이유로 '해고·대기발령', 청주 오리온 프리토포이 공장/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2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보고 - 불법 계구 사용 낱말, 재소자 형원 목살하기 일수
1206	9/10	1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만도 파업투쟁 지속, 현장에선 집회 명동에선 농성/영남위 사건, 전원 기소 - 대책위 "짜맞추기 사건" 비난
		2	엠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 김 대통령 "덜지 않은 장애에 개정"
1207	9/11	1	"변명은 이제 그만" - 싸네 엠네스티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만화사랑방> 김대중 정권과 노동현장 경찰력 투입
		2	"IMF에 도전하는 민중", 서울국제민중회의 9일 개막/<해의단체 소개> '가난한자들의 모임'(태국)
1208	9/12	1	"과외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유가협 후원회 재건, 회장에 이해동 목사
		2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1209	9/15	1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원원 보고대회 열려
		2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주간인권흐름(9월 7일 - 9월 13일)
		3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의 ① 미국·프랑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년 9월분 총목차(1199-122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10	9/16	1	현대자동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측 합의불이행·노조파괴에 혈안/연좌제 연루 차정원 씨, 최중 승소/〈새로나온책〉 『세계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펴냄)
		2	〈주요발표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양지마을 퇴소자들, 정부에 사후대책 촉구/정신보건법 개정 간담회,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3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1211	9/17	1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려분쟁과 성폭력' 주제로/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2	〈주요발표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페르디난드, 필리핀 공공연행 대표)
1212	9/18	1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만화사랑방〉 현대차 노사합의 휴지조각
		2	〈인터뷰〉 곽노현(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1213	9/19	1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인터뷰〉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2	박 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간첩 혐의
1214	9/22	1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2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접수, 검찰·프라이버시 침해 등/주간인권흐름(9월 14일 - 9월 20일)
		3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이태곤 『함께걸음』 편집부장)
1215	9/23	1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검찰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노숙자 똥오줌은 안돼 - 서울역 심야 화장실 개방 거부
		2	"잡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계훈제 선생 돕기 모임
1216	9/24	1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생존권·시민권 동시 후퇴, 경제위기에 노동자 구속 급증
		2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 개막, 대량실업·흡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1217	9/25	1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돌입,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민주노총 5백만 서명운동, 일자리보장·재벌재산 환수 촉구/〈만화사랑방〉 손가락 절단사건
		2	청년실업자운동 항배 주목, 30개 대학 '특별위원회' 구성 후 활동 들어가/서울역 화장실 야간 개방, 노숙자 요청 수용/장기수 조상록 씨 단식후유증 앓아, 준법서약 항의·열사 추모 단식 전개
1218	9/26	1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 시민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2	8·15 출소자 2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농성/죽음으로 내모는 노점단속, 장애인 노점 중태
1219	9/29	1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전북 경찰, 사제복 입은 신부 폭행
		2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대량구속·수배 계속/주간인권흐름(9월 21일- 9월 27일)
1220	9/30	1	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 은행 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2·3	98년 9월분 총목차(1199호-1220호)

인권하루소식  
98년 10월  
(제1221호 - 제1240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일(목)

제 12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지난 7월 이후 조치원 양지마을(부랑인시설)과 아산 푸른나래유원(아동보호시설)의 인권유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8월말 곽영미 원장이 '시설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구생원은 최근 신규 이사진이 들어서는 등 의견상 정상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이사진이 기존 이사진과 연줄이 있거나 곽 원장의 친인척인 사람들로 구성돼 "시설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이사진 개편에 대해 「복지세상을 열어가려는 시민모임」(공동대표 서정만) 등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비리를 막지 못하거나 사실상 방조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전임 이사회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신규 이사와 시설장을 선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지마을 등 문제를 일으킨 시설이 모두 친인척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곳"이라며 "관선이사만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시설만큼은 전문적 식견과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가진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사태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 못차린 관할관청

문제는 기득권을 쥔 구생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안이한 태도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청은 교사 신분인 이 아무개 씨를 제외(교사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한 채 구생원의 이사진 개편을 승인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심지어 천안시청의 담당 과장은 "새로 승인된 이사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행편이다. 아직도 구생원과 관할관청과의 유착설이 계속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구생원측의 요구대로 이사진이 승인된 것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윤혜란 '복지세상' 사무국장은 "구생원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관청의 조치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 이사개편, '그 나물에 그 밥'

구생원측은 곽 원장 구속 이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총 6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을 유입시키고, 곽 원장의 외가 친척인 김 아무개 씨, 김 씨의 친구 이 아무개 씨 등으로 이사진을 개편했다. 유입된 전 아무개 씨는 그간 이사회에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올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생원 비리가 한창이었던 96년도에 법인 감사로 활동한 유 아무개 씨가 시설장으로 선임됐으며, 이러한 신규 임명과정엔 전임 이사였던 곽성근(곽영미 원장의 동생) 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구속중인 곽영미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뺏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와 동정

-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 때: 10월 1일(목) 오후 2시 · 곳: 참여연대 대강당
  - 주최: 참여연대(723-5302)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때: 10월 10일(토) 오후 2시-11시
  - 곳: 시청역 근처 비즈니스 호프(774-9998)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0기 지킴이'(성폭력전문 야간상담원 모집)
  - 모집기간: 10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여남 전문대 이상(재학생 가능) 선착순 50명
  - 문의: 02-576-7128/576-5513
- 전해투 재정마련 추석특판
  - 통신판매 및 직접판매: 10월 2일(금)까지
  - 주문시 택배비 없이 전국 운송
  - 전화: 02-744-7437/02-912-5845 팩스: 02-913-3355
  - 통신: 나우누리/천리안 - 전해투
  - 상품: 지리산 한봉꿀, 죽엽청주, 문배술, 배상면, 삼십전대보탕

#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 카라를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변 식당에 있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 나온 이후였다. "머리가 기니까 눈에 도 잘 띄고, 특히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검찰이 보낸 당선 '선물'

이 씨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남해에서 상경, 동국대에 진학했다. 1학년 때는 과학생회에서, 2학년 때는 사범대 풍물패인 '아라리리'(제 갈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 3학년에 올라가서는 과학생회에서 매주 아침 8시마다 소모임을 통해 신문읽기, 시사토론 등을 이끌었고, 이 소모임이 널리 알려져서인지 올 4월 부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까지 되었다. 그러나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과 동시에 이 씨의 고된 수배생활은 시작됐다.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동시에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당선 후 제일 먼저 날아온 편지도 6월 10일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라"는 검찰의 우편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검찰의 통보에도 아랑곳없이 여흥농활과 수재복구활동에 다녀오고, 8월엔 통일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29일에도 이 씨는 학생대표이사 자격으로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에 참석해 학생복지를 위해 생협 이익금을 배당하는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이 씨는 "그런 와중에도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서 자야할지가 걱정돼 온종일 정신집중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번도 야당을 찍어 본 적이 없었던 이 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년에 김대중 씨가 안되면 또 대학생들 잡혀들어 간다"며 지역(남해) 분위기를 무시한 채 김대중 씨를 찍었

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 된 할아버지는 수배 중인 손녀에게 "너거든은 어찌나, 해결 실마리가 있나?"며 수시로 안부를 묻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왜 학생에게만 칼끝을..."

이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이 동국대에만 5명이다. 아주대는 올해 구속자가 2명(작년 4명), 경기대(수원)은 구속자가 1명, 수배자가 2명이다. 각 학교마다 3-6명 정도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중이거나 구속중인 것이다. 보통 각 학교 내 11명의 대의원중 반수 이상이 검·경의 탈퇴공작에 못 이겨 탈퇴했고, 탈퇴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지금도 매일 3-6명 꼴로 연행되고 있다.

이 씨는 검찰의 탈퇴협박을 받을 때 "부모님에 대한 협박이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통신글 '희망 21'에는 "따져보자.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권영해보다 더 했겠는가, 박일룡보다 더 했겠는가. 한국 경제를 말아먹고도 재산을 해외로 피시켜 미국에 호화별장을 가지고 있는 모 재벌 총수보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칼끝은 왜 엉뚱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조계사에선 기약없는 농성이 대학생 수배자들은 이미성 씨와 같이 학교 안팎만을 전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영삼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된 8명은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 해제, 5기 한총련(97년)의 이적규정 재검토, 6기 한총련(98년) 대의원 검거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기약없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계인권의 해'를 맞아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올해, 학생자치기구의 대표

들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고긴 밤을 보내고 있다.

## 여성노동자, 3차 집회 개최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졌던 여성노동단체들이 차가운 빗줄기와 정부의 느린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일 다시 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단체회원들과 여대생 50여명은 "최근 비정규직 전환을 악용한 기업주들에 의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근로조건악화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전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해 집단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여성노동권 말살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의 전문직 여성노동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사측의 압력을 거부하자 갑자기 전직시킨 뒤 부서폐지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계약직으로 강제로 전환된 뒤 정리해고와 정직원의 50%도 안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여성노동자들의 피해접수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와 부당노동행위를 집회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집회를 주최한 여성실업대책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노동권확보를위한대학연대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불법 고용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대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실행 △신규여성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일(금)

제 12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재수감 두렵지 않다"

##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준법서약제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9월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정선(26·96년 서총련 조동위원장) 씨와 김태환(27·97년 서총련 집행위원장) 씨에 대해 정부가 '농성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본지 9월 26일자 참조).

지난 8·15 사면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한 두사람은 그동안 신념을 배신했다는 자책감과 이로 인한 삶의 의지 상실로 괴로워하다 재수감의 위협을 무릅쓰고 농성에 돌입했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나온 양심수 가운데 스스로의 서약을 전면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농성으로 인해 다른 준법서약자들도 준법서약서 철폐활동에 동참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농성을 조기 철회시키기 위한 압력을 다각도로 행사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있는 김태환 씨는 "매일 '농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추석전에 재수감시킬 것'이라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에도 경찰이 경고장을 들고 농성전막을 찾아왔지만 김 씨는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두사람의 집은 물론 부모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동네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이들이 수감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번에 들어 가면 40년은 감혀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용히 있으면 학교에도 다시 복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농성장소인 명동성당측도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줄테니 성당을 나가라. 그렇게 한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해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듯 재수감될 수도 있는 부담 속에서 김태환 씨는 농성을 진행중이지만, 정부당국의 협박과 압력에 대해서는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번 실수를 저지른 이상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해야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며 "만일 이번에 재수감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훌훌 벗고 뚝뚝하게 다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전막에서 준법서약서 폐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올 추석은 더욱 외로운 명절이 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더 시리게 하는 것은 홀로 지내는 명절의 쓸쓸함이나 정부의 압력보다도 자신들로 인해 마음 고생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이

다. "감옥에 있을 때 올 추석은 부모님과 함께 지낼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었는데...또 이렇게 되버렸네요." 정선 씨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채 부모님께 인사를 전했다.

## "재수감 압력 중단" 요구 인권공대위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인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진관)는 1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총련 농성단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수감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무너지는 대학자치

##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텔레비전에 비치는 요즘 대학의 모습은 강호동이 각 대학을 찾아다니며 놀고 즐기는 즉흥적인 '캠퍼스 영상가요쇼' 뿐이다. 그러나 96년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학생운동 탄압으로 학교 밖에서는 학생간부들이 수배되어 쫓기고, 안에는 학생자치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학교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 대학사회의 현실이다.

'학부제로 통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지시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학과 통폐합을 통한 학부제가 실시되면서 전국 각 대학은 이미 '직업일꾼'을 양성하는 훈련소로 바뀐지 오래고, 그 속에서 캠퍼스이용규범 확정, 학생 야간 출입통제, 학내 풍물연습금지, 학내언론 탄압 등의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 학부제가 낳은 폐단

우선, 학부제의 도입과 함께 '민주주의의 도장'이라는 대학사회의 기능은 사라져 가고,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또한 뒷걸음치고 있다.

문예창작과와 생활체육학과를 통합한다는 숯밭에 콩을 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속에서 선후배간의 '정'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삭막한 입시학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학생회칙'을 위법이라며 학생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학교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총학생회에 한 톨의 학생회비도 지원하지 않아 학생들 스스로 회비를 직접 걷는 형편이다. 심지어 총학생회사무실의 전등조차 학교에서 달아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율활동 공간, 점차 소멸  
또 서울대에서는 캠퍼스이용규범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규범은 면학분위기조성을 이유로 △도서관 앞 스피커 사용금지 △외부단체 주도 집회 등의 장소사용 사전허가 △플래카드 및 대자보 실명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학생자치 행사나 사회, 정치적인 면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이후 본격화된 이런 흐름 속에 항공대는 학교의 물품파괴나 인명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생회관 야간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경북대는 9월부터 대학의 저항성을 상징하는 풍물연습, 풍물공연과 집회때 엠프 사용, 야간기숙까지 금지해 학생들의 반대서명운동을 불러왔다.

대학별로 학내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하다. 올 3월초 동덕여대 학보에는 대통령 취임을 맞아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양심수 석방 운동에 대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려 했다. 그러나, 주간교수의 검열에 의해 양심수 광고가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인하대신문은 학교측이 '1면에는 홍보기사를 싣고, 재정상 격주간발행 체제로 바꾸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8월 24일자 개간호부터 한달 가까이 발행중지사태를 맞기도 했다.

인하대신문사 편집국장 이용욱 씨는 "사회비판기능을 견지해야 하는 대학신문을 단순한 학교홍보지로 전락시켜, 격주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자들의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성여대에선 학내에 붙어 있던 'IMF 재협상'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진지 오래고, 동국대 대자보판에 붙은 시국관련 대자보나 플래카드는 2-3일만 지나면 수상한 사람에 의해 찢겨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자치권을 점차 상실해가는 대학사회에서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대학인 스스로의 권리의식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재야단체 간부가 1일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부산지역 재야단체 간부가 1일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수차례의 집회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용공조작 의혹이 감하다'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과 보안과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퇴직한 보안과 직원들의 이름으로 민 사무처장과 이상우 부산연합 공동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민 사무처장을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산연합측은 "이번 조치는 우리가 부산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부산연합과 부산경찰청 양자가 서로 고발장을 접수시킨 상황에서 부산연합 간부만을 체포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부산연합은 '영남위사건' 발표 당시 부산경찰청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감정일보위투쟁의 일환으로 발표하자, 그것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여온 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부산경찰청장과 보안과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8일(목)  
제 12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 인권단체가 한국정부의 추가적인 양심수 석방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81-6-715-2651)는 6일 구미유학생 사건의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인권국 앞으로 보냈다.

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범의 석방을 비롯한 민주화발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특사 및 광복절특사에 이은 후속조치를 취하고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광복절특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많은 정치범들을 제외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은 청송교정시설 개방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방행사 내내 이어진 법무부와 교도소측의 태도에 당혹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려한 광파르와 교도소 간부들의 도열 및 화환증정식, 일정에도 없던 악대연주 및 태권도 격파시범 등은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저녁 식사 후 마련된 뒤풀이 자리에서 다방 여종업원까지 동원한 환영이 벌어진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참관일정에 충분한 시간 보장 △참관코스 결정시 참관단의 요구 반영 △참관에 앞서 자료 검토 기회 제공 △무작위로 선정된 재소자들과의 비밀접견 보장 △접대행위 근절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

방콕에 위치한 아시아인권교육자원센터(ARRC,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아·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나

의 그림, 나의 권리'라는 제목의 아동미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ARRC는 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6-9세 아동 ▲10-12세 아동 ▲13-15세 아동 등 세 분야이며, 각 연령별로 ▲1등: 5백달러의 상금 ▲2등: 3백달러의 상금 ▲3등: 2백달러의 상금이 주어지고 트로피와 상장도 수여된다.

작품 내용은 '인권'에 관한 아동들의 생각이나 관찰, 경험을 표현하면 되며, 작품 형식은 최소 35 x 50 cm, 최대 53 x 76 cm, 작품 재료는 목탄, 크레용, 유화, 파스텔, 펜, 잉크, 연필, 수채물감을 사용하면 된다. 한 아동이 한 작품만을 응모할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문의: 741-5363)

##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민청주 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종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안민청 회원들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모두 석방됐다.

## 제3회 인권영화제 일손이 필요합니다.

<모집 분야>

1. 홍보: 언론 홍보를 비롯해 후원회원 모집과 대학 순회 홍보(반상근)
2. 자막: 영어, 일어, 프랑스어 각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하며 영화제 사무국에서 필요할 때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3. 문의: 인권영화제 사무국 741-2407, 5363(김정아, 성동철)

인권하루소식 3일부터 7일까지 휴간합니다.

새 힘 얻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인권 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우리는 직업엔 귀천이 없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일을 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인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중삼중의 색깔로 그 '값'이 다르게 매겨졌다.

2년전 모대학에서 청강할 기회가 있었다. 특감이었는데 주제는 '매춘여성의 삶'이었다. 그런데 초청된 강사가 매춘 현장의 목소리를 마구 부풀리고 거짓되게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기지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강사가 소개한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현장에 어두운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들으며 매춘여성들은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지을 수 없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용기 내어 그 과목 선생님께 상의하였다. 강의의 문제점을 말하고 조정을 요청(?) 하였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유진씨의 말이 맞고 강사가 거짓말 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매춘 현장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충격요법이 될 수 있으니 까 괜찮습니다"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보다 그 선생님에게 더욱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천시받는 여성들의 인권은 대학생의 교육 효과를 위해 얼마든지 더럽혀져도 좋단 말인가? 감사와 선생님은 매춘여성과 대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공범자들. 나는 그후에도 많은 '공범자'를 알게 되었다.

공범자들

국회내에 한미행정협정 개정 특위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초등학생이 미군 3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그러자 모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하는 말, 우리나라는 주로 매춘여성이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미군범죄가 부

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춘여성들이 당한 문제가 여론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이다. 순간 여러 생각들이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수차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키나와처럼 크게 여론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반세기 가 넘는 분단과 미군주둔, 반공이데올로기 등과 연관이 깊다. 두번째,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 여론이 시끄럽고 매춘여성이 당하면 여론이 잠잠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누가

초등학생과 매춘여성의 인권은 똑같이 보호될 가치가 있다

감히 인권을 저울질하는가? 초등학생과 매춘여성의 인권은 똑같이 보호될 가치가 있다.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오키나와에서 강간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미군과 사귀던 여성이 그 미군에게 해머로 얼굴과 머리를 두들겨 맞아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미군과 '교제'한 것이 피해자의 '결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당해도 벌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슷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96년 동두천에서 이기순씨가 유니크 이병에게 목이 잘려 살해되었을 때 경찰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여자들은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기지촌에 간 것 아니냐, 강원도에 잠수한 내려왔다, 미군 역할이 절실한 때다.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한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폭행, 강간 등 사

건 자체보다 원래 처녀였는지, 미군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등의 질문에 시달린다. 모멸감에 사건을 포기하고 연락을 아예 끊는 사람도 있다. 매춘여성들은 업주와 미군에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 사건 해결도 의심스럽지만 그보다는 신고함으로써 겪게 될 고통이 더욱 두렵기 때문이다.

익도적인 축소

그동안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반복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안보'라는 공룡에 눌러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특히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멍에까지 지고서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왔고 그 역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미군범죄를 얘기하면 그거 기지촌 여자들이 당하는 것 아니냐고 별 것 아닌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여성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미군주둔이라는 중요사안을 여성문제로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러한 견해가 오히려 인권문제를 미군주둔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문제를 용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다케시타 사에코(오키나와대학)씨의 지적처럼 "국가폭력을 포함 모든 폭력문제를 평화문제는 결국 현실을 사는 각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권리가 보장되는나 마느냐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월... 윤금이 씨 6주기가 다가온다.

그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존중받는, 그래서 더욱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웃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9일(금)

제 12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재일동포, 기대 · 우려 교차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전후보상문제 등 각종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금 재일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권 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 인등록법과 공무원취직차별, 민족교육 억압 등 각종 차별정책들이 꼽힌다.

우선 전후보상에 있어, 일본 정부는 전쟁 이후 제정된 보상법에 따라 해마다 약 1조5천억원 씩 지급하고 있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한국인들을 보상에서 제외해 반발을 사고 있다. 또 15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상시휴대하도록 한 외국인등록법 역시 국적 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 4세대까지도 지방공무원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97년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7백31개 지방단체에서 일하는 1백60만 명의 직원 가운데 외국인직원은 단 7백7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재일동포들의 지방공무원 채용기회가 늘고 있지만, 관리직으로의 진급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를 정식학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학교 졸업자들에게는 국·공립대학 수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등, 학

력, 경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는 김대중 사무국장은 "북한 '미사일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 폭행사건이 잇따르는 등 일본 국민의 의식 속에는 차별감정이 깊이 남아 있다"며 "재일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동포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재일동포들의 기대가 높아진 반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하는 한일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전후보상 등의 문제가 여전히 속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9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교도소를 계속 개방할 계획"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교정시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보여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측은 교정시설 개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참관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대와 환영 제공'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교정국장은 "이해해 달라"며 웃어넘겼다고 면담에 참가한 관계자는 전했다.

만화 사랑방



이동수



#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모든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 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그 열악함이 극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파견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상태에 대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평균 근무시간은 58.8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은 임금·장시간 노동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더이상 이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 노동자는 95년 7백3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98년, 근로자과거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은 감강경영이란 이름 아래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같이 거대한 비정규직 노동자군

은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pool)로 이용돼, 노동자들 전체에게 노동조건 악화나 고용불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노동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유연화 정책이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노동운동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심동진 조직부장은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아우르는 일은 노동조합의 미래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삼성의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그대

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신세계백화점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신세계백화점 직원 20명은 7일 밤 11시 서대문의 선교교육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8일 오전 9시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사측의 횡포를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측은 직원들에게 체불된 상여금에 대한 포기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쓰기 싫으면 사직서를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 왔다. 현재 (주)신세계백화점의 노사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신홍철 위원장은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해 노사협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의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이라고 노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세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삼업연맹은 "이번 노동조합 결성이 삼성 무노조 정책에 파열구를 내게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접속이 안 된다.

오는 11월 정식 출범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8월 15일부터 인터넷과 피시통신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inbo.net)에 대해 기존의 상업통신망들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차단조치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 이유는 진보네트워크 내에 한총련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네트워크 내에는 학생네트워크(한총련 홈페이지는 이곳에 연결) 외에도 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네트워크뿐 아니라 노동네트워크 등도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총련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있지만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를 차단시킨 일은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추진위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당국이 문제삼는 것은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한총련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라며 "현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받지 않았는데도 당국이 관행적으로 한총련을 문제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실정 한총련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보네트워크 전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걸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가 출범 전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0일(토)

제 12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무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검문을 거부하다 연행된 뒤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소속과 신분, 검문목적 등도 밝히지 않아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으며, 이에 전경들이 수송차량(일명 닭장차)으로 끌고 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가방을 뒤지고 △안경을 벗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같이 배상을 신청한 김진식(32·서울대 물리학과) 김해근(24·서울대 물리학과)씨는 5월 29일 오후 학교로 들어가던 중 검문을 당했으며, 역시 절차를 무시한 검문에 불응하다 강제연행·감금됐던 경우다.

또 조영삼(22·연세대 기계공학과), 나정인(20·연세대 기계공학과)씨는 검문에 순순히 응해 신분증을 보여주어도 무려 12시간 이상 경찰서에 강제감금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배상을 신청했다(본지 6월9일자 참조).

적법 요구하다 불법체포·감금

이번 사건들에 있어 경찰은 공통적으로 △수상한 거동이나 주변상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검문의 요건이 결여

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검문을 벌였으며 △검문시 경찰 신분과 이름, 검문목적 등을 밝히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고 △강제로 연행해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행 후 의무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란다원칙을 알린 바도 없었다.

이번 사건의 신청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신청인에 대해 행한 불법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동안의 불법감금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인들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을 자행한 경찰들의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당연히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자 금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9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1년이 지난 재소자에 한해서 귀휴조치가 가능하다'는 행형법 44조 규정에 따라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천지들은 검찰(담당검사 경주지청 백성근 검사)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7년 한림대 부총학생회장인 김희경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

속돼 1년 가까이 복역중이며, 지난 8·15특사 때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해 사면에서 제외된 바 있다.

10일 장례를 치르는 김 씨의 천지들은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 중이다.

### 인권하루소식을 E-mail로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팩스나 우편뿐 아니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통신으로도 배달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으로 E-mail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농성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농성을 중단하고 명동성당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장기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태완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8·15 특별사면 때 가석방된 김태완 씨는 함께 출소한 정선(경기만려) 씨와 함께 9월 24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김태완 씨에게 경고장이 발송되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 오세철 전관)는 마포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 경찰, 박정기 씨 소환 조사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정기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족 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월 용산경찰서는 박정기 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사실과 관련, 특수진조물집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박 씨를 돌려보냈다.

### '영남위사건' 편파 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을 '김정일 추종 주사파'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

### <기자수첩> 영파여중 파문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

최근 피시통신에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는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들과 청소년 폭력 문제를 사실적인 영상과 언어로 그렸다"는 호평을 받고, 지난 9월 청소년 영상 페스티벌(KBS,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 영화다. 그런데 최근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을 학교가 탄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통신상에서 이를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한창인 것이다.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다. 영파여중 방송반 학생들은 지난 8월 20일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저녁 8시경 귀가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음날 교무실로 불려가 느닷없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게 된다. "학생들이 밤 11시에야 나갔으며, 학교에 불이 날 뻔했다"는 수위 아저씨의 '허위보고'와 소품으로 쓰였던 맥주캔과 담배를 근거로 교장과 교감이 "누가 담배를 피웠냐?" "누가 시켰냐?"며 학생들에게 없는 잘못을 반성하도록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수위 아저씨의 보고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번엔 영화의 제작을 위한 방송반 캠프활동과 영화 시나리오가 도마에 올랐다. 학교측은 이른바 '문제아들'을 연기자로 출연시킨 것도 잘못이라고 몰아갔고, 연기를 했던 학생의 학부모들에게까지 찾아가 "말 안 들으면 안양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기를 했던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방송반 애들에게 이용당한 거야"라며 방송반 학생들과 연기자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비교육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학교당국의 행태에 교사들이 반발하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사과 △특별활동 보장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이 이제까지의 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제의한 것을 교사들이 받아들이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일로 흥역을 앓았던 영파여중 방송반 담당교사 김종현 선생님에겐 최근 통신상에서 벌어지는 뒤늦은 성도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고 한다. 미진하게나마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지난 한달여 간의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야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인 학생들에게도 아픔은 마찬가지다.

영파여중의 교사와 학생들은 교사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학생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교육의 현실이 변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문 게재를 결정했다. 월간조선 9월호는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 아래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영남위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속자와 가족들은 9월 30일 월간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되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11일 이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3일(화)  
제 12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 고문·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관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한성기·오정은·장석중 씨 등 이른바 '북풍 3인방'에 대한 '고문 의혹'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명백한 고문의 증거가 있다"며 총격요청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관련내용 아래 상자).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선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적인 언급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문 의혹에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경우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사실 규명부터 이뤄져야 하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번 의혹이 과거 각종 고문사건의 가해자였던 구여권(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만큼,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부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 정권부터 안기부가 고문을 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우선 과거 정치공작과 고문행위에 대해 반성·사죄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과거 고문의 당사자였고 밝혀진 고문행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고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반성부터 요구하는 주장 외에 "고문 의혹만큼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특히 "고문 의혹을 규명하되, 그것이 총격요청사건의 진실을 찾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주된 지적이었다.

"고문 의혹 충분히 밝혀야"

김승환 전북대 교수(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

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반인륜범죄인 고문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실인 경우 관련자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규선 민가협 총무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범죄행위든 고문수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총격요청사건 역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두 사건을 구분해서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고문 의혹과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각각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의 개혁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한성기 씨 등 이번 사건의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씨의 경우,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일간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씨의 아내 이기호 씨는 "10월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때, 구치소 직원과 검사실 직원 등의 감시로 인해 안부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허벅지에서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많이 부어 있었으며, 양쪽무릎 부위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8월 17일 경찰에 구속될 당시부터 2개월 가까이 안기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인 학대와 심한 구타로 인해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씨의 아내 김은옥 씨는 △9월 14일 안기부 면회시, 목앞둘레에 넓게 붉은 상처가 있었고 △9월 16일 안기부 면회시, 입술 양쪽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보였으며 △9월 30일 검찰청 면회시, 다리가 휘청일 정도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10월 2일 한나라당 변호인 면회시, 남편이 "수사과정에서 목을 수차례 조이고 가슴과 뺨 등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점들을 들어 남편의 고문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장석중 씨는 9월 5일-7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를 받음 잠을 못 잔 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씨의 아내 김은옥 씨는 "9월 9일 장석중 씨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며 △얼굴의 푸른색 멍 △다리에 손바닥 2배 크기의 진보라색 멍 △팔에 손바닥 크기의 열은 보라색 멍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 “국보법 폐지”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국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대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응답자 총 825명 중 71.76% (592명)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7.03% (223명)가 ‘존속해야 한다’, 그리고 1.21% (10명)가 무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등 모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 논리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 8·15 사면을 기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관련, 절반 가까운 대학생(48.48%)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전체의 26.91%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 .....주요 공판 안내

- ▶ 10월 13일 (화)
  - 김정현 외8 (영남위 사건)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 ▶ 10월 14일 (수)
  - 조은호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 10월 15일 (목)
  - 서준식 (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유덕상 외5 (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 10월 16일 (금)
  - 문규현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신건
  - 박경순 외5 (영남위 사건)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 조건수 (집시법 등) 오전 11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 주간/인/권/호/름

(98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 9월 28일 (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 (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제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9개 시중은행, 인원의 32% 감원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9천여명 일자리 잃게 돼/전교조 관련, 인천·경기 지역 해직교사 16명, 교육청 직장 대처로 복지 안돼

◆ 9월 30일 (수) 국경없는의사회, ‘북한 당국이 인도적 차원의 주민 접촉과 지원 의료품 배급 감시를 거부해 의료지원팀을 철수시켰다’고 밝혀

◆ 10월 1일 (목) 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 (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명으로, 내년상반기엔 47만7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나라당,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 씨들이 인기부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

◆ 10월 6일 (화)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보고서 발표하고 앞으로 1년간 미국의 인권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민주당·평화개혁 등 일본 야당,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

◆ 10월 7일 (수) 인천 시내 약수터 4곳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주)신세계백화점 노조결성

◆ 10월 8일 (목) 경찰청 확대간부회의, 경찰의 총기발사대상을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으로 제한키로/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연행중 놓친 절도용의자를 공포탄과 실탄 5발 쏘 검거/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복지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97년말 3137명에서 올 6월말에는 3353명으로 늘어나

◆ 10월 9일 (금) 대학생 5명, 불법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 (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 과잉진압·최루탄난사 불법

###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87년 6월항쟁 시위 도중 의문사한 이태춘 씨(당시 27세, 회사원)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6일만에 사망했다. 당시 이 씨의 직접 사인은 ‘뇌좌상’이었고 이 씨의 오른쪽 이마 윗부분에서 정수리를 거쳐 20센티미터 이상의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의 죽음에 대해 경찰은 ‘단순추락사’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 등은 △이 씨의 온몸에 최루탄 가루가 묻었던 점 △이 씨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최...최...’라는 말을 하려 애

썼던 점 △추락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의 다른 부분에 일체의 의상이나 골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과잉진압’ 또는 ‘직격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오버브릿지 시위’는 6월항쟁 중 부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으며,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다연발탄과 최루탄을 난사하며 체포조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하였던 오버브릿지는 시위대원이 경찰의 체포조 투입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최루탄의 난사로 감각을 상실하여 눈

###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약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위원회는 강령이나 규약, 복과의 연계사실도 없

을 일시적으로 못 뜨게 된다든지 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라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아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함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울산지구 합동추모사업회도 “이번 선고를 통해 이태춘 씨가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의문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합동추모사업회와 유가족 등은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으며, 경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연 씨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경찰이 박경순 씨 부부의 집을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순 씨 가정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9명에 대한 검찰 신문만으로 밤 9시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부산지법 합의2부)는 24일(토)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지정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이 없었던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끊이지 않는 강제철거가 철거지역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경,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철거용역 6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이날 철거에는 포크레인 2대와 덩크트럭 등이 동원돼 공사(빈집) 6채가 순식간에 철거됐고,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이 강제철거를 저지하던 주민들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자비한 강제철거는 전철연(한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들과 학생들의 지원투쟁으로 이날 오후 5시경 일단 중단됐으나, 주민들은 "겨울이 오기전 철거를 끝내기 위해 곧 다시 들이닥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날 강제철거가 진행된 오전동 8동 일대는 아파트 건설허가가 나기 전까지 영세가구공장과 상가, 영세 세입자들이 한데 어울려 살던 서민들의 삶터였다. 이들의 평화가 깨진 것은 지난해 난데없이 철거 통지서가 날아들면 서부터였다.

이에 철거민 대표들은 당시 시장 신창현 씨를 면담해, 아파트 건설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 한번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을 비판했다. 또 대표들은 "철거대상이 된 영세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생각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신 시장은 이에 대해 "시차원의 대책은 없다"며 "이는 건설업

체와 해결할 문제"라고 잘라 말해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그후 오전동 지역은 강제철거의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이 지역 철거용역을 맡은 정원특수는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의왕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측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와 강제철거를 방관하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용역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자, 결국 47가구 중 40가구는 이주대책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지역을 떠났다.

한편 지난 11일의 강제철거는 철거계

고장도 없이, 14일 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특히 현 강상섭 의왕시장은 오전동 철대위 1기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철거를 방치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현재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단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47구는 지난 3월 이후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데다 밀가루 음식과 라면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민 박지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주비 1~2백만원 받고 나가면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고, 그곳에서도 시간이 지나 개발이 시작되면 또 철거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아예 강제철거를 뿌리뽑아야 자식들 대 가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2. 판단

피고 소속의 경찰 등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위대와 경찰 등이 대처하였던 오버브릿지는 원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위 지점에 집결하여 있던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조 투입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최루탄의 난사로 감각을 상실하여 눈을 일시적으로 못뜨게 된다든지 한다면 고가도로의 좌우 난간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어서 경찰 등은 이러한 위험을 예상하고 이와 같은 곳에 서는 시위의 과도한 진압 및 최루탄의 발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에도 위 시위진압에 임한 경찰 등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지점에서 최루탄과 다연발탄을 시위군중의 머리 가까이 의 높이에서 터지도록 발사하는 한편 갑자기 체포조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이태춘이 최루가스를 뒤집어쓰고 이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시위대가 도망가는 혼란 중에 오버브릿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 인권하루소식을 E-mail로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팩스나 우편뿐 아니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통신으로도 배달할 예정입니다(구독료 1만원 동일). 컴퓨터 통신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으로 E-mail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5일(목)

제 12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형찬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서울 신당동의 후배차취방에서 수배자를 찾던 안기부원 5명에 의해 불법 연행됐으며,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파출소와 경기도경 공안분실 등에서 고문을 당하다 분신을 기도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성명미상의 안기부원들을 상대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안기부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안기부측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김 씨가 안기부원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씨의 주장 외에 고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소송대리인인 김철준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점은 인정되지만, 안기부측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기부측이 담당하게 수사관들의 신원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은 허공을 상대로 한 재판과 같았다"고 평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고문은 보통 밀실에서 이뤄지고 가능하면 증거를 안 남기는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을 잡기가 어렵다"며 "김형찬 씨 경우는 스스로 분신까지 한 정황으로 볼 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법원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소송대리인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 '98 민중대회 열린다

####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노동자, 농민, 빈민 등 IMF 체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민중'이란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준), 전국연합, 민교협 등 60여개 사회단체들이 11월 8일 '98 민중대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8 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및 민중 10대 요구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98 민중대회의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족한 '98민중대회위원회는 "제벌·정치권에 대한 개혁은 거의 진척이 없다"고 정부의 개혁실종을 비판하

며, 경제파탄의 책임자인 제벌총수와 부패 정치인, 비리 관료의 척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좌초된 정부의 제벌개혁과 관련, "제벌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진정한 제벌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대회 위원회는 또 "제벌 총수와 정치인, 관료들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 민중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며 노동자·학생들에 대한 마구잡이 구속을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예전보다 강경한 어조로 "경제파탄의 주범인 제벌총수, 비리정치인 및 관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구기득권 세력과의 일전을 벌이는 동시에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사이비 개혁과도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대회 위원회는 11월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열릴 민중대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각계 민중 10만 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벌총수·정치인·관료의 처벌과 부정축재재산 환수 △부당한 IMF 협약 철폐 △고용실업대책 마련 △교육 개혁 실현 △노동부채해결 △빈민문제 해소 등 민중 생존권적 요구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중대회 위원회는 10대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는 IMF 체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각계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집약한 내용이다.

**오늘부터 만평은  
매주 목요일자에 실립니다.  
목요일자에 실리던  
행사와 동정은 날짜를 옮겨  
토요일자에 실립니다.**

###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지난 주 경주교도소에서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가족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교화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재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외출(외박)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귀휴)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 기간 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의 귀휴시행규칙은 '누진계급이 3급 이상인 자(기결 재소자의 50% 정도)에 대해 △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귀휴 시행조치 있으나...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년 이상 복역한 재소자들도 귀휴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형행규정이 교도소측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귀휴를 허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마땅히 귀휴를 허락해야 하지만, 재소자가 도주를 했을 경우 받게 될 문책과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만 명이 넘는 전국의 재소자 가운데 귀휴 조치를 받는 재소자는 1년에 2백 명 정도이며, 그

나마 형기를 거의 마친 재소자들이 귀휴 대상이 된다고 교정 관계자는 말했다.

일선 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제도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례가 있다고 해서 외출을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교도소 문제와 관련, 경주지청의 담당 검사는 "형집행정지 처분을 통해 장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 상론 어려운 일이었다"며 "모든 문제를 형집행정지로 해결하기 보다 형법을 손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력형 재소자들과 일반 재소자들 간의 형평에 대한 시비도 불식시켜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촬영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와 전화 감청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된 박경순 씨의 집 맞은 편에서 3년 가까이 박 씨의 집을 촬영했으며, 촬영된 화면엔 박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6일(금)  
제 12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곧바로 '제수감'을 경고하며 농성중단을 요구한 외에도, 또다른 농성자인 정선 씨를 연행하려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 농성중인 정선 씨를 만나고 돌아가던 정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명동성당 길목에서 검문을 받았다. 전경들이 이들 일행의 차를 세우고, 여동생 정은 씨의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다. 전경들은 신분증 확인 뒤, "정선이 아니고 정은이네"라고 실망한 투로 말하더니, 그래도 조화를 해보야 한다며 정선 씨 가족의 귀가를 계속 막았다. 전경들은 "이미 차량 번호를 확보하고 있었고,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며 10여분이 흐른 후에야 이들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아버지 정재순 씨는 "당시 전경들의 검문태도를 미뤄볼 때, 선이를 연행하려는 것 같았다"며 "연행 뒤 농성을 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선 씨는 8·15특사 때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이미 잔여형기가 만료된 상황이나, 당

국은 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연행을 시도하는 당국의 대응은 준법서약제를 '은전'이 아닌 '족쇄'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민권공대위 기자회견

한편, 준법서약 철회 요구 명동성당 농성과 관련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1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변정수 전 대법관, 김종맹 한총련 학부모협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권공대위는 또 최근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계사 수배자 농성단에 대한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민권보장과 민주개혁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내걸고 김대중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8대 요구안은 △준법서약서 철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민주기본권 보장 등이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매주 토요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세계인권선언지지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조계사에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 결의대회',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명동 문화제, 31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민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김양무 (48·범민련 부의장) 씨가 직장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양무 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구치소(수번호 196번)에서 안양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정밀검사 끝에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또 담당의사는 김 씨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94년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95년 11월, 97년 9월 등 모두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97년 안기부 조사 당시엔 7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심각히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은 "김양무 씨는 시급히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국은 수감상태인 김양무 씨를 담당 석방하고 직장암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고문 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다하"고 주장했다.

#### 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오늘 오전 10시부터  
곳: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법무부 등

###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먹어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해보라'며 담당했던 것도 고용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은 사법처리라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임금체불 시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와 불법체

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숫자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위기의 여파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도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각국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갖고 "한

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동조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믿고 있다"며 "한총련 스스로 과거의 오류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포용력을 가지고 이를 지켜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엔 한총련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도 참석해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마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학부모협의회는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씨의 25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25주기 추모식을 갖고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기로 했다. 이번 추모식은 최승화 서울대 총장권한대행과 이수성 평통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김유성 서울대 법대학장,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인사들의 추모사가 있을 예정이다.

최종길 교수는 73년 10월 16일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협조를 받고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한 뒤, 19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협의를 자백한 뒤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사건에 대한 의혹은 국내외로 번져갔다. 이후 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88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 PC통신 '조선일보' 난리 불매·폐간 서명운동 확산

조선일보 불매 및 폐간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PC통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참세상 등의 토론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들어 하이텔에서만 3백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가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최근 '이승복 논쟁'을 비롯한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와 친일자태, 정권 찬양기사 등이 알려지면서 확산되어 왔다.

현재 피시통신 토론방에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발전에 해를 끼친 조선일보는 폐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쓰레기는 치워야..." "수구기득권세력으로부터 달콤한 과실을 얻어 배를 불린 대표적 수구기득권 반민주신문" "조선일보의 목에 개혁의 칼날을 박아...처참하게 그들을 KILL해야" "조선일보는 사회 3대악 중의 하나" 등 원색적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잘못된 과거를 사과할 줄 알고 새로운 길을 가는 조선일보를 보고싶다"는 격려의 글과 "안보면 될 거 아닌가...엔 쓰잘데 없는 서명운동이냐"며 서명운동을 비판하는 글 등도 토론방에 올라오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17일(토)

제 12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치국민회의와 언론 등도 국민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용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외면한 채 기존의 인권법 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고집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과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는 "인권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국민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틈새를 보충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틈새론'을 들먹이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 앵무새처럼 종전 주장 되풀이

이러한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 8명의 지정토론자들이 나와 국민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병주 검사(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는 "이미 현행법이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법은 국제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과 함께 '틈새론'을 적극 옹호했다. 또 김성남 변호사(경실련 중앙위 의장)도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설

치될 경우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측 주장을 지지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시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법무부 주장 곳곳에서 반박

반면 조용환 변호사, 과노현 교수(방송대), 홍성필 교수(이화여대), 문준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국제법제실장) 등은 법무부의 틈새론 등을 적극 비판하며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과노현 교수는 "법무부 안은 국민의 안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나홀로 법안'에 불과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법안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수법인 형태로는 한국사회에서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권한과 관련, 법무부측은 "인권위원회는 도덕성에 기반한 기구인 만큼 시정권고권만으로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홍성필 교수는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권한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걸 왜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으로 일축하며 "인권위원회엔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는 문제 또한 공방의 대상이 됐다.

먼저 오병주 검사는 "인권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정치단체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단체가 추천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인권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임명절차를 투명화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논리로 법무부장관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또한 오 검사가 "국가기구로 설치할 경우 업무가 중복된다"고 주장하자, 조용환 변호사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면 업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냐"며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이날 법무부측의 주장은 곳곳에서 반박을 당했다.

□ 2면으로 이어짐

###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수가협)를 결성했다.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현재 조계사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정치수배자 7명이 6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 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진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 ▶ <인권법>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조용환 변호사, 문준조 박사 등은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에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며 '인권법'이라는 명칭을 '국민인권위 설치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법무부가 적극 수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무근 검사는 "이미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공청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법무부 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진 뒤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며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며 공안당국의 자의적 법적용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취득소지 혐의로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10월 30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 ▶ 최후진술 요지 3면

##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지난 8월 전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잡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

### □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때: 10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주최: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문의: 747-8219 김문영)

### □ 시민단체 실무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때: 10월 23일(금) 오후 2시-6시 / 24일(토) 오전 9시 30분- 1시 30분  
·곳: 삼보컴퓨터 서대문 교육장  
·교육내용: 편집홍보교육/인터넷 전문교육 ·수강료: 1만원  
·문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763-9563, 742-0190/ 김응도 간사)

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사 봉헌에 있었고, 일정에 없던 통일대축전 참석은 방북사제단 일행 모두의 고민이었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신부는 모두진술을 통해 "재판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무너져 버린 데 따른 통탄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내용과 관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번 방북과 관련 모든 것을 함께 논의했고,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관계당국에 알렸다"며 문 신부가 애초에 통일대축전에 참석할 의도를 품고 방북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문 신부는 "사제단의 행적을 미행·도청하고, 자진해서 제출한 자료 중 일부 팩스 내용의 누락을 의도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등 공안당국이 비이성적·반역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문 과정에서 하 검사는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 방문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행은 90도 각도로 질렀다"는 등 자의적 느낌에 근거한 발언을 해 방청객의 빈축을 샀다. 또 사제단 일행이 통일대축전 참석 여부를 모두 함께 논의했다는 대목과 관련,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말해보라고 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엔 2백여 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참여해, 이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시간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한 변호인 반대 신문은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행사와 동정

##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강기웅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 모 심문관은 "안민청, 부민노청, 시민청 등 산하단체들을 다 조사했고, 96년부터 3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공작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자료의 20%를 확보했고, 그 가운데 20%를 범죄증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 진보민청의 문건 가운데 4%를 가지고 우리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보민청 활동 전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우리가 주장해온 '반자본·노동자중심·반보수'는 상식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활동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확대시키려는 활동이었다. 만일 진보민청에 이적규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이며, 온 국민에게 이적규정을 내리는 것이다.

▶ 오재영 : 감옥에 구금된 4개월 동안 진보민청이 과연 적을 이롭게 한 단체인가 고민해 왔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모두 문서들이다. 문서만 가지고 '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진보민청의 모든 활동이 이적행위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해온 무료법률상담, 지역신문 제작, 문맹퇴치사업 등을 무시하고 문서 가운데 일부 과격한 내용을 찌집기 해 '이적' 규정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적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서민들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왔다.

▶ 정종권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과연 우리사회에 자본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50년만의 정권교체라고 한다. 그러나, 교체란 서로 다른 것 사이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에 다른 정치가 존재하는가? 보수·수구만 존재하고 진보·혁신이 뿌리채 잘려나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유의미성을 인정하고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주류와 소수의 사상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권교체를 보고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간헐 진보민청의 현실과 IMF 아래 민중의 고통을 보면서, 여전히 반노동자·반민중적 재벌과 정권을 보면서 희망을 접었다. 자본의 정치에서 노동의 정치로 진정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 김경윤 :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이상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성의 내용이 될지언정 처벌의 내용은 되지 않는다.

'제3의 길'을 논한 기든스 교수가 최근 내한했다. 이 영국의 노학자는 치사대접을 받았지만, 역시 '제3의 길'을 모색중인 진보민청은 재판을 받고 있다. 사상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김봉태 : 조금 과격한 회원이 있으면 어떤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이 있으면 어떤가. 그 입을 틀어막고 읊어야 하는 것인가? 진보민청 안에

선 사상의 자유와 글을 쓸 자유가 있다. 다만 의정으로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시대에 역류하는 이번 재판에 분노한다. 역사의 방향은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극우공안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의 알량한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내가 정생활을 몇 년간 도청해온 홍제동 대공분실의 수사관들도 역겹다. 극우공안세력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남아 있는 것은 치욕이다.

진보민청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홍제동 수사관은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지만,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항의하면서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률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정권초기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때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해방·인간해방이라는 감령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한 학자는 노동해방을 사회주의로, 인간해방을 공산주의로 등치시킨 도식을 그려놓았다. 마르크스가 인간해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제 인간해방은 전 세계 진보진영의 이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유럽 시민주의와 전 세계 진보진영 모두를 공산주의로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나의 사상을 고백할까 한다. 나는 마르크스와 레닌, 모택동의 저서를 보았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깨달았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주의가 노동자들에 의해 되돌려지는 것도 보았다. 자본주의의 극복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아직 구체적 상을 못찾고 있지만, '노동자와 함께 하는 진보주의'가 내 사상이다. 이 사상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다. 유죄가 선고된다 해도 진보민청은 없어지지 않는다. 독거방에 가두고 수갑을 채운다 해도 사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인 새로운 판례가 나오길 기대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0일(화)

제 12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지난 17일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98 노동자문화제가 경찰의 원천봉쇄와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연행으로 파행을 겪었다. 또 문화제 원천봉쇄에 항의하던 학생들 여럿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 입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대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자문화제는 IMF 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업·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자 기획된 평화적인 문화행사였다.

그러나 17일 노동자문화제가 예정되었던 서울대학교 주변엔 이른 오전부터 18개 중대 2천여 명의 전투경찰이 곳곳에 배치됐다. 검문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자문화제 준비를 위해 들어오던 조명 차량과 발전설비 차량이 정문 앞에서 관악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성주 정책부장도 행사 준비물을 싣고 들어오던 중 역시 연행되었다. 이처럼 행사 진행을 위한 기재들마저 압류돼 행사 자체가 축소·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관악경찰서를 항의방문했으나 전경들에 의해 번번이 제지당했다. 오후 4시경 학생들과 노동자 15명이 찾아갔을 때, '긴급사태'라는 사내방송과 함께 경찰 1백여 명이 항의방문단을 에워싸 격렬한 비난을 샀다.

이밖에도 전경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에 항의하던 학생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 자연대 박미연 씨는 곤봉에 입을 맞아

11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문화제는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긴 밤 10시경 악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관악경찰서에 연행됐던 사람들은 장시간의 불법구금 끝에 밤 11시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진보진영 결집에 국민반응"

한편 이날 이뤄진 원천봉쇄에 대해 경찰은 학교측의 '시설보호 요청'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 또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이번 행사를 학장단 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던 서울대 대학본부가 행사 바로 전

날인 16일 저녁 갑작스레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 점은 이러한 주장을 감하게 뒷받침한다. 또한 관악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던 점도 '원천봉쇄'라는 조치가 단지 학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부채질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발표, "집회도 아닌, 문화제에 대한 탄압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며 더구나 "행사 진행요원과 물품운반 차량과 기사를 10시간 이상 불법 구금하고, 항의하는 노동자·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의 불법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오는 11월 8일의 '민중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에 대해 국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문화제에 대한 탄압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교육부가 오는 12월 10일 공포하겠다고 발표한 '학생인권선언'과 관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인권선언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일선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학생인권선언문은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확한 인식을 학교에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문 제정은 국가적 수준의 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위에 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해 선언문에 이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반조치가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포일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언문 제정을 위한 제정위원회조차 발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같은 선언문 제정 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준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적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명호 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하지만 가입여부와 시기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첫째 국가보안법은 낡은 구시대적 잔재로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현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고, 둘째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국가보안법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 박경순 씨 또한 국가보안법이 반인간적인 악법임을 강조했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람들을 사상의 불구, 체제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을 24시간 카메라로 밀착감시했고, 조사과정에선 부부 싸움의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조롱하고 인간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중 이은미 씨는 스스로 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재판정에 나타났다. 이 씨는 만성 디스크 환자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본인과 가족들은 외부 병원치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9일 이 씨의 가족들은 구치소의 의무주임을 만나 치료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우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오는 21일 이 씨를 직접 진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공판 안내

- ▶ 10월 20일(화) ·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 10월 21일(수) ·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 10월 22일(목) ·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단독, 속행
  - ▶ 10월 23일(금) · 황윤미(국보법) 오전 11시, 519호, 5단독, 속행
- 이상 서울지방법원

## 주간/인권/호/름

(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87년 6월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울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직·인권침해 공방

◆ 10월 14일(수)

청와대, 민관합동 부패방지대책협의회 구성키로/범민련 부의장 김양무 씨, 직장암 판정 받고 옥중 암투병/노동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키로/민주노총, 전농 등 60여개 사회단체, 11월 8일 민중대회 개최키로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98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 10월 15일(목)

안기부, 판문점 우려시위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풍' 진상조사 착수키로/프랑스 고교생, '교육환경 개선' 요구 25만명 시위/외국인 노동자들,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는 동료 노동자 주검 찾아/국감자료, 수사기관 전화감청 급증/「민중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대위」,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 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 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질도법, 경찰 쓴 총에 숨겨/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영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광주지검 특수부, 교육비리 폭로한 초등학교 전직 직원 정경범 씨를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석방/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조계사에서 결성식 가져

◆ 10월 17일(토)

최종길 교수 25주기 추모식, 진상규명운동 본격화/전국 실업단체연석회의,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개최

◆ 10월 18일(일)

노동부, 7월말 현재 남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1백54만여 원인 데 반해 여성노동자 임금총액은 99만여 원이라고 밝혀



인권 시평

#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지난 11일, 일요일 저녁이었다. 맘껏 편안한 자세로 쾅쾅 TV 뉴스를 보다가 별케 일어나 앉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하여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공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을 학생지도 지침으로 삼는 한편 위반하는 교사나 학생 등은 가중 처벌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을 강조하는 교과서 내용도 개정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구속력이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벌써 10월 중순인데 12월 10일에 공포하겠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일까?' 선언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들은 곧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탄식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다. 학생인권선언의 기본 내용을 알아보려 <인권하루소식>은 교육부에 문의해 보았다. 우리 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몇 번 겪은 뒤에야 학생인권선언 담당자와 연결되었다. 그의 답변은 아직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의 내용은 현실점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선언이 제정된다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여론환기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제정위원회를 발족한다 하더라도 작업시간은 겨우 한 달밖에 없다. 그 짧은 시간에 처벌과 지도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만들 수 있다니 의욕이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나라 학생의 인권상황에 대해 질적으론나 양적으론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한 선상에서 논의를 출발했는지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한 달 동안에 기적을 이루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 발짝 물러나, 아주 대단한 열의가

있으니 시간은 그리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한달 안에 선언을 기초해야 할 소위 '제정위원회'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학생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학생의 의견이 수렴될 여지가 있는지, 학부모와 일선교사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이 전혀 검증이 안된 채 누가 됐든지 열심히 선언을 기초하라고 독려하면 되는 것인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누가 만들던 내용만 알차면 된다고 치자. 그러나 내용이 아무리 알차다 할지라도 선언은 선언일 뿐이다. 교육부는 선언을 위반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선언'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상식이 아닌가? 학생을 권리의 주인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자 교사의 지도와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법 조항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전혀 썩먹지 않으면서 '선언'을 들고 나온다면 그 선언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학생인권선언의 기본적 내용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하긴 어렵지만, 신문과 방송 보도에서 언급한 '학교폭력과 교사체벌, 성차별'을 주요하게 다루는 선언이라면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언의 제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푸대접받고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존재이다. 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5대 원칙의 '24년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을 시작으로 7대 원칙의 48년 선언, 10대 원칙의 59년 선언을 거치는 동안에 변화되어 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담고 있다. 즉, 아동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 선언이었다면 아동이 권리의 주인이라는 원칙 위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 약속이 조약이 되었다. 이 조약은 인류가 인권에 대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총결산하여 제정한 세계최대의 국제인권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1년 12월 20일에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에 대해 교육해야 할 뿐더러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적·제도적·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당국의 노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96년 한국 정부에 제시한 32개항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알아보고자 작년 어린이날을 기해 필자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계 부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정부대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조속한 조치를 약속한 사항조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한다니 다시 묻고 싶다. 이 조약을 일선학교에 제대로 보급하려는 노력을 한 일이 있는지 그 흔한 교사연수에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 일이 있는지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 난데없이 학생인권선언을 제정한다는 발상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꺾어 맞추는 한판 시늉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 정작 권리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할까?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지 않을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1일(수)

제 12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의 과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저녁에도 절도미수용의자인 이승재 씨가 실탄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씨가 각목을 던지는 등 저항을 했기에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나 당시 피의자가 등을 보인 자세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총기사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중학교 3학년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뒤쫓던 경찰이 쓴 총탄에 왼쪽 등을 맞고 숨진 바 있다. 이는 "조준 시 대퇴부 이하"라는 '총기사용안전수칙'마저 어긴 것이었다. 또 최근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숨진 이들 모두 이렇다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급증한 것은 경찰이 지난 달 서울에 나타난 탈옥수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뒤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즉 '공포탄 2발을 발사한 뒤 실탄 3발을 발사'하도록 돼 있던 총기사용수칙을 '공포탄 1발을 쏜 후 바로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바꿨던 것.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총기사용 건수는 2백79건으로 '9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총기사용 건수인 2백95건에 거의 육박했다. 특히 총기사용수칙이 개정된 뒤인 8월 한달 동안 무려 51건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사용 남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경찰은 "실탄사격훈련 등을 강화해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권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한, 경찰력 남용이나 총기사고 등 불상사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권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

표, '범죄 용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간에 경찰의 총기사용이라는 즉결처분에 의해 죽어 가야할 민중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총기사용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경찰의 신성한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총기사용의 요건과 함께,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권협은 22일 목요일 12시 서대문 경찰청 정문 차도 건너편 인도 상에서 '경찰 총기남용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1백여명 연행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의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라엔드라 드브라이 씨와 스테파니 바스티암 씨가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 중 연행됐다. 이날 집회에선 이들 외에도 1만 여명의 참석자 중 1백32명 가량이 더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때리고, 밟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마저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 중 14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반대 그룹인 짐(Jemmah Islam Malaysia)의 대표 하지 씨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지난 14일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에 대해 그동안 국내외 비판의 표적이 돼온 보안법 위반 혐의를 취소하고 부패 및 호모행위 혐의를 새로 적용해 일반감옥에 재수감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이러한 당국의 조치가 오는 11월 1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에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선 대규모 '보안법 철폐' 집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안와르 이브라힘을 포함한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의 즉각 석방 △유엔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인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실는다(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리시겠나?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법무부는 호주의 예를 들어 법인형태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호주의 '법인 개념'은 한국과 다르다. 호주의 법인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공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식의 법인형태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호주의 경우 법인이 라고 해도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이사회구조를 갖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법무부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들

으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문 :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재정과 인력을 많이 요하는 국가기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이유로도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 :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면 그 정도의 투자는 당연한 것이다. 투자에 비해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창출해낼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하나의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유사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일한 기구는 필요하다. 모든 인권문제는 상호불가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가운데 모범적인 모델이 있나?

답 :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인권기구가 독립성과 권한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처럼 새롭게 인권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일단 허약한 인권기구를 강화시키는 일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유가협, 김 대통령 면담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

20일 오전 배은심 회장을 비롯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대표단과 이창복(범추위 의장), 이해동 목

사(유가협 후원회 회장) 등 8명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통령 부부와 정무수석, 공보수석 대리 등이 참석해 유가협 대표단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 대표단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열사·희생자 묘역 설치 △열사 기념관 설립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은 이같은 김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김대통령의 과거청산 약속의 진위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구속집행정지 허가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직장암 수인 김양무(48·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본지 10월 16일자 참조).

김 씨는 지난 8월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 판정을 받아, 사법당국은 김 씨에게 한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직장암 수술을 위해 21일 삼성의료원에 입원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2일(목)

제 12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해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중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97년 5월 29일 고시 관련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대 근처 신림동에 들렀다가 이튿날 대구로 내려가던 길에 서울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서울역에서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벌

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법원의 양식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이러한 불법체포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스러워 한 김 씨는 "이번 판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장 아무개 씨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이어 또다시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앞으로 경찰의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 서울대·연세대생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역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 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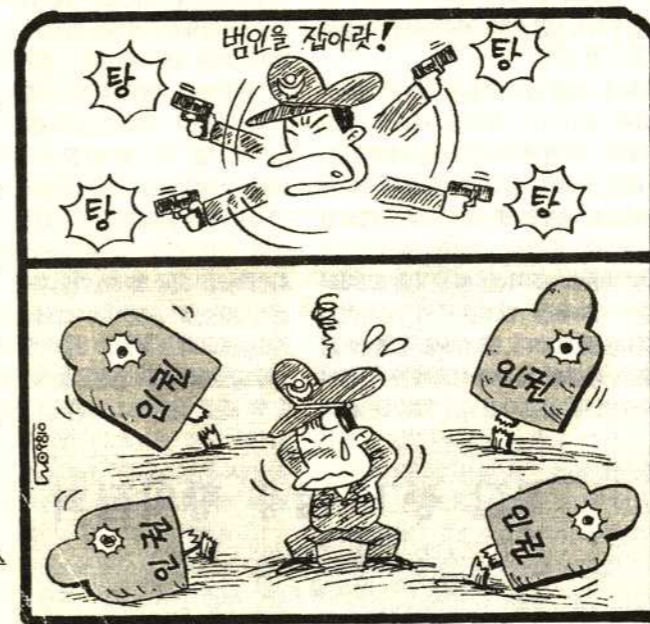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 외 1명도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전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은 드문 일로 사회가 조금은 변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옥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청의 대상이 돼 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도청·감청의 문제가 이전 정권서부터 지속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여당과 야당간의 정치공방으로 협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2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청·감청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영장에 의한 도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기관이 저질러 온 잘못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열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 되려 비밀침해

이러한 열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백승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도청의 법제와 실제'라는 글을 통해, "제정취지와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법원이 이를 제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청 뿐 아니라 불법 도청 또한 매년 밝혀지는 것만 수십 건에 달하고, 출소 장기수집이나 노동영구소 등에서 심심치 않게 도청기가 발견되는 등 아직도 불법적인 도청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로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아무리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의 통신감시체제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음을 솔직

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법원의 감청영장제한 및 기간 명시 △불법도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재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도록 제한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관련 법에 감청의 목적과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한국통신은 이번 주부터 지난 7.15과업 주동자 60여 명과 관련자 6천여 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징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측의 징계조치에 대해 "핵심 노조 간부들을 대거 정리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주장하는 신노사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조 길들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민주노총의 가장 큰 사업장인 한국통신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한국통신은 노사정합의를 통해 △7·15 파업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 △파업관련 가담자 징계 최소화 △노사정 합의 최대한 존중 △해고자 복지 7·31까지 이행완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에 합의하고 일부 해고자를 복지시킨 바 있다.

### 경찰 총기 남용 항의집회

- 때 : 10월 22일(목) 오후 12시
- 곳 : 경찰청 앞 삼도빌딩 앞 인도 (서대문서 옆)
-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청서 요지 2면).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률"이라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1·3·5항 및 제8조(회합·통신등)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범민련 사무처장인 민경우(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씨의 항소심 변론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시절부터 여러차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소수의견을 내는 등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 이미 95년 1월 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 박태범 부

재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으나, 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1월 13일 서준식 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신청된 바 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한 변정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가져야만 국가를 지킬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사고는 예정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외근직 경찰들은 매년 4차례의 하반신 표적사격 훈련을 받고 있으나 훈련대상이 고정표적뿐이어서 도주하는 용의자를 향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사고발생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8년 10월 23일(금)

제 12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또한 경찰이 매년 받고 있는 사격훈련량 -외근직 경찰은 38구경 권총으로 6차례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한 번에 35발씩 1년에 2백10발, 내근직은 정기사격 2차례 70발-은 인명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격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백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해도 2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통계에 따르면 총기사용 경찰의 8할이 20대의 젊은 경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대해 인권협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검거를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총기남용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인권협은 총기남용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총기사용수칙 마련 △집중적인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가스총, 고무탄, 전자총 등의 대체무기 사용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권교육 등의 실시를 요구했다.

인권협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총기를 남용해 사고를 일으킨 경찰 11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화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같은 동포애이며 대화, 협상의 상대방인 이북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 즉 '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을 왕대하면 처벌한다. 이북정권 아래서 일하는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하고도 만나거나 통신연락을 하면 처벌한다. 그들과 금품을 주고받아도 처벌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관중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칭찬하거나 그에 동조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북과의 대화, 협상, 교류, 우호친선 그리고 마땅히 자유로워야 할 평화적 통일운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민족의 영구분단과 이산 그리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법이므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

2.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검사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8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선언 되어야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형벌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그 구성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고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나, 아니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나,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내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이다. <중략>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국민에 의한 정치'이자 '여론에 의한 정치'인 민주정치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은 모두 의사표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을 과하는 규

정이면서도 앞서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성요건이 너무 애매하여 명확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할뿐더러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논리 위에 북한에 이로운 수 있는 의사표현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이건 아닌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 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후략>

1998. 10. 21  
변호사 변정수

#### ☞ <고용보험> 1면에서

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용보험이 중소·영세사업장 실질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2백만에 달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나 무등록업체 노동자, 의류·제화·인쇄·요식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의 단서조항 폐지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0-2백10일에서 최소한 90-3백일로 연장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보험법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의 최준영 조직부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월 17-2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냐"며 "지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 먹고 살 생계비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la.net/~rights

1998년 10월 24일(토)

제 12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SI, 법무부 인권법 비판

###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 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엠네스티(AI)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약체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개척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른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경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적해 온 문제점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싸네 총장은 또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권위원회는 청렴성과 중립성,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에 등록된 인권단체들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모금의 권리를 부

여한 조항과 관련, 싸네 총장은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12월 10일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열망을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법안의 내용"이라며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위원회를 설립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인권기구의 설립에 감화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울·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최근 「월간조선」이 최장집 대통령지문정체기회위원장의 역사관을 문제삼고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의 광신적 폭력'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는 이미 여러차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하는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우 씨는 지난 여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우 씨는 「월간조선」 9월호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현(울산동구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 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며 경찰추장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이후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에 재소됐고, 「월간조선」은 결국 이번 11월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호에서는 '송두울(재독일 천북학자)은 과연 김철수(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가?'라는 기사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 씨는 이 기사에서 "송두울 교수는 김철수란 가명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충격증언을 검증'한다고 밝혔지만, "김일성 장례식 때 북한 국가장의위원회 초청을 받았다"는 등 송 교수의 천북 성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을 뿐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

한편 황장엽 씨의 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송 교수는 황장엽 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월간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98년 1월호에서 우 씨는 이장희 교수(외국어대)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란 책의 이적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기사로 다루면서, 주제와 무관한 북한 중앙방송의 논평 내용에 기사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새 세대를 통일의 길로 선도하는 교재"라고 평가한 북한 중앙방송을 인용해,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은근히 힘을 실어줬던 것이다.

#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이 엘 허프(25)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67년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FA규정은 △검찰의 상소권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감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의 2%, 97년엔 7%만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평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을 비롯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공군비행장 헌병대앞 쓰레기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백여장이 발견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속적인 집회와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이 이미 지난 3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않자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재판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미군측은 지난 8월 임기가 끝나는 허프 병장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한국정부

에 재판 포기 요청을 해왔다"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낸 재판부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사무국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미군범죄 처벌에 있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현재 허프 병장은 SOFA규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평택미군기지에 머물고 있으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프 병장이 지난 8월 근무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허프 병장의 본국 귀국을 막기위한 구속이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4월 13일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 리 씨가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해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도주한 바 있다.

### 오늘의 행사

-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실천추진을 위한 캠페인
  - 때: 10월 24일(토) 오후 2시
  - 곳: 종로2가 탑골공원 - 종로3가 종묘공원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전화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
  - 때: 10월 24일(토) 오후 6시
  - 곳: 명동성당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 때: 10월 24일(토) 낮 12시
  - 곳: 용산구청 앞 ·주최: 전철연 등

### <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

준법서약제 철폐를 요구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5일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학번) 씨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농성단에 합류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송 씨가 농성에 합류한 이유를 들어왔다(편집자주).

- 먼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이미 '재수감' 경고장이 날라왔다. 재수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가
- 재수감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내 양심을 접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또 구속중인 양심수들의 문제는 더더욱 큰 부담이었다. 다른 활동들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농성투쟁을 통해 양심수와 준법서약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다.
-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와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까닭은
- 대의보다는 개인적 이유(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출소하고 나서 많은 후회를 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상실했다. 철저히 싸우면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싶었다. 나 뿐 아니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많은 양심수들이 마음에 무언가 걸리고 멍멍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변절행위라고 보는가
- 변절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희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준법서약을 제출했다더라도 자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담보되면 더욱 현명한 삶이 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7일(화)  
제 12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서의 면회 결과 외부로 알려졌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동서 씨는 지난 13일 반말을 하는 교도관에게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교도관이 자신의 목살을 쥔 채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과거 수술을 받았던 턱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된 김 씨는 14일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소장에게 면담 요청 보고전을 제출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날, 이를 보고 받은 보안과장은 김 씨를 불러 단식을 풀고 사건을 조용히 끝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가 "이처럼 은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안과장의 제안을 거부하자, 바로 조사방(먹방)에 5일 간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같은 사동에 수감 중이던 장전섭, 표주원 씨도 김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과장의 면담을 요청하다 16일 역시 조사방에 감금됐다.

20일 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김 씨 등 3명에 대한 징벌위원회가 열렸으나, 이들에겐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경고 조치를 주는 것으로 징벌위원회가 마무리됐다.

현재 김 씨는 폭행 사건에 대한 소장의 사과와 시정, 턱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부와의 면회가 이뤄졌던 24일까지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성계,

###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전회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국무부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용환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혜수 회장은 "여성인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특위가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기구의 상호관계에 대해선 "여성특위에 접수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도 포함되게 해 인권피해자가 두 기구 중

자유롭게 한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국무부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만들 때, 다른 국가 기관들과 역할이 중복되어 서로간에 권한분할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의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밖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제수사권부여, 독자적 재정확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기존의 생각과 변함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 지원 △재단법인 설립 △시회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전에 미리 제도권·기득권 층의 조건을 따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기득권층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한 곳에!

<http://www.jinbo.net/~freedom/hurights>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국가인권기구공추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추위 주요 문서 ▲법무부 인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정부자료 ▲법무부안에 대한 분석·반박 글을 모은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최근 공추위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진보네트워크 소속 인콰네트워크에서 디자인과 기술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질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를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이 지역 외에도 도원동, 전농 3동, 수원 권선 4지구 등,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이익, 돈의 논리가 언제나 재개발 사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들에게 대한 주택공급 등 원래 목적은 찾기 어렵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 외곽의 더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개발 투기로 인해 인근 일대의 토지와 땅 값이 급등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받은 보증금으로 근처에 다시 방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가 돼 버리는 탓이다.

이와 관련, 이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며 “재개발 사업시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금 정산해서 주되, 개발 이후 집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원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꼽는다. 순환식 개발이란 “재개발 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 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해 재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거주민들에게 ‘선대책 후철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 고영주 사무총장 실명 선고

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노동관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1심에서 3년이 구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과업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 주간/인/권/호/름

(9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 ◆ 10월 19일 (월)

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노숙자 5백87명 상대로 상담한 결과, 기존 노숙자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급속산업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2발을 맞고 숨겨

#### ◆ 10월 20일 (화)

김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에 대해 청와대와 당에 협조 지시/올 들어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서울고법 형사3부,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 ◆ 10월 21일 (수)

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종기 판사,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권을 통보하지 않은 채 청구한 영장에 대해 환송 결정/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의, <월간조선>에서 거론한 최장집 교수의 사상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기로/8·15특사로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 10월 22일 (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 원화와 달리 위조한 미군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대우자동차·한국전력 등 48곳에서 산업재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 ◆ 10월 23일 (금)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 10월 25일 (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 군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중태/통계청, 8월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 24만9천여 명 늘어난데 비해 상용 노동자는 6만7천명 줄었다고 발표/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지난 4월 현재 하급당 학생수가 50명을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 20만6천5백60 학급 가운데 10.9%인 2만 2천4백88개로 나타나/문화관광부, ‘새로운 청소년현장’ 선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8일(수)

제 12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명호 씨는 “지난 7월 29일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을 발로 차고 머리를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씨도 “하루종일 조사를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수사관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고문을 당해야 사실대로 볼겠다’라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재판을 받은 김창현 씨도 “조사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털어냈다.

한편 허리 디스크 환자인 이은미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본지 10월 20일자 참조). 지난 21일 이 씨를 진찰한 바 있는 부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 김영준 씨는 “현재 이 씨의 상태로는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조차 위험하다. 지금은 가만히 누워 자세를 교정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인의협에서 제조한 약을 먹으며 근근이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내용, 사실과 달라 24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정대연, 김창현 씨 등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영남위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반재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심리를 펼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반재청년동맹과 영남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박경순 씨와의 회합 사실을 반국가단체활동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박경순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회합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오후 3시와 14일 오전 10시에 계속된다.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채택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청·감청 자료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와 조작가능성이 높은 디스켓에 대한 증거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 …인권간행물

####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러한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 『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문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다.

조시현 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의) 남용을 조장하는 법률이 될지 인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보장책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규정하며,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자료집 『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낸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앞으로 불법도청 및 감청에 의한 인권침해 반대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입문의: 723-4255)

김영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영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담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우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였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

므로, 위 안기부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북한을 고무 찬양할 목적으로 컴퓨터 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원고를 체포하였다면, 그 행위는 직무집행권한 외의 체포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를 현행범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당시 시행되던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 필요성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체포행위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이를 일컬어 임의동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참조).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관련 범죄혐의자를 추적중이던 안기부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위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중략) 위와 같은 근거에 기해 담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돈 1천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원고청구 기각 부분

다만 담원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나 원고의 진술만에 터잡은 내용으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이 안기부 직원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것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 93년 미군 마클 이병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 씨 외에 목이 잘린 채 살해됐던 이기순 씨, 미군 남편에게 두 자녀와 함께 난자 당한 김분임 씨, 미 군속 남편에게 구타당해 숨진 강운경 씨, 미 군속 아들에게 살해당한 조중필 씨, 살해·방화된 채 발견된 허주연 씨 등 미군범죄 희생자 8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8명의 영혼을 부르기 위한 초혼제에 이어 진행된 ‘다만, 이 땅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추모연에서는 지난 때문에 기지촌으로 들어가 억압당하고 짓밟히다가 끝내는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기지촌 여성의 모습을 사실감있게 그려내 모인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 대통령의 공식사과 △한미 양국의 미군범죄방지 대책마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29일(목)

제 12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차별이 에이즈 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우리 사회 소수자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AIDS) 감염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은 ‘에이즈감염인의 인권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4차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에이즈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 관련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원영 교수(연세대 의대)는 “94년 4백13명이었던 에이즈 감염자가 4년만에 8백44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에이즈확산을 막기 위해선 감염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감염자를 위한 공평한 의료기회 확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감염자 사생활 보호와 편견방지법의 법체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에이즈예방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에이즈검사”라며 미확인 감염자들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익명 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 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법령제정에 있어서 아직 감염되지 않는 국민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에이즈감염자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이즈감염자인 우영범 씨가 나와 감염자로서 사회에서 겪었던 차별, 낙인, 보건소 직원의 감시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 씨는 △감염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에이즈감염자를 위한 재사회화 교육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보건소 직원의 의식 전환 등을 역설했다.

전노운협 이적혐의 벗어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 혐의’를 벗었다.

28일 전노운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초 이용석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적용시효(7년)가 지났다”며 원심으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88년 결성된 전노운협은 95년 11월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됐으며, 이에 따라 김영곤 의장 등 3명이 구속됐고, 이후 수배중이던 이용석 씨가 지난해 2월, 박승호 씨가 지난 8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김영곤 씨 등이 96년 4월 1심에서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한 면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용석 씨 역시 1·2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

았다. 그러나 검찰은 “전노운협이 90년 새로운 강령을 가지고 결성되었다”며 면소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열린 박승호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였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박승호 씨는 “형식적으로는 면소판결이긴 하나 그동안 법원에서 이적단체 혐의에 무죄를 내린 전례가 없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전노운협의 이적혐의를 벗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및 양심수 석방 운동 △준법서약제 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법민권,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 및 진보활동 보장 운동 △민중 생존권보장 운동 △도청·감청 및 우편검열 반대운동과 보안수사대 직권남용 사례 법적대응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가협, 부산철거민연합,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영남위사건’ 대책모임, 부경총련, 부산경남지역합동추모사업회, 부산민주청년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구독료 내셨습니까?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지난 9월부터 대학마다 대학본부 및 총장실에 대한 점거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학교마다 줄속 구조조정이 추진되자, 이에 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새벽에도 인하대 학생들이 '99년 학부제 시행 유보와 학생권,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2층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학부제냐? 학과제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그보다 "교육내용과 학사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숭실대, 한신대, 고려대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이 진행된 바 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내용과 학사 행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줄속으로 추진되는 데는 교육부의 대학별 차등지원 방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올해 구조조정 항목(30%)을 '98 교육개혁 우수대학재정지원사업'(2백억)과 '자구노력지원사업'(4백50억)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허겁지겁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됐던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데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이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대학본부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데 이어, 고려대 학생들 또한 8일간의 점거 농성 끝에 지난 22일 학부제 소위원회 건설, 강의 개설권, 감사 추천권 등에 대한 학교 당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고려대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라는 취지 아래 장애우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수화과목 제정, 여성학 과목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

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은 대학을 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지식을 통해 인류의 자유·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악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울 상반기 명예퇴직한 은행원 가운

데 86.3%가 여성노동자라고 밝혀, 은행권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민우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일 사이 재직여성노동자 8백8명과 여성실업자 3백84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기혼·40대·중졸이하 학력·장기근속·비정규직의 경우 퇴직을 종용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퇴직여성들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로 재고용함으로써 은행여성들의 고용조건을 매우 후퇴시키고 있다고 여성민우회는 비판했다.

## 오리는 해고자 연행

충북 청주 오리온프리토투레이(주)의 해고노동자 윤태영 씨 등 지역 노동자 6명이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윤 씨 등은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 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30일(금)

제 12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 대인지뢰 발 ... 잃어버린 삶터

최근 육군본부 국감에서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지대는 992km<sup>2</sup>, 여의도 면적의 3백34배에 이른다"고 밝혀 놀라움을 던진 바 있다. 이는 휴전선 접경지역 어느 곳도 대인지뢰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줬던 것이다.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섬, 백령도 역시 대인지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백령도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 74년 이래로 대인지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백령도 주민의 수는 7명에 달한다.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여섯 명은 모두 지뢰 폭발과 함께 즉사했다. 발목 지뢰도 아닌 살상용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백령도에 지뢰가 매설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이던 74년, 새로운 부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고 사람들은 전한다.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군대는 해안선을 따라 대인지뢰를 매설했고, 그 범위는 물과 가까운 바다서부터 바다와 가까운 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그 뒤 대인지뢰에 대한 공포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지뢰를 매설해놓고 관리가 소홀히 됐던 탓이었다.

76년 오봉빈, 오봉일 형제가 낚시하러 갔다가 지뢰를 밟고 즉사한 이래, 산에 나무 열매를 따러갔던 김준호 씨, 80년 소에 풀 먹이러 갔던 서윤환 씨가 대인지뢰의 폭발로 사망했다. 92년엔 진촌리 해병대 초소 앞 야산에서 산나물을 캐러 가던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가 대인지뢰의 희생자가 되었다.

박신길 씨는 77년 바닷가를 거닐던 중 발목지뢰를 밟아 현재는 의족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군인들은 대인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다투게 알고 96년 각각 2천여 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인지뢰의 무서움을 익히 아는 백령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출태없는 것 못했다"고 말한다. 민간인·가족·훈련나는 군인들이 이유없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근이 제한돼 과거에 술술한 수입을 가져다 주던 소라, 굴 등을 따는 일 또한 이젠 꿈도 못 꿀 일이다. 생활반경이 좁아진 것은 물론이다. 대인지뢰로 인한 이웃의 죽음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대인지뢰지역 근처는 밀착감치서부터 피해야 한다. 군에선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지뢰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하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 한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백령도 실태조사에 참가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고동실 간사는 "몰려있는 대인지뢰는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더이상 대인지뢰를 만들 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 “양심수 처우 악화” 주장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이 29일부터 3일간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오는 31일,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선포한 '양심수 석방의 날'을 맞이해 전국 교도소의 양심수들과 연대해 준법서약서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있었던 '의정부 양심수 폭행·부당징벌사건'(본지 10월 27일자 참조)과 8·15이후 양심수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당국에 대한 규탄 농성으로 성격이 바뀐다.

농성단측은 "지난 8·15이후 양심수에 대한 처우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얼마전 있었던 의정부 교도소 사건도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할 정부가 이제와서 양심수들을 흉악범 다루듯 억압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뚝

겨울철을 앞두고 또다시 재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시도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오전 8시 수원 권선4지구 재개발지역에서는 시공업체와 철거용역회사 직원 40여 명이 몰려와 강제철거를 시도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권선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태희 씨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철거용역회사인 동우환경개발 소속 직원 20여 명과 시공업체 성우건설 직원 20여 명이 공사(빈집) 4채를 철거했으며, 오후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생가에 대해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생가 철거를 제지하던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최덕자(의왕시 오전동 철거대책위원장) 씨가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전태희 위원장은 "용역장패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전경 2백여 명이 외곽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권력의 비호 아래 강제철거가 저질러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평상시 용역직원들이 계속 지역순찰을 돌며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고, 이날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차량 2대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권선4지구에는 현재 세입자와 가옥주 약 1백여 세대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19세대는 7개월여 동안 철거반대 투쟁을 강렬히 전개하고 있다.

## 학생인권선언 제대로!

교육부 비판·제안 잇따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준비없이 올 12월 10일 학생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에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제정취지와 과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컴퓨터통신에는 교육부 방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학생인권선언'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청소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참여기획단」은 "학생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에 민간단체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참여기획단은 "학생인권선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활상의 요구와 자치활동의 요구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선언이 실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고등 학생복지회」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선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1차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와 동정

- IMF 시대 주거기본법 제정촉구 시민대회
  - 때: 10월 30일(금) 오전 10시
  -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장기신용은행 앞
  -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3673-3031~3)
-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
  - 때: 10월 30일(금) 오후 4시-5시
  - 곳: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앞
  - 주최: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후원의 밤
  - 때: 10월 31일(토) 오후 1시-11시(공연: 오후 4시-6시30분)
  - 곳: 한양대학교 상경대 앞 잔디밭
  -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동제 공연
  - 때: 10월 31일(토) 오후 7시
  - 곳: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
  -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 참여사회연구소 제6차 심포지엄 "재벌개혁: 왜, 어떻게, 누가?"
  - 때: 10월 31일(토) 오후 2시-5시
  - 곳: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참여사회연구소(문의: 최영주 723-9581)
- 긴급토론회: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 때: 11월 2일(월) 오후 2시
  - 곳: 언론연구원 강의실(프레스센터 12층)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 반미자주의 햇볕 이철규 열사 9주기 추모식
  - 때: 11월 4일(수) 낮 12시
  - 곳: 이철규 열사 추모비 앞
  - 주최: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 IMF시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 / 주거기본법 입법 추진 위원회 결성식 및 리셉션
  - 때: 11월 6일(금) 오후 1시-6시 / 저녁 6시 15분-8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 국회 후생관
  - 주최: 한국 도시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저소득 아동생활지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사회복지' 토론회
  - 때: 11월 6일(금) 오전 10시-오후 1시
  - 곳: 대한성공회 대강당(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하차)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문의: 273-953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8년 10월 31일(토)

제 1240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동절기(11월부터) 진입을 앞두고 재개발지역의 강제철거가 잇따르고 있다. 동절기엔 강제철거가 허용되지 않는 까닭에 10월말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려는 건설회사측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수원 권선4지구에서 강제철거가 시도된 데 이어(본지 10월 30일자 참조), 30일 오전 7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잠든 틈을 타 전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동 재개발지역을 덮친 철거용역회사(정원특수건설) 소속 직원들은 잠자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3대의 포크레인을 동원해 2시간만에 철거를 완료했다. 그러나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철거민들이 용역원에게 구타를 당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부녀자들도 필름을 빼앗긴 채 용역원들에 의해 거칠게 떠밀려 타박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민 박 씨는 용역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용역원들이 들어낸 가재도구를 사진 촬영하던 도중 필름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 용역원 6, 7명에게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원 한 명이 가슴을 주물러댔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어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동 강제철거에 대해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은 "의왕시청은 지난 14일 있었던 주민과의 협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거를 진행했다"며 시당국을 강렬하게 비난했다.

오전동 주민들은 철거가 끝난 뒤 전철연 회원 및 대학생 1백여 명과 함께 의왕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였으며 강상섭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강상섭 시장은 오전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1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민들은 더 큰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강 시장은 이날 저녁 주민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중인 임대주택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수용시설 설치는 건설회사(동서주택)측과 협의한 뒤 다음주 중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잡자리가 없는 주민들이 철거지역 내에 천막을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민측은 밝혔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시청 내로 진입했던 최덕자 철거대책위원장은 전투경찰과 시청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심신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주거연합·전철연 연대투쟁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여의도에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와 평화대행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기우 신부(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가난한 대중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실업의 고통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

다"며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과 집없는 설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준비위원회 의장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도시민민들에 대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집회엔 또 하나의 주거 관련 단체인 전국철거민연합의 남경남 의장도 참석, 도시빈민 간의 굳건한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남 의장은 "과거엔 주거연합과 전철연이 함께 투쟁에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기본법 초안을 마련한 주거연합과 한국도시연구소는 여론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에겐 징역 2년, 김영윤 부의장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오재영·유영주·정종걸·강기웅 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증거물에 비춰볼 때,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진보민청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인권하루소식> 98년 10월분 총목차(1221-124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21	10/1	1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구생원', 사후처리 유감/행사와 동정
		2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여성노동자, 3차 집회 개최 - 비정규직 악용 사례 등 보고
1222	10/2	1	"재수감 두렵지 않다" - 당국 입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재수감 입력 중단 요구 - 민권공대위
		2	무너지는 대학 자치 -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 지켜/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1223	10/8	1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압/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태지역 아동미술경연대회/안민청 유죄 선고 -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2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1224	10/9	1	전후보상·차별철폐 숙원 - 재일동포, 기대·우려 교차/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신세계에 노조 설립 - 삼성에 파급여부 관심/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1225	10/10	1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전투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2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기자수첩) 영파여중 파문 - '너희가 중단을 아느냐/경찰, 박정기 씨 소환 조사 -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영남위사진' 편 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기로
1226	10/13	1	"한나라당 반성은 없다" - 교문·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교문의혹
		2	"국보법 폐지" 의견 72% -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주요 공판 안내/주간인권호름(9월 28일 - 10월 11일)
1227	10/14	1	과잉진압·최루탄 난사 불법 -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2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관결문 요약>이태춘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228	10/15	1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98 민중대회 열린다 - 민중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2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 '영남위'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촬영/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 범민족대회 공연 협의
1229	10/16	1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2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PC통신 '조선일보' 난리 - 불매·폐간 서명운동 확산/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요구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최종길 씨 의문사 규명 촉구 -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1230	10/17	1	법무부, 인권법 일방추진 시사 - 각계 비판 외면한 채 법무부 시안 고집/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 정치수배 해제 촉구
		2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행사와 동정
		3	<요약>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98년 10월분 총목차(1221-1240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231	10/20	1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2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 씨 건강 악화/주요 공판 안내/주간인권호름(10월 12일-10월 18일)
		3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1232	10/21	1	사람잡는 총기사용 남발 -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2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유가협, 김 대통령 면담 -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직장암 수인 김양무 씨 - 구속집행정지 허가
1233	10/22	1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해소송 승소/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2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1234	10/23	1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보법 위헌제정 신청/총기사용 이제 그만 - 인권법, 경찰청 앞 시위/고용보험 빈틈 많다 -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2	<요약> 사건 98교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1235	10/24	1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 송두울·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2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 "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오늘의 행사
1236	10/27	1	폭행에 항의하자 먹방 감금 -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광고>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
		2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질실 - 1가구 1주택 정책 정착돼야/고영주 사무총장 실형 선고 - 민주당총, '보복성 판결' 주장/주간인권호름(10월 19일 - 10월 25일)
1237	10/28	1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인권간행물 소개 - '불법도청 '합법' 감청'
		2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억울하게 죽어간 딸들이여" -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1238	10/29	1	차별이 에이즈 확산 부른다 -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전노련 이적혐의 벗어 - 대법원 '면소판결' 확정/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 운동 -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2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결혼임신퇴직제 부활" -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오리온 해고자 연행
1239	10/30	1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 대인지뢰 발 ... 잃어버린 삶터/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 "양심수 처우 악화" 주장
		2	강제철거 되풀이, 주민·용역 충돌 - 수원 권선4지구 강제철거 말뚝/학생인권선언 제대로! - 교육부 비판·제안 잇따라/행사와 동정
1240	10/31	1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싸늘이,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지역 강제철거/주거기본법 제정촉구, 주거연합·전철연 연대투쟁/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2·3	인권하루소식 98년 10월분 총목차(1221-1240호)